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100044-10

www.mois.go.kr

2024 행정안전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TENTS

목차

PART

I

총론

PART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제1절	촉촉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18
1.	중앙·지방 협력 강화	18
2.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지원	24
3.	해양 영토의 지킴이, 국경섬 지원 강화	26
4.	메가시티 등 미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29
제2절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34
1.	기업이전 지원 및 지역-기업 상생협업	34
2.	지방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38
3.	빈집 정비 추진	43
4.	특별자치시·도 특례 추가 발굴 및 성과분석	48
5.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발굴 및 제도화	52
6.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55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및 운영	59
8.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61
9.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65
10.	지역특성 기반 특화발전 제도 마련	69
제3절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72
1.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 재정립 추진방향	72
2.	지자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지원	74
3.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재무건전성 강화	78
4.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양사무 관리	81
5.	지자체 기금·특별회계 성과평가 내실화	85
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89
7.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및 관리 분석·진단제도 운영	92

PART

III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제1절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100
1. 지자체 CCTV의 AI 기반 지능형 관제 고도화	100
2.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03
제2절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107
1. READY Korea 훈련 실시	107
2. 행동 위주의 실전적 민방위 훈련 실시	112
3.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확대 지원	116
4. 민방위·재난대피시설 공동활용	121
제3절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124
1.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정비	124
2.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128
3. 112·119 산불·산사태 신고정보 산림청 공유	131
제4절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135
1. 국민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문화활동 강화	135
2.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140
3. 승강기 안전수준 강화	141
4. 안전신문고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	146

PART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제1절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152
1.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가속화	152
2.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	156
3. 정보시스템 및 장애 등급제 전면 개편	159
4. 통합 거버넌스 기반 장애관리체계 구축	162
5.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폐합	166

CONTENTS

목차

제2절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69

1. 구비서류 제로화	169
2.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172
3. 민간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	174
4.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178
5. 정부 통합인증(Any-ID) 구축	182
6. 모바일 신분증 확대	186
7.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190
8. 디지털지갑 서비스 구현	195
9.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현	198
10.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200

제3절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203

1.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정원 운영	203
2. AI 자동회의록 도입	206
3. 공공데이터 패키지·통합 제공	210
4.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고도화 구축	213

PART

V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제1절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220

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220
2. 지역금융 협력모델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224
3.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228
4.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추진	231
5. 출생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추진	236

제2절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240

1.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개선	240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개선	243

PART

VI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제1절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248
1. 범국민 나눔운동(‘온기나눔’) 추진	248
2. 자원봉사 활성화	251
3.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문화 확산	254
제2절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257
1. 제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	257
2.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262
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265

PART

VII

정부운영 지원

제1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270
1. 국경일 행사 거행	270
2. 국가상징 선양	274
3. 정부포상 운영	279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청사관리	286
1. 정부청사 건축사업 기획 및 건립 추진	286
2. 도시숲 조성 및 옥상정원 관리	290
3.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294
4. 효율적인 업무공간 혁신	296
5. 스마트하고 편리한 정부청사	299
6. 상생·협력의 공무원직 노사문화 정착	306
7.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편의 서비스 제공	310
8.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316

CONTENTS

목차

제3절 디지털 기록관리 기반 확대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319

- | | |
|-----------------------------|-----|
| 1.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구축 | 319 |
| 2.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및 관리 | 321 |
| 3.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및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 325 |

제4절 최고의 법과학 서비스 제공 329

PART

VIII

부록

- | | |
|----------------|-----|
| 1. 기능·기구·정원·연혁 | 340 |
| 2. 전국 행정구역 | 365 |
| 3. 예산 현황 | 367 |
| 4. 행정안전부 법령 현황 | 372 |



PART

I

총론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회의체로 2024년에 3회 개최되었다. 교육·의료 분야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4대 특구 등 지역발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2024년에 9회 개최되었다. 중앙정부 주요 정책의 지역 확산, 지방정부 건의사항의 수렴 및 조정, 재난안전과 지역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접경지역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타 지역보다 발전이 늦어졌다. 최근에는 지역소멸과 군부대 이전·해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24년 대표적인 사업은 소양호 수변 수상레저단지 등 관광거점 조성과 한탄강 지질자원권역 개발사업 등이 있다. 앞으로도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3,390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한 다도해 국가이며, 이 중 480개의 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이다. 행안부는 지리적 단절로 인해 낙후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24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민대피시설,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이어갈 제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96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앞으로도 육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수도권 집중·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3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던 현재 행정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24년 5월에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간 통합과 초광역 연계협력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형태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여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권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으로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등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제품을 출시하였다. 아울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정비 TF팀'을 구성해 전국 최초로 빈집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정보 제공과 활용을 유도하는 '빈집愛(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을 균형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분야에서 26건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례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5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5조 원을 투자하였다.

아울러,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했으며,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정 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2023년에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켜 충북 등 중부내륙권의 특화 발전을 위해 힘썼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역 기업·주민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규제를 집중 개선하였다. 산업·환경·고용 등 중앙부처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준조세 개선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규제 정비도 독려했다.

'생활인구' 유입·체류 확대 정책에 발맞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중점 발굴·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고향올래(GO郷ALL來)' 사업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방문·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생활권 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일거리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24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존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지사협의회, 도교육감협의회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방에 이양되는 사무의 발굴부터 권한 이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2024부터 2026년까지 예정된 3단계에 걸친 시스템 구축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방 이양 발굴·의견수렴·심의절차 처리 등을 위한 기능이 구현되었다.

또한, 나라의 총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높아진 조직 운영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민·관 합동 자체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도록 목표 관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매월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회의 등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부채중점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성과 분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강화된 성과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전담 조직인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자치단체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

자치단체의 총조사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정비율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정부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파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특정 지역의 인파 밀집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활용했다. 즉,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의 인파 밀집도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주의 단계부터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CCTV 지속 증가와 관제요원 1인당 평균 477대의 감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CCTV 관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대책 및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대표과제로 채택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7년까지 AI 기반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실영상 기반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지자체 CCTV 영상을 비식별화하여 AI 학습용으로 수집·제공하고 있다. AI CCTV는 배회, 쓰러짐, 화재 등 위험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표준화 연구와 실증을 통해 성능과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상·기상·재난 데이터를 융합한 과학적 재난예측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정부·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중·복합 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역량 요구수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는 의례적·형식적 훈련에서 벗어나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신중·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READY Korea 훈련을 추진하였다. 2024년 총

4회에 걸친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향후에는 훈련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훈련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따라 재난 피해규모가 달라진다'는 현장 목소리를 발판 삼아 2024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재난사태 선포를 시·도지사도 관할구역 내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하였다. 2024년 9월 「재난안전법」 개정 이후 재난사태 선포권 확대에 따른 실효성 확보의 일환으로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단계,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록한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지침」을 마련하여 17개 시·도에 배포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전반적인 제도를 균형 있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동 위주의 실전적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재난 대피시설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민방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방위 활동이다. 만 20세에서 40세 남성을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민 참여형 콘텐츠 기반 훈련, 민간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조, 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전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피시설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대피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4년에는 주민 대피시설 공동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8,000여개소의 대피시설을 공동 활용 대피시설로 지정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가뭄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내실 있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향후에는 지자체 가뭄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산불, 산사태 발생 초기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도 개편하였다.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 산사태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민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였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종합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MZ 세대를 중심으로 안전 AI 경진대회와 어린이 안전 골든벨 등 다양한 안전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한바퀴’,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민·관 협업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하였다.

두 번째는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아 보도,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하여 전국 통학로 308개소에 약 1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250명에서 2024년 1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는 ‘승강기 안전수준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승강기는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 브레이크 등 안전 부품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안전 영상 송출과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정책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계절별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였다. 계절별 발생한 재난·안전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절별 신고 유형을 선정하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알림판, 지역 전광판, 알림톡,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집중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2024년 여름철의 경우 전년 대비 집중 신고가 19.9% 증가하여 홍보 효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빗물받이 막힘 등 풍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안전 강화에 기여하였다.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서비스가 행정 전반에 확산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2023년 11월 정부24, 주민센터 민원 업무 등이 중단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생활의 필수제가 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발생 원인 및 그간의 누적된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장애에 강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재도약하기 위해 장애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대책을 수립('24.1.)하고 추진하였다.

먼저, 디지털안전상황실과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하여 중요한 장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전파·대응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확산을 통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공공 서비스가 예기치 못한 수요 증가나 장애 발생 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정보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 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또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 대상·항목·주기 등을 제공하는 예방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행정·공공의 정보 시스템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관리하는 장애 관리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체제로 강화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범국가적 대응체제로 확대하는 등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시스템 통·폐합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더 빠르고 간편해야 하며, 정보는 반복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국민이 각종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반복적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신청 과정의 편리성을 대폭 높였으며,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생활 편의성 또한 향상시켰다. 또한, 범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기관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은 더 이상 어떤 기관과 포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신분증’도 국민 편의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실물 신분증에 의존하던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확인과 신원 증명이 가능해져 국민생활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또한, 공공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와 다양한 인증절차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통합인증 Any-ID’ 구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앱에 개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 맞춤형 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하여 공공 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는 구비서류에서 삭제하거나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행정기관에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급속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하여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협업별도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민생 과제를 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디지털 행정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부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했다. 그 중 연간 약 10만 건 이상 진행되는 정부 및 지자체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은 담당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들이 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자동 회의록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고 서로 다른 형태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방식은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도와 접근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공통 공공 데이터의 전국 단위 통합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 밀접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보유·제공하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범용성과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데이터 관리 정책 변화 및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 창구를 넘어 지능형 데이터 탐색·활용 중심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서비스 개시 이래 국내 최대 공공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공공데이터포털은 이용자 수요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I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 노후 인프라의 첨단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전면적 재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자체·지역금융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의계약 및 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였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빌라 등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액을 확대했다. 또한, 양육용 차량 취득세 감면을 2차녀 가구에도 적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온, 집중호우, 대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난 피해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에 비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하여,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혼선이 초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재난 피해자 중심의 복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피해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먼저, 재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주택 복구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향 등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 강화,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복구, 재난지역 피해주민 간접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으로 복구작업을 신속하게 시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위해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구호체계 개선과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재해구호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규모와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모든 재난에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의 총괄적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물품과 국민성금인 의연금·기부금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 심리회복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기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를 상실한 이재민들에게 단순히 일시 대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재민 중심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기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안전부는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자원봉사·기부활동을 공동의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고자 온기나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였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시기별 특성에 맞추어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였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장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마련되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4년 1월 공명선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명선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자 제작·배포, 사전투표지 보안조치 강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대내외 간 갈등과 대립을 극명하게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4년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행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국경일의 의미를 전달하고, 가치(value)·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정부 행사를 통해 국정 신뢰도 제고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 발간·배포와 다양한 계층에 태극기 및 리플릿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국가상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4년 정부 포상 및 시상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정부 포상과 시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민추천포상제도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공로자가 확대 발굴될 수 있도록 포스터, 전광판, 방송,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포함한 다단계 공적 검증과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서 정부청사의 건립과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그리고 입주기관 직원들의 복지까지 아우르며 국가행정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효율적인 청사 관리체계 고도화와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공간 혁신의 관점에서 정부지방합동청사의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업무공간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공간혁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방호인력 전문성 강화와 보안체계 개선,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숲 및 옥상정원 조성, 청사 내 보육·의료·급식 등 후생복지 인프라 확충은 입주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도 공공청사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록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선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 2023년 행정안전부에 시범 도입되고, 2024년에 중앙부처 48개 기관에 확대 적용되었다. 분산된 기록물 저장소를 통합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관 간 연계와 이관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검색 기능도 증점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을 개정하여 평가·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기록관리 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별 단위과제체제를 정비하고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평가·선별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록물의 적정 시점 이관과, 보존 가치를 반영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 이관·수집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누락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관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주로 하는 과학수사 중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사명 아래 과학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통보하는 감정 결과는 재판의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생명·자유·재산 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정관들은 매년 증가하는 감정량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등 여러 과학수사 부서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정확하게 감정 결과를 회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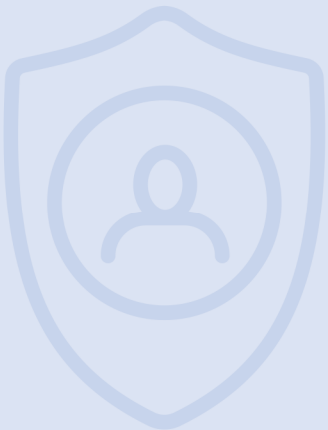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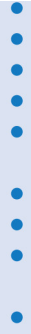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 분석기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 분야에 대한 분석기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형 법과학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왔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전용 실험공간을 갖춘 법공학동 개청을 통해 감정·연구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는 등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학수사를 한층 더 발전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행정안전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ART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제1절 **촉촉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1. 중앙·지방 협력 강화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고 재 표
자치행정과 주무관 전 용 근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창출하고,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지방 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 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중앙·지방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회의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15.6.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여 상시로 운영되는 협력체계이다. 협의회는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사항을 다루며,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심의·조정한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교육·의료 분야 협력 강화

2024년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의료 분야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 현장의 의견과 대응 상황을 청취하였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안건을 상정하여 늘봄학교 핵심 내용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안건을 통해 의료계 상황을 공유하고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림 2-1-1]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 2. 27.)



2)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 추진

2024년 7월 25일 충청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 상정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등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법무부가 시·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24.9.)하는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안건이 상정, 의결되었다. 전액 자체 재원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에서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정책 방향과 수단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2-1-2]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 7. 25.)



3)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발전방안 논의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4년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개최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로 논의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에서는 정부 주도로 지방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존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지방 주도의 자율형·분권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안건이 상정되면서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지역을 선정(’25.2.)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지방 인구감소 상황에서 빈집과 폐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관계 법령 정비, 행정절차

개선 등 효율적 정비·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25.4)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25.5)하였다.

이 외에도, 법제처에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 규율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 자율 운영 범위 적용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그림 2-1-3]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 11. 6.)



4) 중앙지방정책협의회

2024년에는 제1회부터 제9회까지 총 9차례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주요 정책의 지역 확산, 지방정부 건의사항의 수렴 및 조정, 재난안전과 지역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1.19.)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문제해결형 협업행정 확산 및 정책홍보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명절을 보다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회(2.7.)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과 연휴 기간 재난안전 관리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제3회(3.26.)에서는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을 공유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 준비 철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제4회(4.26.)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시도 및 중앙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찰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5회(6.11.)에서는 지역물가 관리 강화와 지방재정 신속 집행, 국가 및 지역 정원정책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자치단체에는 여름 휴가철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가격표시 등 공정한 상행위 유도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이 당부되었다. 정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순천만·태화강 국가정원 사례를 통해 정원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자원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정원문화 조성 노력을 제안하였다.

제6회(8.14.)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와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교육·도심융합·문화 특구) 추진 현황이 논의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과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 추진 등 인센티브 적극 활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7회(9.6.)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연휴 기간 안전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책임관 운영, 물가 점검체계 강화,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요청되었다. 아울러 화재,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이 강조되었다.

제8회(10.31.)에서는 경북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정책, 전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부산 원스톱 기업 지원 전담 공무원, 충북형 K-유학생 제도 등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활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인구감소와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함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운영을 소개하고, 지자체가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9회(12.3)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지역활력 제고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설·한파 대비 시설 점검, 재난 자재 확보,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이 요청되었고,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및 주민홍보 등 후속조치가 요구되었다.

[그림 2-1-4] 제8회 정책협의회('24.10.31.)

[그림 2-1-5] 제9회 정책협의회('24.12.3.)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도입되면서 중앙·지방 간 의사결정권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회의체가 제도화되고, 외국인 정책 등 지방이 요청한 안건이 상정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에 가치와 철학, 이익이 공유되는 민주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안건 상정, 생산적 토론, 면밀한 사후 관리 등 여러 노력을 통해 회의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중앙-지방 간 실무적 정책 협력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운영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2024년 총 9회에 걸쳐 재난안전, 물가 안정, 지방재정 집행,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과 조율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홍보 및 활용, 지역정원 추진사례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의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과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추진되었다. 향후에는 지역 의제 발굴 역량 확대 등을 통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정책 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지원

균형발전진흥과 과학기술서기관 김 언 호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접경지역은 한탄강·소양호 등 풍부한 수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선사시대 유적부터 한국전쟁 주요 전적지까지 한반도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물과도 같은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었다. 근래에는 인구감소·지역소멸 및 군부대 이전·해체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인 DMZ 및 한탄강 지질자원 등을 활용한 대표 관광지 개발·육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이후 14년간 3.7조 원을 투자하여 안보·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 내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군사·환경·수자원 등 중첩된 규제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접경지역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24년에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소양호 수변에 수상레저단지 등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트레킹·자전거길을 통해 춘천·양구 인제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소양호수권 거점개발사업’, 청정 자연생태와 다양한 지질학적 가치를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캠핑·트레킹·놀이공원 등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한탄강 지질자원권역 개발사업’, 백령도·신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기며 섬을 일주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등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원하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반영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당초 계획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하여 총 227개 사업에 10.5조 원(국비 5.3조 원, 지방비 2.6조 원, 민자 2.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추진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5.1조 원, 균형발전 기반 구축 1.5조 원,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7조 원,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계획 대비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남북분단 및 군사적 상황으로 피해를 받아왔으나 소외되었던 지자체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관광개발 연계사업(가평군과 춘천시 : 소양호수권역, 속초시와 고성군 : 동해안 해양 관광)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 2-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전략명	발전종합계획					2024년까지 투자실적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27	104,591	53,096	25,253	26,243	36,717	20,859	10,404	5,456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107	16,618	10,308	6,204	105	6,438	3,796	2,637	5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50	21,666	11,998	9,482	186	7,742	3,663	4,003	77
균형발전 기반 구축	40	33,517	8,596	4,511	20,410	9,692	2,348	1,970	5,374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30	51,173	25,985	4,658	20,530	12,846	11,052	1,794	0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법정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1년~30년)을 수립하고, 지난 14년간 관계 부처와 함께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잘 보존된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관광 자원화, 군부대 이전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군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해양 영토의 지킴이, 국경섬 지원 강화

균형발전진흥과 주무관 조 희 관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3,390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한 다도해 국가이다. 이 중 480개의 섬은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유인섬이다. 정부는 지리적 단절성으로 삶의 여건이 어려운 유인섬에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낙후된 생산 및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소득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선, 1986년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現 섬발전촉진법)을 기반으로 10인 이상 거주하는 유인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섬(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여 1988년부터 10년 주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후,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류 등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해양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외곽에 위치한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경수비대 역할을 수행하는 국경섬의 영토 지배력을 높여 해양 영토를 넓히고, 항로와 해양자원을 확보하며, 군사적 요청지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23년 국경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안되었고, 국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2023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였고,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위원회 대안으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안되었다.

2023년 12월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섬 주민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2024년 1월 18일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해기점을 포함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34개 섬을국토외곽 먼섬으로 새롭게 정의하였고,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율 인상 및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교통·에너지·문화·체육·복지 등 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라 지정된 34개의 국토외곽 먼섬 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직선기선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하여 영해 최전선에 위치한 섬 중에서 항로거리 50km 이상인 섬, 정기 여객선이 안 다니는 섬, 운항 빈도가 낮아 섬 접근성이 낮은 섬 등 총 9개 섬을 추가로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안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고 보조율 기준, 지원시설 추가 종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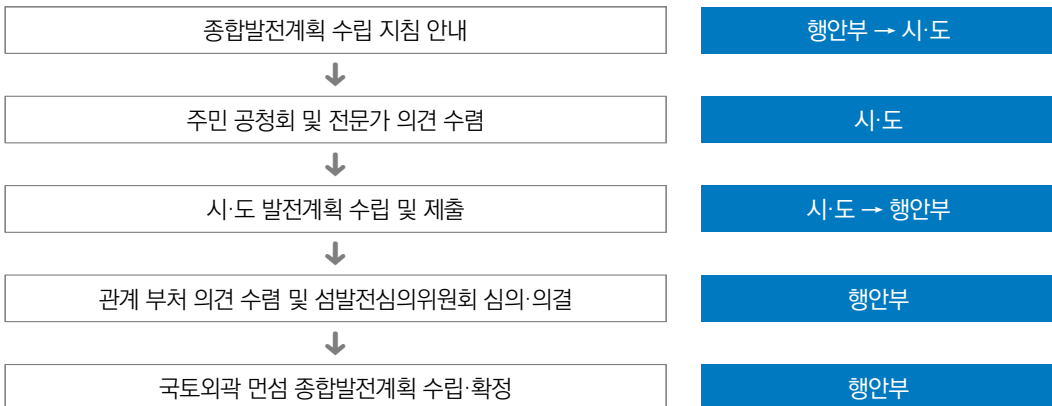
[표 2-1-2] 국토외곽 먼섬 현황

시·도	시·군	섬 이름
인천광역시	옹진군(5)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충청남도	보령시(1)	황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1)	어청도
	부안군(2)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라남도	여수시(3)	거문도, 동도, 서도
	진도군(6)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맹골도, 죽도(조도면), 곽도
	완도군(1)	여서도
	신안군(11)	홍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다물도, 가거도(소흑산도)
	영광군(4)	죽도, 안마도, 대석만도, 횡도
경상북도	울릉군(3)	울릉도, 독도, 죽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서귀포시(2)	가파도, 마라도

이후, 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시·도발전계획안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상향식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5월부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58개 사업, 2조 1,838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되었다.

[표 2-1-3]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절차



2)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2011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 종료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96개 사업, 1조 5,097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정주생활지원금도 2017년 5만 원에서 2025년 최대 18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2012년부터 시작된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24년까지 1,368동의 주택을 개·보수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외곽 섬 지역에 교통·보건·교육 등 정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부합하며, 올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졌다. 정부는 육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섬 지역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 관계 부처 등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는 등 섬 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메가시티 등 미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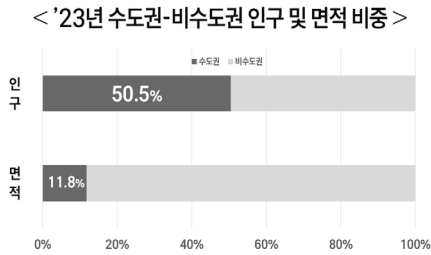
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 행정사무관 감 영 규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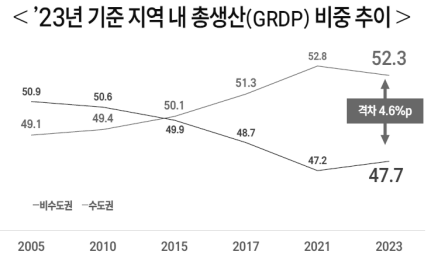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실현과 분권 강화를 목표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던 현행 행정체제로는 지역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총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수도권에는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수도권 일자리·경제력 집중으로 비수도권 지방세입 감소(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104개) 또한 심각하다.

[그림 2-1-6] 수도권 인구 밀집('23.)



[그림 2-1-7] 수도권 GRDP 집중('23.)



특히,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수요가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같은 사회환경 변화와 지방재정 양극화 현상,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현행 지방행정체제로는 대응·적응에 어려움이 우려되었고,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혁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미래위에는 기존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방식을 벗어나 도시개발·미래전략·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시군구의회회장협의회)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위원 3명을 위촉했다.

2024년 5월 출범한 미래위는 8개월간 11차례 전체회의, 6차례 지역 현장 의견 수렴(권역별 토론회)을 거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했다.

[표 2-1-4]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주요 내용('25.1.22. 발표)

- ①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간 통합
- ②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 통합
- ③ 특별·광역시로의 연접 시·군 편입
- ④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 ⑤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사무) 조정
- ⑥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⑦ 現 자치 계층(2층제) 재검토
- ⑧ 하부 행정기구(읍·면·동) 효율화
 - 8개 세부내용별 구체적 개편 방향, 절차, 지원 필요사항 및 고려사항 등 권고

2)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세부내용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위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시·도 간 통합과 초광역 연계협력의 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같은 권역별 광역 단위의 협력과 통합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군·구 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생활권이 연결된 시·군은 통합을 통해 권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독자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인 과소 시·군은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 간 규모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 역사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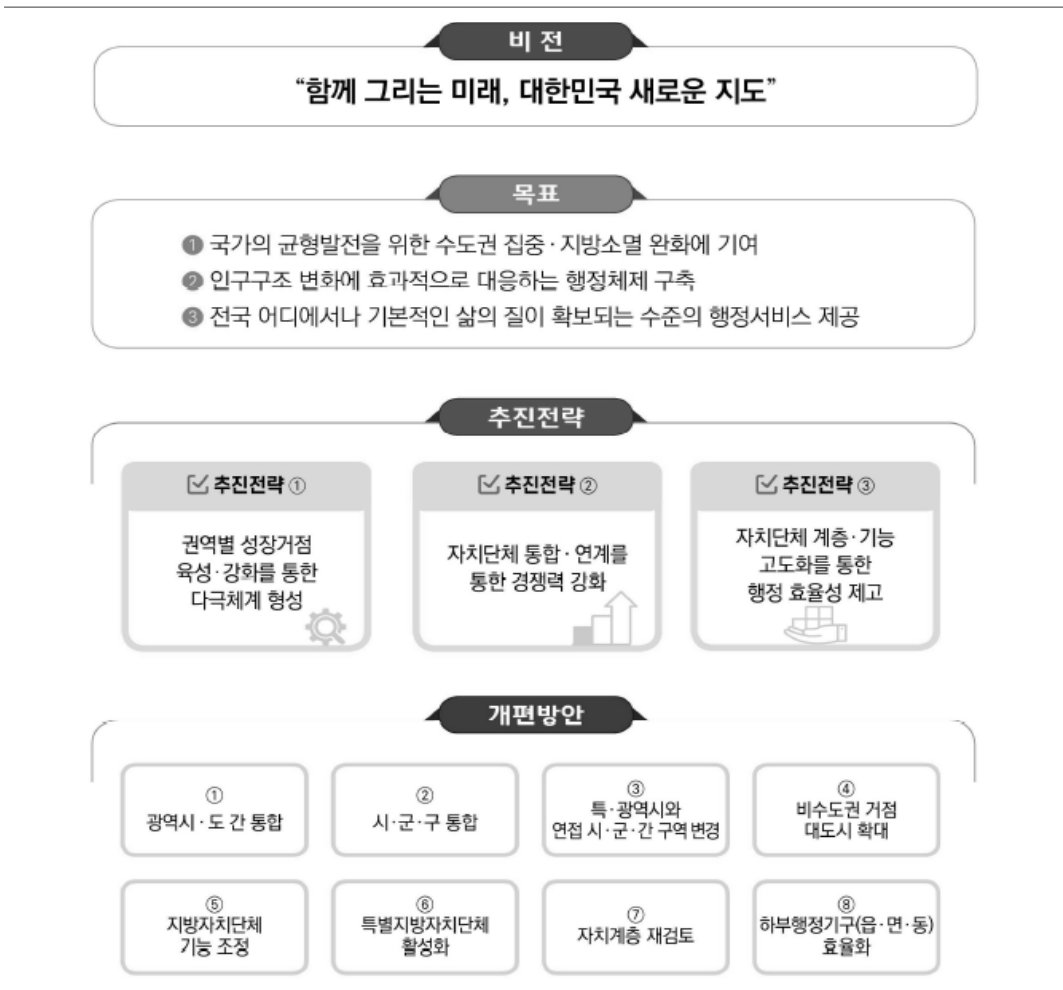
아울러, 비수도권 거점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시·대도시 제도의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대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 내에서 실제로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거점 기능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고, 지정 이후에도 거점 역할 수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은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게 더욱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시·도의 사무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따라 맞춤형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인구나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시·군의 경우, 관할도가 일부 사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 단위의 협력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사무 이관·위임과 관련한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구는 주민 생활권과 디지털화 흐름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광역화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해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림 2-1-8]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체계도



3) 권고안 후속조치를 위한 「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 출범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이 공개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권고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유관부처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국무총리 훈령 「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25.4.10.)되어 행정안전부 내 ‘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설치되었다. 조직은 유관부처 협의가 필수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성상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타 부처 인력들을 포함한 범부처 형태로 구성되었다. 지원단은 권고안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 정비,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추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초광역 연계 기반 구축, 시도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검토·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제를 보다 구속력 있는 합의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발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개편이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1. 기업이전 지원 및 지역-기업 상생협업

기업협력지원과 행정사무관 이 종 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기업에서 찾고,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공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기업이전 뿐 아니라 기업과 지역의 상생 협업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소멸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한 예로 2024년에는 롯데웰푸드와의 협업으로 지역 특산물(부여 밤)을 활용한 제과 제품을 출시하였다. 출시 1개월만에 모든 제품이 완판되는 등 호응이 높았고,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과 기업의 협업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역행안부 - 기업대한상의 간 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전문역량과 연계한 협업을 보다 폭넓게 이어갈 예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수도권 기업의 자율적 지방이전 여건 조성

① 지역 투자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이전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전 전략 등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전 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컨설팅 사업으로, 지역 내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인력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 유치방안, 유망 기업군 발굴 등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컨설팅 대상으로 광주 동구, 삼척, 청양, 의성, 군산, 제주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산업연구원·지역TP, 분야별 전문가, 지역연구원 등 지역컨설팅단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기업유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기업의 지방투자에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인력부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이전(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에 근로자 임대주택·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경남 하동, 충북 보은 등 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총 16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표 2-2-1] 2024년 특별교부세 지원내역

구분	지자체	사업명	특교세(단위:억원)
공공임대주택	경남 하동군	근로자공공임대주택	70
복합문화시설	충북 음성군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20
	전북 전주시	산업단지 청년놀이터	25
	충북 보은군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25
기업지원시설	강원 철원군	일반산단 복합센터	20
계			160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병역 지정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 심사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도록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선발 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민간기업 인재를 지자체에 파견하여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자체-기업 인재교류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 등 해외 민관 인사교류제도 분석에 기반한 국내 민간전문가 공직파견근무제도

활용·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실제 인재 교류 선도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② 기업지원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기업의 지방투자 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기업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업지원체계는 기업의 투자의향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6월 27일 14개 시도가 참석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기업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위 지원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제6단체, 기업인 등 약 150명을 초청하여 지역-기업 상생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기업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이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출장 또는 근무지 지원 형태)되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기업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기업 간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다. 2024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지역기반기업 7개소, 재난안전산업기업 2개소)와 함께 ‘CES 혁신상 수상기업 초청 간담회(‘24.2.29.)’를 개최하여, 기업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림 2-2-1] CES 수상기업 간담회(‘24.2.29.)



[그림 2-2-2] 기업지원체계 출범식(‘24.6.27.)



2)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업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지역의 상생협업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부여군-롯데웰푸드의 협업제품 출시는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인 부여군의 특산물인 밤을 롯데웰푸드의 기존 제품과 연계해 빈츠, 카스타드 등 9종 신제품을 출시('24.9.)하였고, 1개월만에 조기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 지역은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원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생협업 제품출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2025년에는 이마트24, 교촌에프앤비와의 협업으로 산불피해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림 2-2-3] 상생협약식('24.8.16.)



[그림 2-2-4] 부여 밤 활용 제품 9종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다주체간 협업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이전 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업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출시 외에도, 재활용 기업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 협업, 모빌리티 기업과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사업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협업사업이 보다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상의(기업) 간 상생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아 지역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 지방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지방규제혁신과 행정사무관 채 현 숙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등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법령 등 중앙부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및 지역주민·기업과 협업하여 발굴한 산업·환경·고용 등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의 집중 해소(73건)하였고,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과제는 실무자 협의, 부처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소관 부처 불수용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력이 높은 과제에 대해 현장협의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표 2-2-2] 중앙부처 규제 주요 개선사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대한건설협회→국토부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공사(5억원), 전문공사(2억원) 이상 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기술자를 배치하고 시험실(20m²)을 설치

개선 품질시험계획 대상 ① 공사금액에 KS인증 자재비는 제외하고 공사비 상향 검토, ② 시험실 규모 완화(20m²→18m²)

☞ **(효과)** 시험실 설치·해체 공사비 연간 85억원 비용 절감(대한건설협회 추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전문건설협회→고용부

기존 연간 단가공사의 경우, 작업건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가능하나, 전기·정보통신 공사에 한하여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능

개선 건설공사 연간 단가계약도 전기·통신공사처럼 총 계약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효과)** 중소·지역건설사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 2,030억원 비용 절감(건설산업정책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전문건설협회→법무부

- 기존** 건설업 내국인근로자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 및 청년층 유입 부족으로 인력난 심화되나, 외국인 취업과 체류자격 등에 대한 규제 존재
- 개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 산정기준 상향, '근무처' 해석 기준 명확화 등
- ☞ **(효과)** 건설업계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

도심형 스마트팜 농업인 인정 세종→농림부

- 기존** 도심형 스마트팜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 방식이나, 현재 관련 법령은 농지 등 기존의 기준에 따라 농업인(농업경영체)를 인정
- 개선** 도심형 스마트팜도 일정 규모 이상 경영·경작 시 농업인 인전 또는 농업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
- ☞ **(효과)** 농경지가 없거나 부족한 도심지역에서의 실내농업을 활성화하여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세대 농업 육성**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충남 보령시→국토부

- 기존**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체계획서에 기술자의 검토·서명날인 등 필요
- 개선** 공사기간이 짧고 단순공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하고, 전문가 작성 분량 축소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부담 완화
- ☞ **(효과)** 규제 완화로 빈집 정비사업 참여자 증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특히, 22년간 지속되어온 강원지역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폐기물로 관리되어 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했던 석탄 경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론회(차관 주재, '23.11.), 위원회 심의(4차례) 등 지속적 노력하여, 석탄 경석의 관리기준(환경부 훈령)을 마련하고 공동협약을 체결(6.13.)하여,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할 규제를 해소하였다.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와 협업하여 폐광지역 개발 및 자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 개최(6.13.)하고,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 강원도지사, 태백시장이 참석하여 석탄 경석 규제개선 추진 경과 및 폐기물 규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서 서명하였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이전 등 규제 해소로 석탄 경석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3,383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석탄 경석 활용뿐만 아니라, 경석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를 통한 민생분야 지원

준조세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자치법규 내 부담금, 사용료 등 준조세 관련 규제의 지역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후, 준조세 정비목록(457건)을 확정하여 점검하였다.

[표 2-2-3] 준조세 정비사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기 존	개 선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 없음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④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00분의 80 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지자체 등록규제 중 오래된 규제를 재검토하고 시스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2024년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방향 및 평가기준 협의를 위한 광역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3)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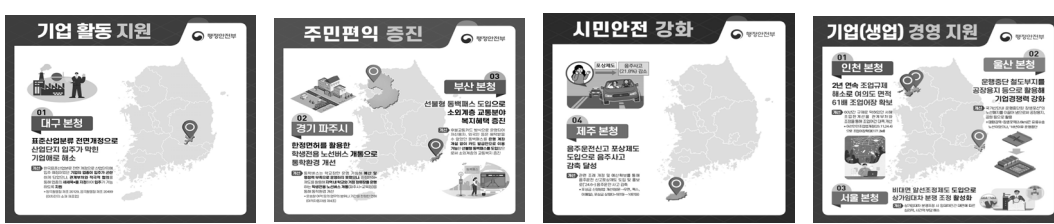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를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우수사례 선정·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정책 개선방향 및 업무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언론보도, 카드뉴스 등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였다.

[표 2-2-4]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내용

시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내용	지자체
'24년 1분기	①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애로 해소	대구
	② 한정면허를 활용한 학생전용 노선버스 개통으로 통학환경 개선	경기 파주
	③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	부산
'24년 2분기	① 2년 연속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 61배 조업어장 확보	인천
	②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	울산
	③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서울
'24년 3분기	①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강원
	②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아적장 임시 사용 허용 개선	울산
	③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전북
'24년 4분기	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서울
	②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작·생산·공정 효율 증대	대구
	③ 30년간 축사 악취에 고통받은 시민 난제 해결	충남 논산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그림 2-2-5]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혁신 카드뉴스 홍보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와 규제책임관 운영

지자체를 활용한 통상적인 규제발굴에서 벗어나 업종협회, 행정심판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등 규제발굴 채널을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였다.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 해소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현장감 높은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 발굴 및 해소(상반기 767건)의 현실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촉촉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자체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결례 중 법령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상공업계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발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24.7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및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했다.

또한, 민생규제 개선 대국민 공모('24.5월, 868건 접수)를 통해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국민안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핵심규제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제고를 위해 행안부·지자체 간부를 지정하여 책임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규제책임관' 도입, 규제총괄책임관으로 과지역경제지원국 국장을 지정하고 중앙규제책임관으로 과장을 지정하고, 시·도 규제업무 담당 과장을 지방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하였다.

중앙규제책임관은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부처 소통 등 규제개선 지원, 필요시 지방규제혁신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규제의 개선 필요성 제시하였고, 지방규제책임관은 현행 시도 규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 및 핵심규제 발굴하였다.

[표 2-2-5] 중앙규제책임관 규제현장 방문사례

- 전북 전주(5.17. / 지방규제혁신과장) : 도로굴착사업 불가사유 규제완화
- 전남 함평(5.17.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 :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대구 중구(5.21. / 지역경제과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개선
- 세종(5.23. /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국가산단 편입토지 내 축산농가 폐업보상
- 울산 중구(5.28. /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 태화강 국가정원 도시민박업 운영범위 확대
- 제주(7.15. / 지방규제혁신과장) : 공장설립승인 범위 확대(지하수 취수시설 인근) 규제 완화
- 서울(7.17. / 지방규제혁신과장) :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높이기준(12m) 개선
- 목포(8.9. / 지방규제혁신과장) :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사시계 규제 완화
- 삼척(10.11. / 지방규제혁신과장) : 수소 융복합 충전시설 관련 규제 완화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중앙부처 법령과 관련한 규제의 대다수는 여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자체 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지자체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규제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 권역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토·환경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규제 해소 과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현장 중심으로 민생규제 안전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주민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빈집 정비 추진

균형발전제도와 해양수산사무관 최 광 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빈집이 폭발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변의 생활환경, 위생, 안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빈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도시·농어촌 지역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국가 빈집통계 부재,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와 소유주의 관심 부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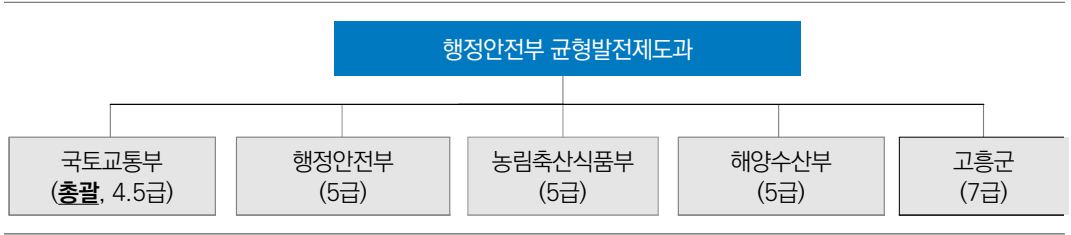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구역(공간) 단위 정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재생 사업 방향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빈집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빈집 정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법령상 빈집 관리 책무는 시군구청장과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열악한 인력·재정 여건과 관심 부족 등으로 빈집 관리가 미흡하고, 소유자는 재산세 증가, 철거비 부담, 시군구 행정 미집행 등으로 빈집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과 개별 빈집 정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자발적 정비·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범부처 합동 ‘빈집정비 TF팀’을 2024년 8월에 구성하였다.

빈집TF는 전국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관리·철거를 지원하고, 일원화된 전국 빈집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와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 활성화, 철거 중심의 정책을 활용으로 전환, 안전대책 마련 등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표 2-2-6] 빈집정비 TF팀 구성('24.8월 ~ '25.8월)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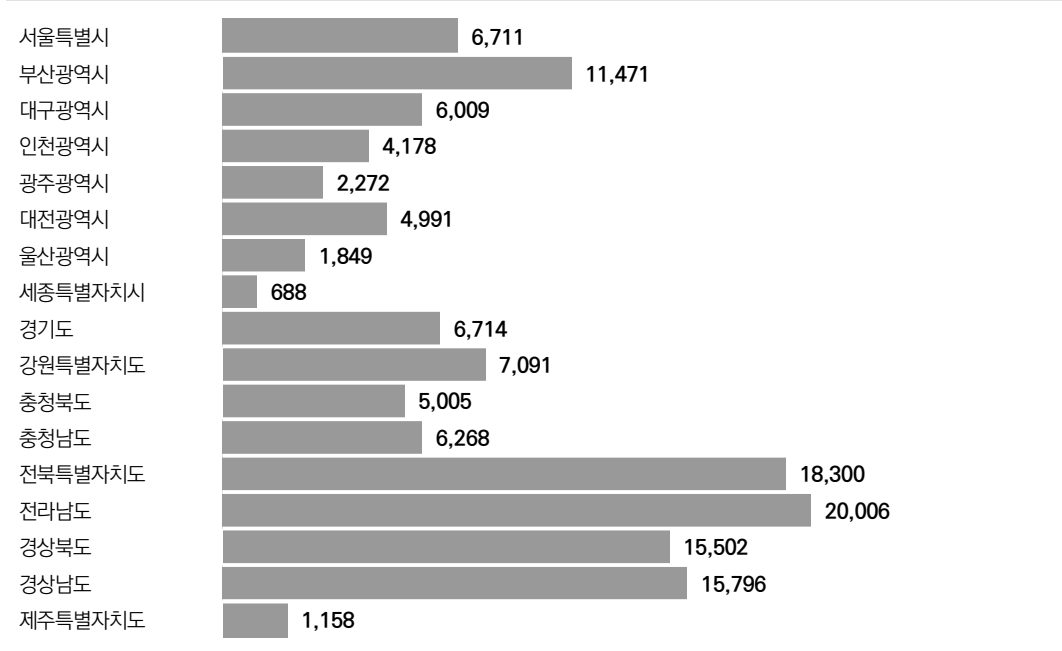
1) 전국 빈집 행정조사 최초 추진(243개 시군구)

그간 도시·농어촌 지역의 빈집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사시기와 방식이 달라 전국 단위의 빈집 통계를 확인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0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70일간 일제 행정조사를 시행하여 전국 243개 시군구 빈집 현황을 조사·집계하였다.

조사결과 2024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4,009호로 이 중 도시지역은 55,914호, 농어촌지역은 78,095호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빈집 현황의 기준데이터로 의미가 있었으며, 중앙·지자체·연구기관·민간의 정책자료 및 추세 분석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표 2-2-7] 2024년 기준 시도별 빈집 수

(단위: 호)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2) 빈집 정보제공 플랫폼 및 거래지원체계 구축 계획 수립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은 실태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의 빈집 정보를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누리집으로 제공하였으나, 전국 빈집 정보 부재, 서비스 부족 등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전국 빈집 현황’, ‘거래·활용 미흡’, ‘통합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언론, 국회, SNS에서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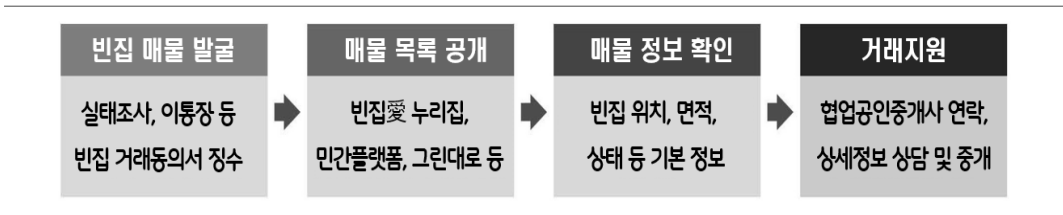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집 소유자와 민간의 자발적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애(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빈집 플랫폼은 ①(정보제공) 전국 빈집 지도, 빈집 현황, 지자체 정비실적, 활용사례, 지원사업 소개, 거래지원 등 대민 서비스 제공(’25.1월), ②(거래지원)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매물과 해당 지역 협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하여 빈집 거래 지원(’25.下), ③(업무관리) 신규 빈집 모니터링, 빈집 등록·정비관리, 실태조사 관리, 지자체 사용자 관리 등 시스템 기반의 지자체 업무처리 지원, ④(발생·확산 분석) 빈집 발생·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AI 분석 플랫폼 개발·구축(’25.下) 등으로 ’25년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2-6] 빈집 플랫폼 구성(안)



[표 2-2-8] 빈집 거래지원 체계(안)



3) 빈집 철거를 위한 국가 지원사업 추진

홍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 위생·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및 재생·정비사업 미포함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개별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국적인 빈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빈집 철거를 지원하게 되었다. 다만, 기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마을 단위 재생 빈집정비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시군구 수요를 중심으로 철거 대상 빈집을 정비해 나가고, 빈집 노후도 및 규모,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예산 규모는 50억 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빈집 철거비는 1호당 도시는 1천만원, 농어촌은 5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2024년도 사업 추진 결과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서 빈집 841호를 철거하였다.

[표 2-2-9] 2024년 시도별 빈집 철거사업비 교부 현황

시도별	예산액(백만원)	시도별	예산액(백만원)
부산광역시	110	충청남도	1,090
대구광역시	40	전북특별자치도	828
대전광역시	40	전라남도	501
세종특별자치시	45	경상북도	600
경기도	30	경상남도	1,585
충청북도	100		

4) 빈집 정책 내실화를 위한 중앙-지방-민간 협의체 운영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전담TF’ 구성(‘24.8) 이후,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업무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협의회, 지방협의회, 민관협의회 등 구성하여 총 17회 회의·협의를 추진했다.

중앙협의회는 빈집 정비 관련 4개 부처(행정, 국토, 농림, 해수부)가 참여하여 빈집 법령,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 및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였다. 지방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여 빈집 현황조사, 실태조사, 정비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자체 빈집 업무현황 공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협력하였다. 민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참석 부처와 빈집 정비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빈집 정책 수립을 논의하였다.

[그림 2-2-7] 중앙협의회(‘24.12.12.)



[그림 2-2-8] 지방협의회(‘24.9.27.)



[그림 2-2-9] 민간전문가회의('24.10.25.) [그림 2-2-10] 빈집플랫폼 구축회의('24.11.18.)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현행의 빈집 문제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의 정비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 주도의 빈집 정비·활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국 단위의 빈집 정보를 통합 제공, 관리하는 시스템 및 거래를 지원하는 체계 또한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철거 중심의 빈집 정책을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귀농·귀촌자·관광객 유입을 위한 주거·숙박·편의시설, 창업공간, 공동활용 시설 등 지역 인구 유입시설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특별자치시·도 특례 추가 발굴 및 성과분석

자치분권제도와 행정사무관 문 정 목
주무관 조 은 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홍콩·싱가포르와 같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06.7월)가 출범한 이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12.7월)가 출범하였다. 또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강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국가균형발전의 주체로 인정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개의 특별자치시와 3개의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특화발전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포함한 실질적인 특례를 추가 발굴해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환경·군사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낙후되었던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2022년 6월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24년 6월에는 84개 조문이 담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산림** :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농업** :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환경**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등
- **군사** :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 가능, 미활용군용지 현황 제공 등

특히, 도지사가 절대농지를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바탕으로 2025년 4월 기준으로 6개 시·군에 9개 농촌활력지구가 지정되어 체육시설·주민편의시설 건립과 같은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이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 사업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림 2-2-11]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례1

전국 | 강원
강원자치도, 특별한 강원! '산림이용진흥지구' 스타트!

일련 2024-06-11 14:12:52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착수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스프וט사출 |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7년여 간 담보상태에 있던 '고성통일전망대' 생태관광평지용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가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10일 정식 접수되어 전라남도 광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림 2-2-1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례2

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완화 신호탄...국내 첫 '농촌활력지구' 30일 지정

기사원사서 3758991@NAVER.COM

기사원사서 3758991@NAVER.COM

일련 2024-10-28 17:33:51

강릉 원주, 전문 학자 수지 연구 30인, 안재 덕 상의
영남특별자치도 규제 시행 5개월 만에 첫 관련 편사
작 구상 35개 편사 는 2024년 10월 28일(월)에 개체



영남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4년 10월 28일(월)에 개체'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 안재 덕 상의, (오른쪽) 안재 덕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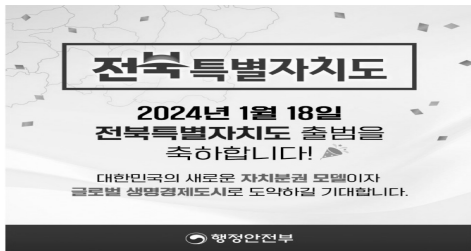
영남특별자치도청이 2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 따라 국내 첫 '농촌활력지구' (본보 지난 7월 11일 10면 10면 12면 13면)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속구장 85개 면적의 농민중심지(연구 원주) 규제와 함께 30개 읍 면에 지정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첫 관련 편사라는 점에서 향후 강원특별법도 편성될 전망이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 및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24.1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라북도과 지역 정치계에서는 전라북도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모델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2023년 1월 2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그림 2-2-1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그림 2-2-1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고자 농업·환경·금융·인력 특례를 담은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2월에 시행되었다. 더불어,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4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전북특별법 시행령」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발맞추어 2024년 12월 시행되었다.

[표 2-2-11]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24.12월 시행) 주요 내용

- **농업** : 도지사의 농생명지구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농식품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환경**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일부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등
- **금융** : 도지사가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인력** : 도내 지구·단지 내 입주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관련 특례

나아가 2024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여 이를 포함하는 「전북특별법」 제2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7단계 제도개선안 및 국유재산 특례관련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협의 추진 등

정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창출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총 6차례의 단계적 제도개선(4,660건의 사무이양)을 추진해왔다. 2023년 7월에는 JDC 소관 지정면세점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7단계 제도개선과제(30건)와 알뜨르비행장 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등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및 국유재산 특례, 출국납부금 부과면제대상 확대 및 부담금 인하 등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례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체계 재구조화 및 신규특례 반영을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준비중으로,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는 이처럼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전략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특례 부여·발굴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5.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발굴 및 제도화

균형발전제도와 행정사무관 이혜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에 주도적,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10.)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36개의 특례를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출생자)가 보편화된 인구감소지역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신속한 시행으로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 중심의 특례 발굴·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재정 투입 또는 장기적 절차를 최소화면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기업 유치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정부부처 자체 발굴을 통해 특례 과제를 마련하고, 해당 과제들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대 분야, 26건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4.7.)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15] 26개 특례 주요과제

[그림 2-2-16] 관련 보도자료('24.7.18.)

[3대 분야 26개 특례 주요과제]	
분 야	주 요 과 제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생활인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 농진정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 및 회사 등에 공유 사용료 면제 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뜨거워진 우리! 새로운 풍년을 만나다*

보도시점 2024. 7. 18.(목) 12:00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1)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먼저, '24.3월 기준 전국의 미활용 폐교 367개 중 66.2%(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의 소규모 빈집에 한정하여 철거시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거점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심사를 폐지하고 입소기간(기존 5년) 연장을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기준 보유량을 완화하였다.(현행1000권→개선500권) 이 외에도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총 12건의 특례를 마련하였다.

2) 생활인구 확대

먼저,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유학운영학교 학구와 인접한 면에 거주할 경우에도 농촌유학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유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행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된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실 이상으로 완화토록 하여, 소규모지만 지역특색을 반영한 숙박시설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총 7건의 특례를 발굴하였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먼저, 국가어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어항구역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 일반 어항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수산업 관련 시설으로 한정

또한,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 출연연구원, 회사 등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을 독려하고,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구역에는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인턴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여 총 7건의 특례를 발굴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큰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위 26개의 과제 또한 지자체, 전문가, 부처가 합동으로 발굴·시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발굴된 과제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건축물관리법」등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례의 안정적 정착,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및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예정이다.

6.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지방규제혁신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속적인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의 가치관도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독자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삶의 질, 친환경, 웰빙 등으로 생활의 무게가 이동하는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으로 귀환하는 청년이 증가 추세인 것이 그 변화를 입증한다. 2024년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가 19만 8천 명¹⁾으로 조사되었고, 매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일컫는 청년 소상공인들도 지방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월세와 생활비로 지출하느니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 갈 수 있는 곳, 그런 자원이 풍부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 볼거리, 놀거리, 교통편의 등 자원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수도권이 가질 수 없는 고유자원은 존재한다. 여유로운 주거환경, 역사 자원, 자연환경, 저렴한 임차료와 매력적인 지방 감성을 아우르는 골목상권 등 소생활권 등이 있다. 서울보다 나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다른 자원을 가진 지역, 저마다의 고유한 매력을 가진 지역이 되면 그런 자원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의 이동성을 고려하고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과 ② ‘고향올래(GO郷ALL來)’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1) 귀농인·귀촌인 통계(통계청, 2024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고유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특화인프라를 확대·운영하고 정착토록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실제 활동하고 이동하는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의 강점·특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성원(지자체, 주민, 이주민 등)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과 고유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2023년 10곳에 이어 2024년 10곳의 지자체를 지원하였다.

[표 2-2-12]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선정지

'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10곳	(광주 광산) 고려인마을 / (울산 울주) 덕신 그린타운팩토리 (강원 속초) 아바이마을 / (강원 태백) 태백의 빛을 담아가는 FlashBag(back) (강원 인제) 신월리 달뜨는 마을 / (충남 당진) 그린스페이스 쇠내골 (전남 강진) 병영 600 / (전남 진도) 먹고·듣고·즐기는 삼락촌 (경북 의성) 웰컴센터 쌀미롱 / (경남 밀양) 해천 라이프스타일
--------------------------------	---

◆ 강원도 속초시는 아바이마을을 음식문화중심지구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 및 정착 활성화 ◆ 충남 당진시는 신평시장과 쇠내골 자연환경 자원을 연계하여 사계절 정원마을로 조성 ◆ 전남 진도군은 상권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삼락(먹고, 듣고, 보는)을 즐기는 관광클러스터로 조성 ◆ 경북 의성군은 안계평야 쌀을 활용한 양조장과 청년을 기반으로 지역자원 특화브랜드 창출 ◆ 경남 밀양시는 해천을 중심으로 밀양의 오래된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조성 ◆ 울산 울주군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인력이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국적·문화를 포용하는 마을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지역특화발전 전문가 25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발전 기획력을 높이고, 다부처 사업들을 연계하는 등 통합적 관점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장수군의 경우 지역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여 2024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4,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였고, 강원도 춘천시는 약사천을 원도심의 다양한 지역자원(약사동 골목, 생태하천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특화상품(한약재를 활용한 맥주·비누 등)을 개발하고 'Made by 약사천'이라는 새로운 지역브랜드를 창출하여 2024년 2월 한 달 동안 팝업스토어에만 2,500여 명이 방문, 1,1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밖에,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갔다. 2023년 12월 신한금융그룹과 로컬브랜딩 사업지에 대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2024~2026년 3년간, 연 20억원 규모)하고 2024년에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신규창업, 친환경화 등 로컬브랜딩 사업지 지역의 가치를 강화하고 창업과 정착을 활성화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2)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고향올래(GO郷ALL來)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 부처 최초로 새로운 시각의 인구정책인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고향올래(GO郷ALL來)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맞춤형 체류기반 조성 사업으로 수도권을 제외(단, 수도권이라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1항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에 포함된 지자체는 지원 가능)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21개 지자체, 2024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400억원(지방비 포함)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既 추진 중인 사업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확산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원분야로는 ① 두 지역살이, ② 로컬벤처, ③ 로컬유학, ④ 워케이션, ⑤ 은퇴자마을 등 5가지 유형이다.

[표 2-2-13] 2024년 고향올래 선정지

'24년 고향올래 12곳	① 두 지역살이: 3곳 (전북 김제) 안녕!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전남 신안) 예술파시(藝術波市) (경북 포항) 나는 '성'에 산다. 장기음성으로 입성하세요!
	② 로컬벤처: 3곳 (대구 본청) “대굴대굴 대구온나” 청년 귀한 채널구축 사업 (충남 공주) 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조성 (전북 남원) NYBS(Namwon Youth Blooming Space) in 지리산
	③ 로컬유학: 2곳 (강원 홍천) 삼생(三生)에서 상생(相生)하기 (경남 의령) 퇴계이황 처갓집 가는길 “치유마을 로컬유학”
	④ 워케이션: 3곳 (충남 본청) 뷰티(BEAUTY) on(溫) 워케이션@충남온양 (충북 충주) 출근했습니다. 충주입니다! (경북 안동) 옥정동 한옥 올래(五~Re) 스테이 in 안동
	⑤ 은퇴자마을: 1곳 (충북 청주)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전북 김제시는 유희공간을 활용해 거주시설,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고 지역탐방, 지역전시 등 프로그램 마련 ◆대구 본청은 산격1동 내 빈집 활용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빈점포 리모델링 통한 창업 테스트베드 조성 ◆강원 홍천군은 유학생 가족 대상 거주공간 신축, 공동편의공간 조성, 학부모 대상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지원 ◆충북 충주시는 마리나센터 리모델링 통해 오피스 및 숙박시설 제공, 카누·공방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연계 ◆충북 청주시는 다목적회관을 활용해 은퇴자들을 위한 공동체 복합공간 조성, 귀농취촌·지역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목표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고향올래 정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향올래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2024년 9월)을 개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의 관심을 높혀 사업을 확산토록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총인구 감소시대에 수도권 대비 자원량이 부족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방식의 지역발전을 통해서도 지방소멸 극복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다양한 자원을 모으고 적극 활용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매력과 특성을 살림으로써 지역이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 정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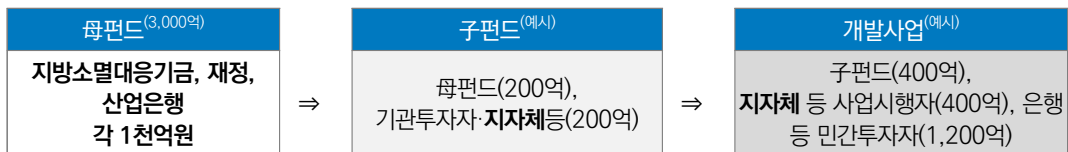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및 운영

균형발전제도와 행정사무관 김 창 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도입되었으나, 정부 재원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2024년에 신규로 출범하였다. 기존의 단발적이고 소규모 중심의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민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하여 총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최대 3조원 규모의 지역투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표 2-2-1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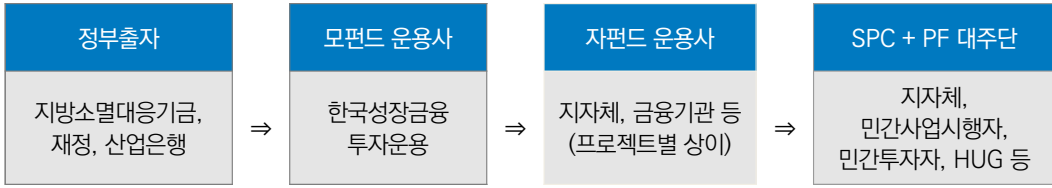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펀드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모펀드와 자펀드로 구성된 이중 투자구조를 통해 최소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모펀드는 광역시 최대 30%, 도 최대 50%까지 자펀드에 출자하고, 민간투자자의 출자액 중 최대 20%를 후순위로 부담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리스크 부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2-1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흐름도



2) 제도적 지원 강화

지자체의 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SPC 출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SPC 설립기간을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및 간소화로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였다. 또한,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대출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

3) 투자성과

2024년 한 해 동안 5개의 대규모 프로젝트(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선정하고, 총 2.5조원을 투자하여 모펀드의 투자금을 81.5% 소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들은 고용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16]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 프로젝트 현황

No.	프로젝트명	선정시기	총사업비
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4.3월	680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억원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4.9월	1조 4,362억원
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월	7,716억원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24.12월	1,300억원
합계			2조4,934억원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단기간 내 성과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다만, 향후 펀드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발전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모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지자체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고, 둘째,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사업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8.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균형발전진흥과 행정사무관 정 해 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지역소멸 위기가 지방재정의 낮은 자율성과 맞물리면서 지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지자체의 낮은 자체수입 비율과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는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중인 ‘고향납세제’를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등록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내에서(25.1.1~, 기존 500만 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업사업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힘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아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으로부터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 상인들의 답례품 생산·판매 등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림 2-2-17]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세’가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국 시·도의회지방협의회에서는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2017년 5월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모금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법』과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법률 제정당시 기부주체, 모금주체, 연간 기부상한액 등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준조세화, 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은 기부주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주체로 인정되었다. 모금주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역차별 문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모금권한을 부여하였다. 연간 기부상한액은 법률로 500만원으로 정했으며, 공무원을 동원한 모금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21년 9월 2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차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공포 이후에도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였으며, 제도 발전방안 모색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9.4.)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 해에 총 52만 6천 건의 기부와 총 650억 6천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였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나 인구감소지역에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여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제는 1년차 모금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법령을 정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사적모임이나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활용한 모금활동을 허용하여 모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 모금 자율성이 제고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간 기부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2025.1.1. ~) 고액기부자 참여를 유도하였다. 더불어,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를 도입하여 기부효능감을 증진하였으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다.

[표 2-2-17]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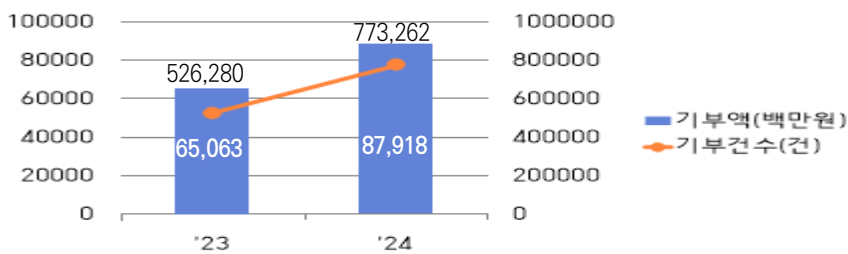
구분	제도 도입시	개선 완료(24.12.31.)
기부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모금방법	• 지정된 광고매체만 可 • 직접 모금 방법* 금지 * 호별방문, 개별 전화 서신, 사적모임, 전자적 전송매체 등	• 매체 제한 삭제 • 직접 모금방법 일부* 허용 * 사적모임, 전자적 전송매체,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기부방법	• 일반기부(지자체에 기부)	• 지정기부 도입
접수창구	• 고향사랑e음(온라인) • 농협(오프라인)	• 민간플랫폼 도입(6개)

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년차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차에 지정기부가 도입되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기부건수와 기부금은 전년대비 각각 47%와 35% 늘어 총 77만 4천 건의 기부건수와 총 879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하여 평균 3배가 넘는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그 외 지자체 평균모금액을 상회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도 더욱 커졌다. 답례품 판매비용은 205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관광·체험 상품 등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도 발굴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도 커졌다.

이외에도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에 25개 지자체에서 55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모금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을 마련했으며, 초·중·고 탁구부 지원사업, 소아과 진료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지역을 연결해 주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림 2-2-18]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2023년, 2024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제도적으로 지역과 연결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며,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을

발전시킨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답례품은 지역상인과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도와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기부주체 확대, 기부금 사용처 다양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언론 홍보, 고향사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9.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지방공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유 해 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공기업은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으며,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이 필요해졌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라는 정책 방향 하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일거리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 회의 및 지속적 점검 절차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투자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돌입하였다.

[그림 2-2-16]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TF (1차, '23.11.)



[그림 2-2-17]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TF (2차, '23.11.)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투자여력 확보

지방공기업의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자본금 확대를 추진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와 연계되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본금 확대에 관한 지방공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자본금 규모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출자를 유도하는 대신,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 출자 등 다양한 출자 방법을 안내 및 유도하였다.

또한 민간 협작을 통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였다. 지방공기업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10%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양호한 지방공기업에서도 10% 이상의 출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출자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출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 상향을 지원하였다.

[표 2-2-18]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부채비율	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
출자한도	자본금의 50%	자본금의 25%	자본금의 10% (현행)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도 상향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나, 산업단지 조성은 부지 조성 등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 비율을 공공주택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광역개발공사: 순자산의 300% → 350% / 기초개발공사: 순자산의 200% → 230%)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이 대행하여 수행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지방공기업의 부채에서 제외하였다.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교부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비금융부채여서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을 일으키지 않지만, 공사채 발행 시에는 부채로 계상되어 불리하게 부채비율을 올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산정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투자절차 간소화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출자 규모, 유사 검토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출자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고려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개정을 추진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유사 검토를 거친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소액 이하의 출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기준도 합리화하였다. 기존에는 국가공기업 등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자체가 적용받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엄격한 재검토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3) 투자영역 확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는 「지방공기업」 제2조에 따라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진입 및 투자가 어려웠다. 특히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인 해상 여객 운송 사업

등이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 사업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상황과 지방공기업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당연적용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풍력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 되어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폭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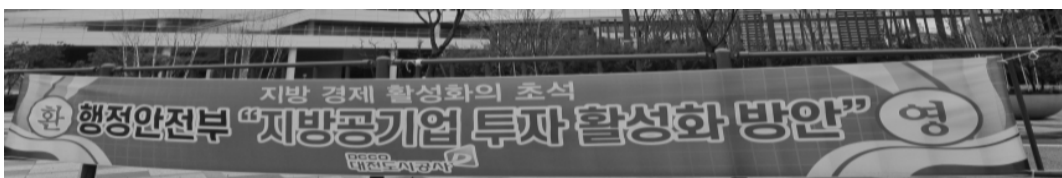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에는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지방공사가 타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등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지방공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와 합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서울의 공기업이 은퇴자를 위한 주택을 삼척 등지에 직접 건설하는 골드시티 사업 등 지역의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주민의 근거리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니즈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지방공기업의 환영을 받았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균형성장 지원과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림 2-2-19]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지자체·지방공사의 반응



10. 지역특성 기반 특화발전 제도 마련

기업협력지원과 주무관 이 재 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간 중앙 주도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비교우위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유연한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인구감소, 산업전환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산업·지리·인적 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이 필수적이며,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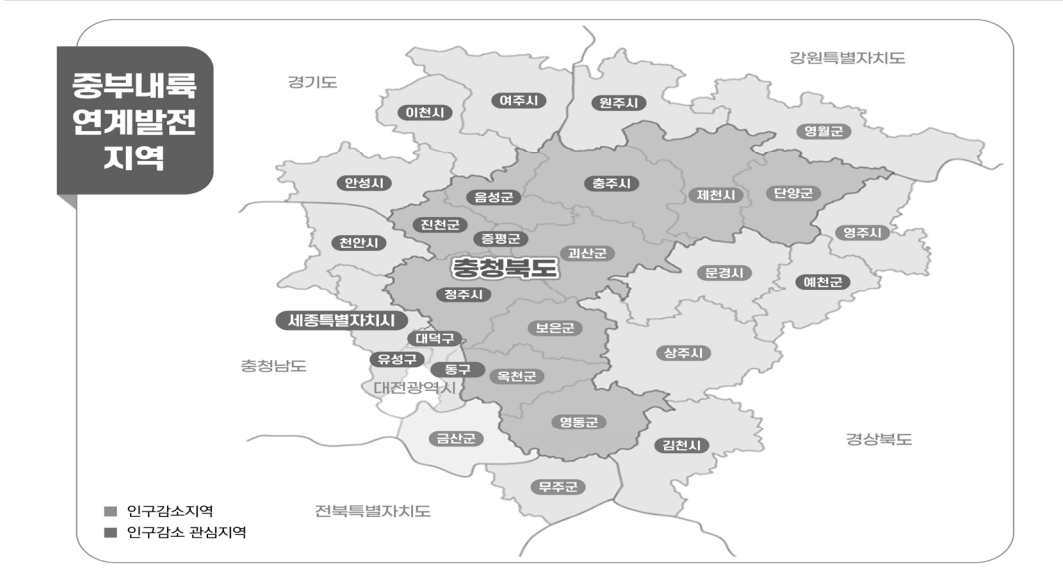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 개발 사이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지역간 연계 부족, 인프라 열악, 중첩된 규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되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 및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5일 제정, 6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표 2-2-1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

-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그림 2-2-20]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범위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협의회 운영,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중부내륙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방법(3조~7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방안(9조~11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시행 절차·방법(12조~14조), ▲ 국고보조금 등 특례사항(16조~21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업 기준 마련을 위해 외부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24.6.27)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실질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0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표 2-2-20]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기능 및 구성

- (기능) 주요 정책개발, 공동개발사업 발굴, 공동발전 필요사항 협의
- (구성) 시·도지사(공동위원장)·의회 의장·지방연구원장/공동위원장 지정 8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연구원장 등 32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24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10월 24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4개 시·도지사(세종·강원·충북·경북)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의장 선정과 협의회 운영 규정을 합의하였으며,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과 시·도 발전계획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중부내륙연계지역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2-2-2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 및 1차 회의(‘24.10.24.)**다. 평가 및 발전방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국회 등 입법과정에서 지역과 국가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3절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1.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 재정립 추진방향

자치분권제도와 행정사무관 송 해 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영유아보육,中等교육 등 지방의 교육서비스가 주민생활과 복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서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와 교육청이라는 일반자치기관과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기관 분리에 따른 칸막이 행정은 시·도와 교육청의 유사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 갈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지역발전과 교육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제약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국정과제(111-6)로 선정하고,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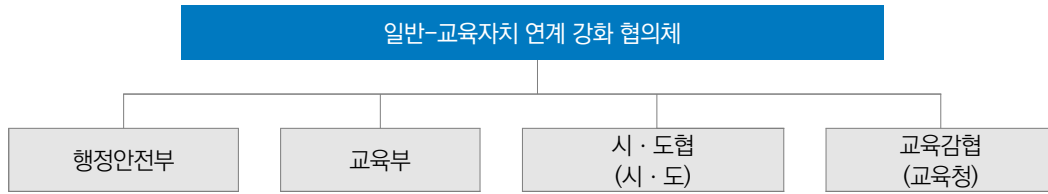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2024년 2월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시·도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 3월에는 인사교류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3-1] 일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구성도



2) 유보통합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행정안전부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시 지방단위 관리체계도 통합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과 예산의 이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주재 실무협의(2.27., 5.1., 5.30.)와 시도지사협의회 주재로 시도 실무책임자 회의(3.21.)를 실시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유보통합 지원 TF를 구성하여 유보통합 추진시 지원방향에 대하여 2차례(2.7., 3.21.) 논의하였다.

3) 지자체-교육청 간 돌봄 관련 협력 증진

2.27.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이 발표되었다. 공간확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 자치단체, 교원단체, 지역사회 등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전 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사회부총리(2.29.), 국무총리(3.6.) 주재로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없이 지역에서 교육서비스가 올바르게 공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일반사무와 교육사무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교육관련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핵심 현안인 유보통합 추진 및 늘봄학교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이 지역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목소리도 중앙에 전달하여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 지자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지원

자치분권제도와 주무관 박은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4년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운영 현황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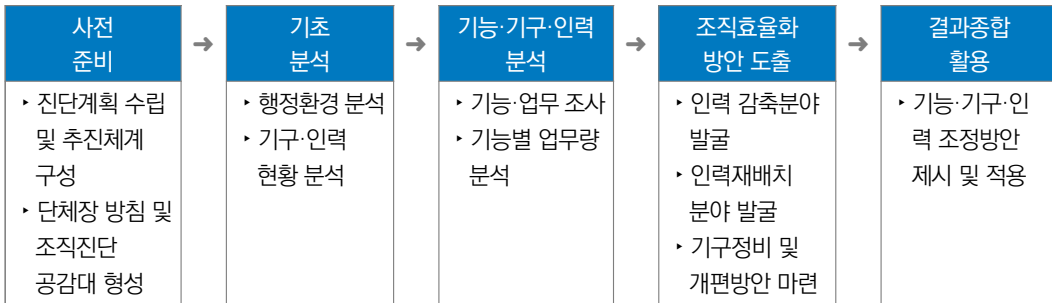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기구를 통·폐합하도록 하여 생산성 높은 지방조직으로 정비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인력 재배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도록 목표 관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였다. 인력 재배치와 위원회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및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1)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직 분석과 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체 조직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행정환경을 분석하고, 조직 효율화 방안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구와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개편을 하여 지역의 현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조직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산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조직관리자문단」을 통해 분석하여, 자체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지 않거나, 재배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 운영 효율화 노력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표 2-3-2]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직 진단 추진 절차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많거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조직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심층 조직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층 조직진단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행정환경과 기능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인력 규모를 도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배치 방향을 컨설팅하여 조직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였다.

2)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능 쇠퇴분야 인력 등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신규 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인력 재배치 실적에 대해서는 시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난안전분야로의 인력 재배치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2-3-3] 정원 운영 효율화 우수 자치단체(25개)

구분	계	전년 대비 정원 감축 또는 동결		
		인력 재배치 3% 이상	인력 재배치 2% 이상 ~ 3% 미만	인력 재배치 1% 이상 ~ 2% 미만
계	25개	3개	1개	21개
시·도	3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시·군·구	22개	충남 금산군, 경북 의성군	경남 거제시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부산 금정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광명시, 강원 평창군, 충북 충주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전북 고창군, 전남 여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남 양산시, 경남 남해군

※ : 재난안전 분야 재배치 우수 자치단체(6개)

실적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가 효율화된 분야의 인력을 절감하거나, 부서 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해 인력 감축분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된 인력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등 재난안전분야를 강화하거나, 기업 지원(인허가),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데 활용되었다.

[표 2-3-4] 기능 인력 재배치 사례(예시)

- **인력 감축 분야**
 - ▶ 온라인민원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른 민원발급 인력 감축(강원 평창군)
 - ▶ 부서 내 유사기능 통폐합(보육운영팀+보육지원팀)을 통한 정원 조정(충북 충주시)
 - ▶ 탄소중립기능 민간위탁을 통해 탄소중립추진단(과)을 팀으로 개편(경북 의성군)
- **인력 보강 분야**
 - ▶ 자동차기업 인허가 전담인력 배치 등 일자리 확충 분야 강화(울산광역시)
 - ▶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및 인력 충원(전북 고창군)
 -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충 등 재난관리 인력 보강(전남 여주시)

3)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위원회 정비 기준과 정비의 기본 방향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그리고 매월 위원회 정비 현황을 조사하여,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독려하였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감축한 지방자치단체 14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2-3-5] 위원회 감축 우수 자치단체(14개)

구분	계	20% 이상	10% 이상~20% 미만	5% 이상~10% 미만
계	14개	1개	5개	8개
시·도	1개	-	-	1개
		-	-	전라남도
시·군·구	13개	1개	5개	7개
		울산 중구	서울 광진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중구, 전남 광양시, 전남 진도군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여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영암군, 경남 사천시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규모는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고,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되는 등 조직 확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책임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조직 진단을 지원하고, 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재무건전성 강화

지방공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 유 진
지방공공기관관리과 행정사무관 임 문 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조개혁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특히, 유사·중복된 기능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24년까지 총 48개 기관을 감축하였다.

한편,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 부채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부채중점관리기관 가운데 재무개선이 시급한 기관을 별도로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위험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관 통·폐합을 비롯하여 기관 간·기관 내 유사기능 조정 등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출한 구조개혁 계획에 덧붙여 지속적인 신규과제 발굴로 2024년 기준 구조개혁 과제 총 1,049건을 발굴, 817건을 완료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2-3-6] '24년 기준 구조개혁 과제 현황

유형		구조개혁 과제 총 1,049건 → 817건 완료
유사중복 기능조정	기관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지자체에서 66개 기관 감축 계획 제출(△48개 완료) * 예시) (대구) 대구환경공단 + 대구시설공단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관 간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개 지자체 · 84개 기관, 150건 조정 계획 * 예시) (대전) 대전사회서비스원(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대전교통공사 이관
	기관 내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개 지자체 · 335개 기관, 773건 조정 계획 * 예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렬 조정(실무→설비)을 통해 현장안전 관리 제고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지자체 · 11개 기관, 12건의 공동사업 등 추진 * 예시) (서울) 서울관광재단·지방관광공공기관 공동사무소 개소
민간경합사업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지방공기업, 48개 사업정비(민간위탁) 계획 수립 * 예시)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콘도미니엄, (안동시설관리공단) 학가산온천 등

특히, 2024년에는 구조개혁 추진 과제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관 통·폐합에 대하여 통·폐합 추진과정에 따라 기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관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관광공사를 포함한 8개 통합기관이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4년 구조개혁 우수 지방자치단체 14개를 선정하여 총 5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24.12월)하였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 6개, 기초 8개가 선정되었다.

2) 재무건전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 지정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기존에는 부채 1천억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정량지표(재무지표, 재무개선)를 통해 지정한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을 대상으로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고, 그중 재무위험 수준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해 공시·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은 재무지표 점수(총점 20점) 및 재무개선 점수(총점 2점)의 합산 점수 12점 미만인 기관이다. 재무지표 점수는 재무지표 평가틀을 통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기관 유형별 평가항목 및 항목간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7] 기관 유형별 재무지표 평가항목 비중

평가분야	재무지표	산식	반영비율		
			공사(6)	출자(5)	출연(4)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본	20%	20%	25%
	부채규모	총부채	20%	20%	25%
	차입금의존도	금융부채/총자산	15%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0%	25%
수익성	총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15%	20%	25%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15%	-	-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15%	-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영업비용	-	20%	-

한편, 재무개선 점수의 경우 부채비율·규모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할 경우 2점, 부채비율만 감소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정량지표에 따라 2024년도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을 지정한 결과, 지방공사 25개, 출자기관 34개, 출연기관 49개 등 총 108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지정 후보가 된다. 다만, 모든 후보기관을 부채감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채성격 및 증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대상기관을 지정한다.

[표 2-3-8] 부채감축대상 지정기준

- ① :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 ② : 완전자본잠식이며 당기순손실인 기관

2024년도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을 지정한 결과, 지방공사 3개, 출자기관 11개 등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출연기관의 경우 지정후보 기관들의 부채성격이 대부분 비유동·비금융부채에 해당해 이들 기관 모두 부채감축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이므로 이행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2024년 총 817건의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및 48개 기관통폐합 성과달성이 이루어진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3년에 부채중점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후속조치로 2024년도 부채중점관리·부채 감축대상 지방공공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기관 통폐합 등 그간의 유사기능 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후 조직융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복리 향상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4.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양사무 관리

자치분권지원과 주무관 박 소 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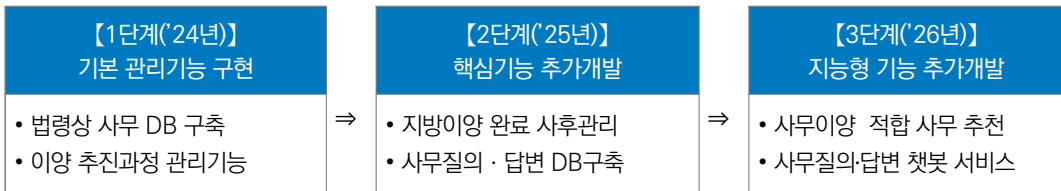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 중앙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역대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지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으며,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권 강화 등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시 조직인 위원회의 성격 상 폐지·신설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유실되거나 위원회 내부에서만 자료가 관리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정보접근성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이양 후 사후관리는 이양확정 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이양완료 시까지 중앙부처 이행상황의 점검·조치에 머물러 실제 이양 후 당초 의도한 대로 지역 발전, 주민만족도 제고 등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이양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24년부터 3단계에 걸쳐 '26년까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2-3-9] 사무이양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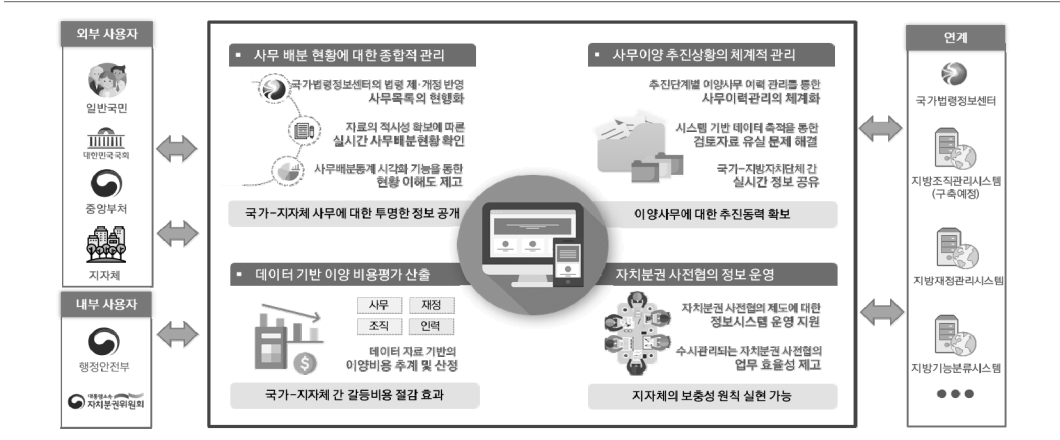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2022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고, 사무이양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을 설계하였다.

[그림 2-3-1] 정보화전략계획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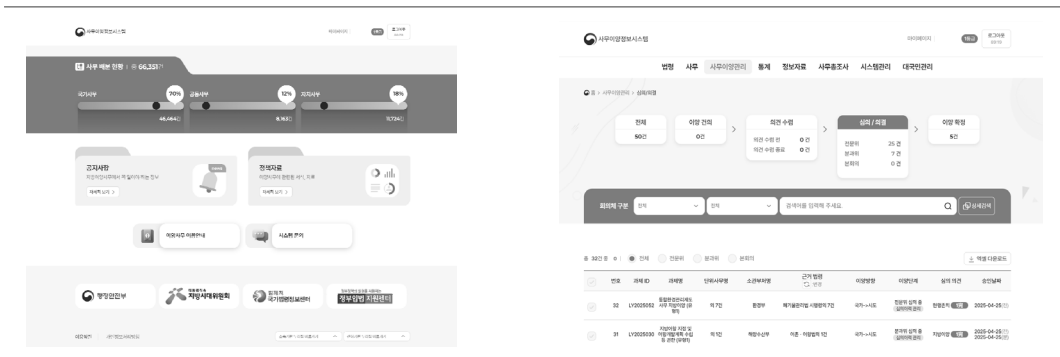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1단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1월에 사무이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등을 거쳐 5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임하여 발주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보안소프트웨어 등 5종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다.

2024년 5월부터 지방이양 발굴·의견수렴·심의절차 처리 등을 위한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였다, 또한 사무이양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주기적 현행화를 위하여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하였다.

[그림 2-3-2] 사무이양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결과



또한, 이양 대상사무 발굴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무배분 현황조사를 AI 기술 도입 및 기능 개발을 통해 자동화하여, 사무배분 현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사무배분현황DB의 상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2025년 2차 구축 사업에서는 이양이 완료된 사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사무 운영상황 파악을 위한 이력 및 모니터링 지표 관리 등 이양 사후관리에 관한 기능을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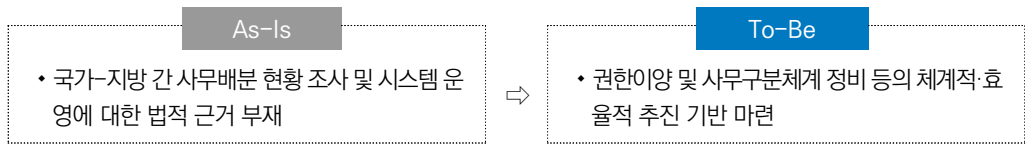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개정계획 마련과 함께 입법예고('25.1.22.~3.4.), 관계기관 의견수렴('25.1.20.~1.30.)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시행으로 사무배분 현황조사 처리 및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이양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2-3-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무배분 현황 등을 조사
-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결과의 확인 및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 요청
-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사무이양정보시스템은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2단계 구축을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향후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권한이양 및 사무에 대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5년 2단계 구축 추진되는 이양 사후관리 기능을 통해 지방에 이양된 사무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왔고 시행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이양사무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양 적합사무 추천 등 지능형 기능 개발 등의 3단계 구축사업을 2026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5. 지자체 기금·특별회계 성과평가 내실화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 여 성 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제159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운영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자원’으로, 재정의 통합적 운용을 어렵게 하여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기금 역시 「지방기금법」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원이 특정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묶여, 주민 복리를 위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

지방기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기금법」 제3조는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정기금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되기도 하며,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현행 협의 절차만으로는 법정기금 신설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불필요한 법정기금은 자체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협의와 자치단체 의견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기금도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기금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표 2-3-11】 기금 설치 관련 주요 법령

「지방기금법」 개정(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④ **〈신설〉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자치단체 법정특별회계는 자치단체 법정기금과 달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협의 절차가 없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특별회계는 일단 설치되면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은 특별회계는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특별회계도 「지방재정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기금법」과 동일하게 2024년 9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표 2-3-12] 특별회계 설치 관련 주요 법령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신설〉제2항 본문에 따라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③ → ④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 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총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 기금운용성과분석 내실화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성과분석은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 전체 기금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기금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전체 평균이 양호할 경우 개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성과가 낮은 기금이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기준」을 개정하여 개별 기금 단위의 평가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편성비율과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각 지표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기금을 1차로 선별하고, 이후 기금평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 미흡 사유, 존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12월 총 49개의 저성과기금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저성과기금에 대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예산 전환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권고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선권고가 2회 이상 누적되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법정기금과 법정특별회계의 신설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가 성과가 낮은 기금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재정협력과 주무관 조 한 운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주무관 이 기 영

II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이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기반으로 한 고유사무이므로 지방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방보조금의 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운영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공포, 7.13.시행, 이하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소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템e)을 도입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법」(2023.4.11.공포, 10.12.시행)을 개정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총괄 및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2023.10.25.)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방보조금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24.12.19. 일부 개정, '25.1.1. 시행)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5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 이외에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자가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구체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의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법정운영비보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특성별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운용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등급별 일정비율 할당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변경을 통해 당해연도에 한하여 동결 또는 증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체계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관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사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점검,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책임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24년 3회)하였다. 책임관 회의를 통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점검 결과 및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보조금의 특성상 법규 사항의 적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무가이드(2024.3.)’를 발행하였다. 가이드에서는 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지자체 점검사항 및 적발 요령, 감사 지적 사례, 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권역별 맞춤형 현장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표 2-3-13] 중앙-지방 부정수급 관리 협력 체계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 개정과 연계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5년에도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 성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지자체 관리 역량 제고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는 보탬e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 수행 점검 등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5년에도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7.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및 관리 분석 · 진단제도 운영

1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공유재산정책과 시설사무관 정 창 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전체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102조 원으로, 토지가 530조 원(48%), 건물 145조 원(13%), 공작물·유가증권 330조 원(30%), 기타 97조 원(9%)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평균 약 4.5조 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대한 공유재산 규모, 인력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하고 재정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였다.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 진단제도 도입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14] 공유재산 총조사 개요

- (개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유재산 현황 전수조사
 - (대상)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축물 5,394천 건
 - (기간/주기) '24.3월 ~ '25년 6월 / 5년 주기
 - (방법)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 일괄 대사를 통해 불일치 오류자료 추출 정비
-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기반 조성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를 일괄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첫 단계로 그간 자치단체별로 수집해야 했던 3종 공적장부를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일괄 수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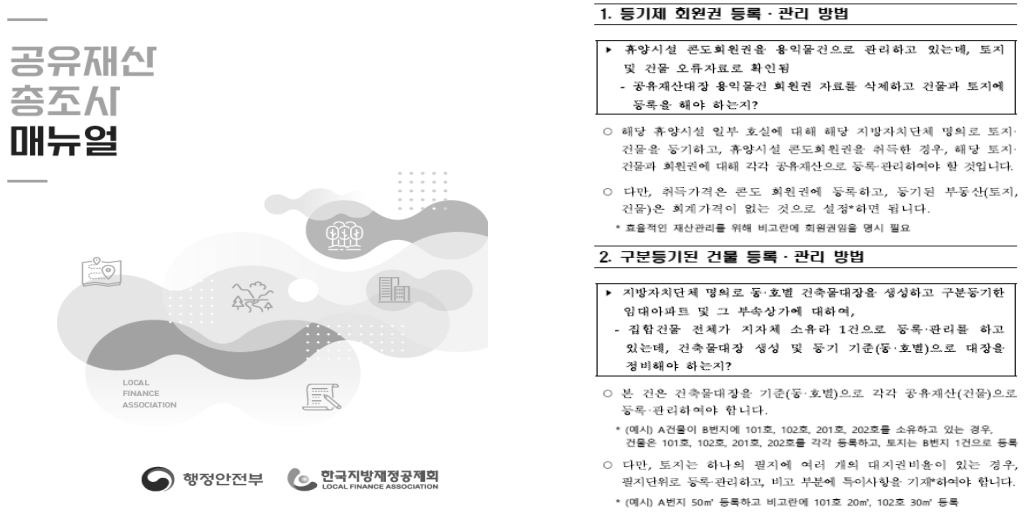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업을 통해 대장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24.4) 하여,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를 자동으로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였다.

[표 2-3-15]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 비교·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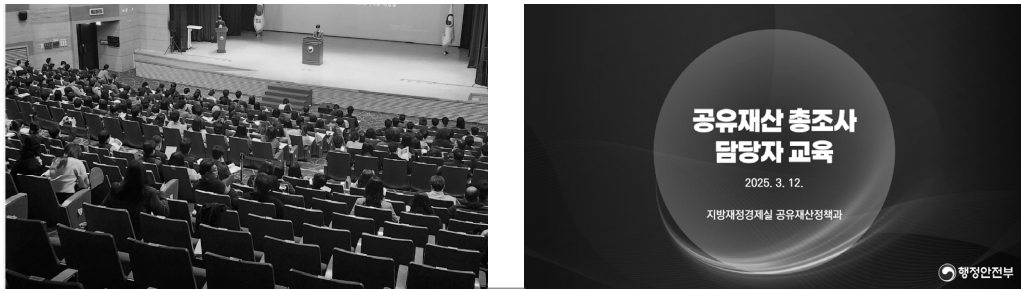
공유재산대장(행안부)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용도		
[건축물] 지번, 면적, 소유구분, 용도		
⇕대사		
부동산등기부(대법원)	=	토지대장(국토부)
[표제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항	대사	[토지표시] 지번, 지목, 면적
[갑 귀] 소유권 등 [을 귀] 근저당권 등	⇔	[소유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
		건축물대장(국토부)
		[건물현황] 지번, 면적, 용도
		[소유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마지막 단계로 총조사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류 유형별 정비방법 등을 반영한 ‘공유재산 총조사 운영 매뉴얼’과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배포(‘24.7)함으로써 지자체 총조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3-3] 공유재산 총조사 운영 매뉴얼 및 질의회신 사례집(‘24.7.)



[그림 2-3-4] 공유재산 총조사 설명회 개최(‘25.3.12.)



2)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관리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과정에 있어 정비율 부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실적 우수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여 정비를 독려했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5년 1월부터는 정비율 부진(하위20%) 40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주별 실적 점검을 통해 정비율을 독려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3)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성과 보상 및 홍보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실적과 관리 분석·진단 지표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적우수 9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및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총조사 교육·컨설팅에 따른 교육 현장과 공유재산 제도 및 활용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그림 2-3-5] 시상식 개최('25.1), 공유재산 총조사 ktv 방영('25.4)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하였고, 이 중 138만 2천 건에 대해 정비(정비율 85.1%)를 완료하였다. 특히 총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 3천 건을 정비하면서, 재산대장에 미등록된 15만 7천 건, 약 20조 원(대장가격 기준)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였고, 이는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가 가능해지는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누락 재산의 주요 정비사례로는 지자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새롭게 등재한 경우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총조사 법제화를 통해 5년 주기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공유재산 조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공유재산 관리 분석 · 진단제도 운영

공유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 영 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재산으로, 그 효율성과 투명성은 지방행정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자체 간 관리 역량의 편차가 크고, 관리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 단위에서의 정책 설계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 · 진단」 사업을 최초 도입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체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 공유재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진단지표를 통해 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결과를 시계열 통계로 구축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순한 평가를 넘어, 지자체 스스로 자산관리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2-3-16】 공유재산 관리 분석 · 진단 추진 개요

- (목적) 자치단체의 자율적 공유재산 관리 지원 및 국가 수준의 재산 관리 수준 향상
- (방향)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 활용 실적 및 현황을 분석 · 진단하여 재산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지표값을 활용하여 향후 정책추진 시 활용하도록 지원('24년 시범운영)
- (대상/유형) 243개 전 지자체를 광역 · 시 · 군 · 구로 분류한 후 광역은 시 · 도(2개)로, 시 · 군 · 구는 공유재산 규모(필지수, 가액)에 따라 각 4개 그룹(12개)으로 유형 분류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지자체 유형 분류 체계의 개선이었다. 기존의 8개 유형 분류는 필지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자산 규모나 행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필지 수와 가액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14개 유형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현실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체계 개편은 지자체 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평가 지표의 구성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개별 실적을 단편적으로 수치화한 지표들이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유휴재산 정보공개' 지표를 개선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표 2-3-17] < 전년대비 개선사항 > 정부정책 지표 연계 및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

- (지자체 유형) 기존 8개(평균 필지 수 기준) → 개선 14개(필지 수·가액 조합)
- (정부시책 반영) 행안부 연도업무보고 등 주요과제와 연계

구분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유휴재산정보 공개
기존	100점	개별지표
개선	150점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 지표로 통합

- (가점조정) 종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점 배점 조정(50점→15점)
- 지자체 담당자들의 지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분석·진단 지표정의서, 증빙자료 제출서식 마련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지표는 행안부가 자료 추출

또한, 실무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표 정의서를 배포하고 표준화된 증빙서식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지표는 결산자료 등을 통해 행안부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25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총 8개 지자체로부터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중 5건이 반영되었다. 무단점유에 대한 신규 발굴 실적과 변상금 부과 실적의 점수를 균등하게 조정하거나, 중복 지표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조직 신설 시 평가기준 보완, 사이버교육 인정 확대, 관재활동비 등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표 2-3-18]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주요 반영 내용

- 공유재산 관리 적극성 유도를 위해 ①변상금 부과 실적 및 신규발굴 점수 동일 조정
* 기존무단점유 신규발굴(30%), 변상금 부과(45%) → 개선무단점유 신규발굴(45%), 변상금 부과(45%)
-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로 인한 ②중복 지표 삭제로 업무 부담 경감 도모
* 기존대장정비 현행화 → 개선해당지표 삭제('26년도 지표 신설 예정)
- ③조직 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시점 정정 및 ④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도모
* 조직신설 시 신설 전 부서 근무기간 포함 및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 인정(3h)
- 공유재산 담당자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 담당자 격려를 위한 ⑤관재활동비 지급 추가(가점)

2024년 처음으로 실시한 관리분석·진단 결과 16개 우수 지자체에는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고,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운영되었다. 대구, 인천, 강원, 전남 등 4개 시도와 하위 8개 시·군·구에 대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표별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유휴재산 활용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공유되었다.

[표 2-3-19] 부진 지자체 현장 컨설팅 주요 내용

- 전년도 미흡 지표에 대한 안내 및 보완 사항, 금년도 지표 안내 등 점검자료 중심 컨설팅
 - ① 계획 수립 적절성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준수,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연계
 - ② 재산관리 분야 :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실태조사 후속조치, 대부료 · 사용료 · 체납 징수율 등
 - ③ 재산활용 분야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유휴재산 대부 등

[그림 2-3-6]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컨설팅 사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은 단순한 평가의 틀을 넘어, 지자체의 재산관리 역량을 키우고 제도개선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시도로 평가된다. 유형 체계의 개편과 정책 연계 중심의 지표 설계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였으며, 실무자의 평가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한 점도 평가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필요하다. 매년 분석을 추진하여 지자체별 공유재산 관리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분석·진단 지표값을 바람직한 관리목표로 삼아 지자체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성과 중심의 지표 개발, 사례 공유 기반의 플랫폼 마련,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체계(예: 예산, 조직, 인센티브)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ART

III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제1절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1. 지자체 CCTV의 AI 기반 지능형 관제 고도화

재난안전데이터과 주무관 구 윤 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자체 CCTV는 치안뿐 아니라 재난 모니터링에도 활용되지만, 전국 약 65만 대를 1명의 관제요원이 수백 대씩(약 477대) 감시해야 하는 인력 한계와, 숙련된 관제요원조차 중요한 위험 상황을 놓칠 수 있는 인지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꽃, 연기 등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AI CCTV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23년 4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지자체 CCTV를 AI 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2024년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체계 구축 방안”을 AI 대표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통합관제 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 신설 등 제도 개선과 함께 '27년까지 AI 관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실영상 기반의 AI 영상학습을 위한 제도 및 데이터관리 체계 정비

AI CCTV 관제 고도화를 위해 실제 재난 상황의 고품질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이거나, 현재까지 지자체 CCTV는 주로 육안 관찰에 의존하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는 연출 영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민간 기업들도 침수, 화재 등 실제 재난 상황의 영상을 요구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근거법 부재로 제공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CCTV의 재난관리 활용과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AI 기술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3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원본 영상 수집·활용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CCTV 실영상을 체계적으로 수집·정제하고 비식별화해 AI의 윤리성이 보장된 실영상 기반 학습데이터 제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의 이벤트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현재 4개의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IT 인프라를 지원하였으며 2027년까지 45개 지자체로 확대해 AI 기업과 연구기관에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습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AI-Hub, 공공데이터포털 등 정부개방형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2) 지자체 AI활용 CCTV 관제역량 강화 지원

현재 지자체는 AI CCTV를 통해 배회, 쓰러짐, 폭력, 밀집, 폭우, 도심화재 등 6가지 위험을 감지하고 있으나, 기업마다 기술 수준과 기준이 달라 관제 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땅꺼짐, 다중운집, 산불 등 새롭게 발생하는 재난 유형이나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재난의 경우 민간과 공공의 낮은 수요로 인해 기술 개발과 적용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6개 기본 탐지 모델의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충북 청주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범 적용(24.3~12월)하여 전국 확산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CCTV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증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탐재형 AI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및 화재 탐지(서울 서대문구), 멀티모달* AI를 통한 인파밀집·범죄·화재 감지(서울 광진구), 생성형 AI를 활용한 침수·화재 데이터 구축(경기 파주시), 산불 감지 및 예측(대구 군위군) 등 실증이 진행되었다.

* 멀티모달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결합해 서로의 관계를 학습 및 처리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CCTV 영상, 기상 상황, 침수 흔적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있다.

3) AI 기반 지자체 CCTV 통합관제 초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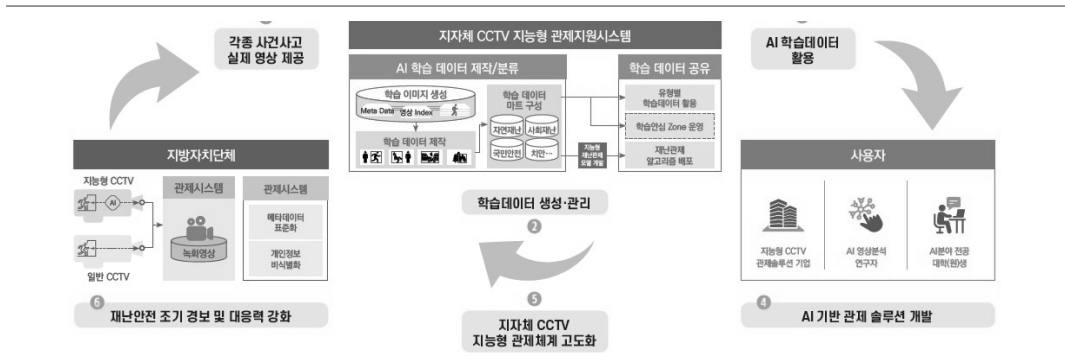
먼저, 지자체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와 재난안전관리 목적의 영상정보의 기관간 공유, 영상정보 분석 등에 AI 활용 등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의 예측·예방·대응 과정에는 질적·양적, 정형·비정형, 정적·실시간 등 모든 유형의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재난피해 가능성과 영향을 받을 지역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기술적, 문화적 벽에 막혀 이러한 데이터 공유와 융합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허물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기관 내 및 기관 간 영상데이터 공유(CCTV 관제센터-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 간 데이터 전송), 민간-정부 간 관련 데이터 공유(AI 학습데이터)가 가능해 졌고, 이러한 데이터의 융합과 AI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재난예측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AI 기반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관리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행정안전부는 전체 제도를 관장하면서 지자체 CCTV를 통해 실영상 기반 학습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업은 현장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AI 기술을 활용해 재난의 예측과 대응력을 높여 주민의 일상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오랜 규제속에 있었던 CCTV의 실영상을 바탕으로 한 AI CCTV 고도화 전략은 국민의 삶은 더욱 안전해지고 관련산업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1]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기대효과



2.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재난안전데이터과 주무관 이 경 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스포츠, 행사장, 종교시설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파밀집사고는 찰나에 발생하지만, 사람이 계속 밀집되다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인파밀집사고는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이 사전에 잘 모니터링되고 이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재난 자체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그만큼 위험상황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재난의 유형이다.

한국은 인파밀집사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으나,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2022.10.)를 계기로, 대규모 인파밀집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군중 밀집 지역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혼잡도에 따라 지자체에 알람을 제공하는 ICT(통신데이터) 기반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표 3-1-1] 주요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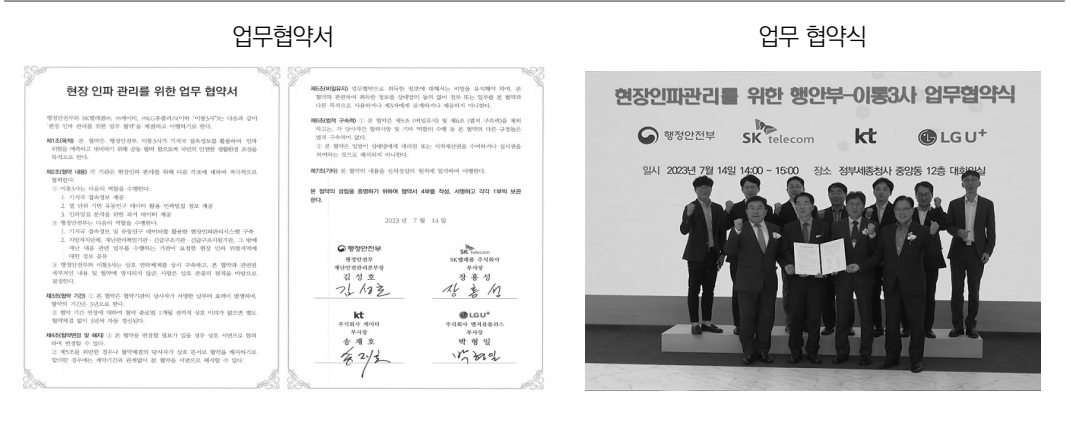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알고리즘 기준 마련('23.3월)
- 기지국 접속 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 '23.8월)
-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행안부-이통3사, '23.7.14)
- 시범운영(30개소, '23년10월) 및 정식서비스(100개소 '23.12월)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중점관리 대상지역 재선정(100개소, '25년2월)

1) 인파관리 통신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법 제도 추진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못지 않게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의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와 함께 데이터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동통신데이터는 익명화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파밀집 파악에 유용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활용할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였다.

기지국 접속정보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개정('23.5)하고 관련 고시 제정('23.8.)하였으며, 국내 이통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단발성 행사 등 다중운집 인파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신청하여 인파관리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데이터 확보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3-1-2]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2) 인파밀집 관리지역 100곳 운영 및 현장 활용 증대

인파밀집은 기본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도시지역, 또는 큰 축제나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파밀집 우려 지역을 수요조사한 후 지역별 위험도 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관리지역 100곳 선정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할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을 5차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제 정식서비스 개시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약간혼잡(3단계) 이상 인파밀집 알림이 총 67건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그동안 인파밀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현장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그림 3-1-3]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관리지역



III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그림 3-1-4]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밀집도 확인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재,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다중운집 인파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인파밀집 알림을 제공하여 현장의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일데이터(통신데이터 기반)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추가적 자원(CCTV, wifi, IOT, 드론 등)과 연계를 통해 통신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일률적 중앙 관리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지자체별 맞춤형 인파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1. READY Korea 훈련 실시

재난대응훈련과 주무관 강 지 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극한강우, 태풍, 지진, 산불,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재난을 대비하는 수단 중에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숙달하는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레디코리아 훈련,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어린이 훈련 등을 주관하고 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되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으로 관련기관을 총출동하며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READY Korea 1차 훈련(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 실시

주택단지 인근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위험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를 대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위험지역 내의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 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소방청·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하였다.

[그림 3-2-1] (1차훈련) 유해화학물질 제독



[그림 3-2-2] (1차훈련) 잔류오염도 조사



2) READY Korea 2차 훈련(항공기 사고) 실시

2024년 두 번째로 실시한 레디코리아 훈련은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증가함에 따라 급변풍(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관제탑에서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공항소방대 출동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 주변에 항공기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고, 인천 증구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로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를 실시하였다. 영종소방서는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18대를 동원하였고, 항공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폼(foam) 방수도 실시하였다. 증구 보건소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사상자의 증증도를 분류하고, 인천광역시 의료원·인하대병원 등도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하여 항공기 내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를 출동시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3] (2차훈련) 응급환자 헬기이송

[그림 3-2-4] (2차훈련) 종합 방수



3) READY Korea 3차 훈련(원전 주변지역 지진) 실시

세 번째로 실시한 레디코리아훈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주변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내 화재발생과 미미한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120km 떨어진 해역에서 두 차례 지진(규모 5.0→8.6)이 연이어 발생해 원자료가 정지되고, 보조보일러 연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훈련이 시작됐다. 새울본부 비상대책실은 119에 즉시 신고하고 종합상황실도 즉시 행안부, 원안위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원안위는 비상발령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가동하고, 한수원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남울주소방서는 긴통단을 가동하고, 18대의 특수차량(고성능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을 동원했다. 울산시·울주군·경상남도·양산시 등은 기차·선박 등 대피수단 동원과 이재민 구호소 준비 등을 실시했다. 위험이 고조되어 방사능사고 대응은 중대본 1본부(원안위)가 담당하고 지진·화재·주민보호 등은 중대본 2본부(행안부)가 담당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항공기와 부산경찰청의 헬기 등이 출동하여 방사선 항공탐사로 방사선의 외부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탐지 로봇과 시설정비 로봇 등 특수장비를 원전 내부에 투입했다.

이번 훈련은 훈련 최초로 중대본 1·2본부를 가동하고, 원안위, 울산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또한, 선제적인 지역주민 소개 및 실제와 같은 구호소 운영 등 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림 3-2-5] (3차훈련) 주민구호소 운영 **[그림 3-2-6]** (3차훈련) 로봇을 활용한 방사선탐사정비



4) READY Korea 4차 훈련(전기차 화재 대응) 실시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되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훈련상황으로 설정했다. 사고를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에 착수했다. 덕진소방서는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하여 입주민을 대피시키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관통형 배터리 직접주수장치, 질식 소화덮개 등을 동원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집중했다. 1차 화재 진압이 완료된 전기차를 지상으로 이동시켜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소화수조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호텔 내 고층 고립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구조했다.

이번 훈련은 훈련 최초로 민간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민, 직원 등과 함께 훈련하였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피 및 구조 방식(완강기·경량칸막이 등 활용한 자력 대피, 소방헬기·고가사다리차·굴절사다리차 고립자 구조,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였다.

[그림 3-2-7] (3차훈련) 주민구호소 운영



[그림 3-2-8] (4차훈련) 무인파괴방수차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4년 레디코리아 훈련은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1차 훈련(3.27.)은 환경부, 서산시 등 총 35개 기관 420여명 참여, 2차 훈련(6.5.)은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등 32개 기관 350여명 참여, 3차 훈련(9.25.)은 원안위, 울산시, 울주군 등 48개 기관 2,200여명 참여, 4차 훈련(11.20.)은 소방청, 전주시 등 48개 기관 59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매훈련 지자체 실무자부터 중대본부장까지 참여하여 실제 상황과 같이 대응하였다.

2025년 레디코리아훈련은 훈련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훈련기획부터 실시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장소 인근 위험요소 발굴 워크숍을 실시하고 정책·제도 개선점을 찾는 등 우리나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레디코리아훈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 행동 위주의 실전적 민방위 훈련 실시

민방위과 주무관 전 성 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민방위(Civil defense)는 군사방위(Military defense)와 달리 민간 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재난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민방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20세에서 40세 남성을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응급구조 등 민방위 대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72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진, 화재 및 공습상황 등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매년 실시하였다.

2024년도 국민 참여형 훈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실전적인 훈련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전국 주요 구간에서 차량 이동 통제를 실시해 주민 대피 훈련도 병행하였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참여와 협조로 훈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8월 공습대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 시 접경지역에서는 국지도발 등 주민 위협상황을 상정한 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을 통해 지자체는 군,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는 유사 시 자위적 대처능력 함양의 계기가 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3월, 10월)

2024년 실시한 총 4회 훈련 중 3월, 10월에는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피해의 대형화와 피해현장의 다양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주민대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월 훈련은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지역특성화 훈련이란 전국 228개 시·군·구별 과거 재난 발생현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재난유형* 및 훈련 대상장소(또는 시설)를 선정하여 민방위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재난 피해(23년 산불, 호우, 태풍)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게 훈련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실제 2024년 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일시대피를 유도한 효과이다.

*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진, 화재, 산불, 산사태 등

[그림 3-2-9] 지역 특성화 훈련



10월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단위에서 참여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내 종사자 대피유도 및 이용자 대피를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역할과 행동요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

행정·공공기관, 어린이집·초중교 및 다중이용시설(일부 백화점, 대형마트)이 참여하였고, 시설별로 직원·고객 대피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였다. 교육·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와 시설관리자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4시에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였고, 직원·국민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지정된 대피구역 등으로 대피하였다. 대피 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10] 다중이용시설 대피유도 및 대피 훈련



2)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5월, 8월)

해외 전쟁 사례를 고려하여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훈련을 5월과 8월, 연간 두 차례 실시하였다.

8월 국민참여 훈련 시 실질적인 훈련성과 달성을 위하여 5월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학교 참여 대상으로 사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민방위대원의 역할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인·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8월 훈련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림 3-2-11] 5월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대피훈련



8월 22일(목), 을지연습 기간 4일차에 실시한 공습대비 훈련은 적의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를 전국 동시에 발령하였고, 주민들이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였다.

학생 대상 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참여 훈련 등 특별훈련도 진행하였다. 그 중 백령·연평도 주민 대상 주민 출도 및 부상자 수용 훈련을 실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안전한 대피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훈련 효과를 위해 참여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응급처치·심폐소생술·방독면 착용법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민방위사태시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8월 훈련을 준비하는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지역인 충청, 충남, 대전, 전북, 경북지역에서 수습,

복구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해당 지자체*는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해 8월 22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7.8.~10. 호우, 7.16.~19. 호우 피해 지역)

- 충북 옥천, 영동 등 9개 시군구 단위 9곳 및 대전 서구 기성동 등 읍면동 단위 15곳

행정안전부에서는 훈련 전 2회, 훈련 당일 3회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하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영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하였다.

[그림 3-2-12] 8월 전 국민 대피 훈련



전시 군 작전차량 및 응급·구조 차량들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훈련인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실시하여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하였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안내하였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시·도별 주요도로에서만 5분 동안 통제하였고,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 티맵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구간 우회 안내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차량통제 훈련구간과 연계하여 국민, 기자 등이 동승체험하고 그 체험후기를 SNS 등에 게시하며 홍보하였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도 실시하였다. 주변 민방위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방법이었고, 훈련 후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그림 3-2-13] 차량통제, 소방차 길 터주기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연 4회 공습대비 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2회 실시하여 행정·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다양한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행동 방법을 숙지하고 직접 실습해 보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및 비상상황 속에서 신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 국민의 눈높이 맞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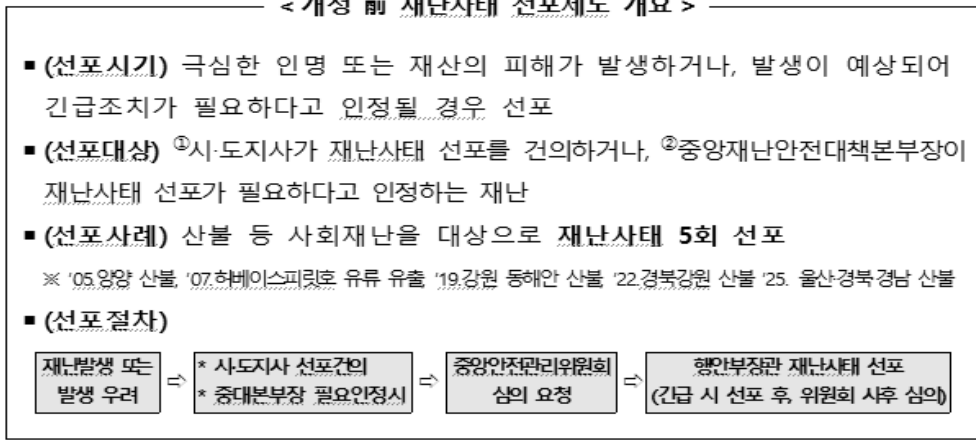
3.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확대 지원

재난대응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최 지 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3년 1월 27일,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안전관리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마련된 「법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함)이 발표되었다.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는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그 추진 전략 중 하나인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표 3-2-1] 재난안전법 개정 이전 재난사태 선포 제도 개요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장관만이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24년 1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6조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부터는 시·도지사도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까지 재난사태 선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선포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수행한 「지역 중심 재난대응체계 개선 방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확대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과업에 포함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단계,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들을 수록한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지침」을 마련하여 17개 시·도에 배포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재난사태 선포 4가지 요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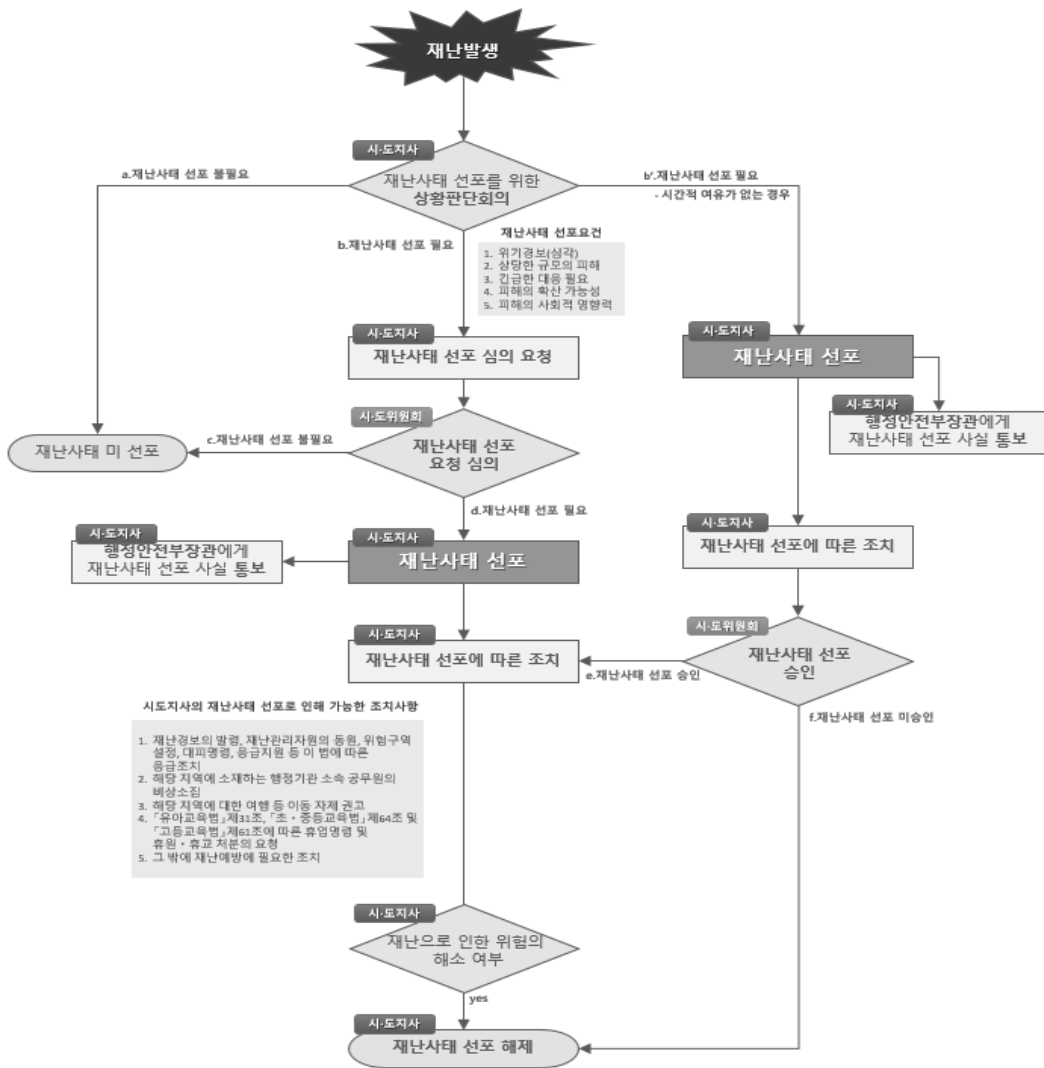
미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가지 정성적 요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78종의 재난 유형은 그 재난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재난사태 선포 시 기본권 제한이나 재정 지원 등 조치 권한이 더 강력한 해외 사례에서도 정성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표3-2-2]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요건

선포요건	주요 내용 및 예시
① 심각한 규모의 피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 시점에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 발생의 예상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다수의 인명피해(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지역 자체의 수습 가능 범위(자원·능력 등)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재정으로 복구가 어려운 수준의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특정 시·군·구에 극심한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 등 ✓ (예시) '07년 허베이 스퍼릿 호 원유유출과 같이 대규모 방제인력 동원 등 대규모 자원 투입이나 상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피해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의 공간적·시간적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재난 피해가 다른 시·군·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2년 구미불산가스 누출과 같이 유독화학가스·오염물질 등이 공기 수계로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2년 동해안 산불과 같이 인근 시도에서 발생한 재난이 관할 지역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③ 긴급한 대응(응급조치 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법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지역 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가 필요한 경우 ○ 각급 학교의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태풍으로 인해 도로, 교량, 학교시설 등이 파괴되거나 침수되어 지역 내 다수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등·하교가 불가능하여 각급 학교의 휴원·휴교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④ 복합재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순차적 혹은 동시에 발생하여 다양한 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는 경우와 같이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에너지, 정보통신, 공공행정망, 교통수송 등(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 기능의 마비 등) 다른 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지역 통신망 시설 화재로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통신망이 마비되어 심각한 주민 불편 초래 시

2) 재난사태 선포 절차의 체계화·구체화

[표 3-2-3] 재난사태 선포 절차



첫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재난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앞선 4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난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약식 절차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사태 선포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시·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시·도지사는 선포 심의를 위해 소방서장, 시·도 경찰청장, 교육감,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시·도위원회를 소집한다. 시·도위원회도 재난사태 선포의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포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한편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즉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나, 선포 이후 지체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난사태 선포는 즉시 해제해야 하고 선포의 효력은 상실된다.

셋째,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즉시 긴급재난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으로 공지하고, 주민에게 안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피해 확산 우려가 없어진 경우 또는 위원회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선포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②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③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④ 재난안전법 제37조 내지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는 재난현장 대응의 신속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사회재난 및 융·복합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사태 선포 체계, 요건, 절차 및 지원사항, 시·도지사의 권한 등 전반적인 제도를 균형있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4. 민방위·재난대피시설 공동활용

위기관리지원과 주무관 최 재 용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을 계기로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여 1~2일간 체류가 가능한 민방위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정부·공공기관 등의 지하 시설물을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약 17,000개소)로 지정토록 하여 국민이 적의 공습 등 민방위 비상사태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 외에도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약 15,000개소)을,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약 1,600개소)를, 산림청은 산사태 대피소(약 10,000개소)를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재난 발생에 대비해 소관 분야 대피시설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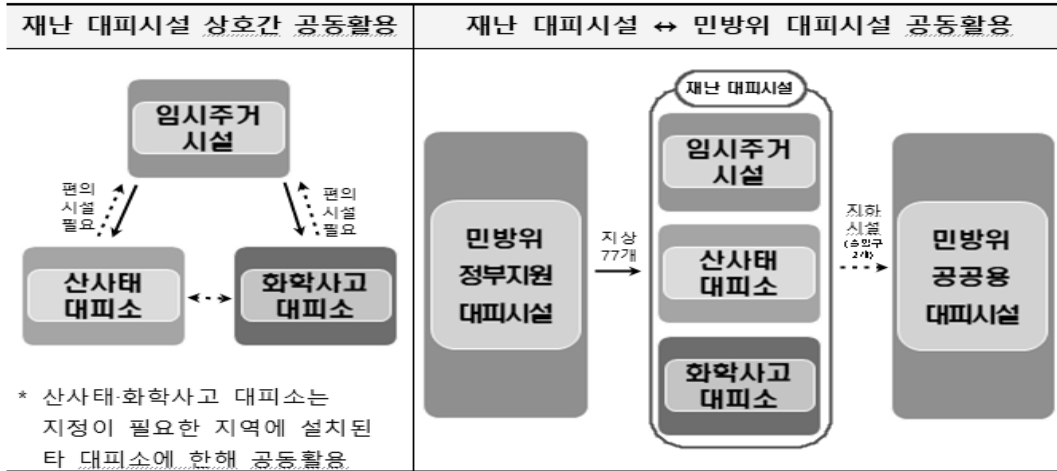
이에,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약 44,000개소의 대피시설을 재난 상황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방위·재난대피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주민 대피시설 공동활용 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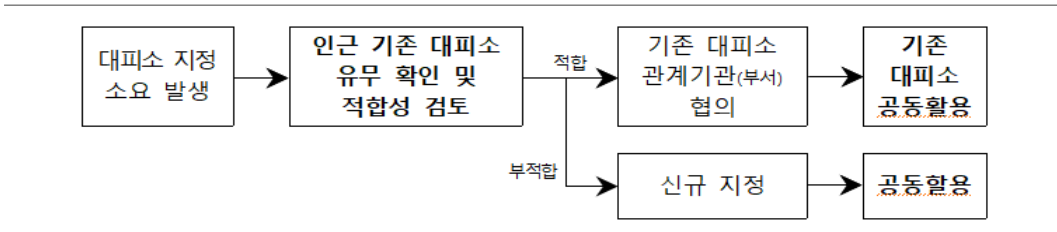
각종 대피시설간의 공동활용을 위해 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24년 5월 「주민 대피시설 공동활용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표 3-2-4] 대피시설 간 공동활용 체계도



또한, 동 지침에서는 각종 대피시설 신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인근에 설치된 타 대피시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후, 부합한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 신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3-2-5] 대피시설 신규지정 업무 처리 절차



2) 주민 공동 활용 대피시설 지정

주민 공동활용 대피시설을 지정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대피소별 소관부서를 총괄하는 「시·군·구별 공동활용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활용 표지판 부착 및 공동활용 대국민 홍보 등 대피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체를 통해서 대피시설 공동활용 활용이 가능한 대피시설을 검토한 결과, 약 44,000여개소의 대피시설 중 약 8,000여개소의 대피시설을 공동활용 대피시설(2층 약 5,500개소, 3층 약 2,500개소 등)로 지정할 수 있었다.

공동활용 지정을 통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기존의 대피시설 보다 약 200% 이상 증가하여 대피시설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체 대피시설은 54,000여개소로 약 24% 정도 증가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위 공동활용 대피시설 통계는 지자체에서 「주민 대피시설 공동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행안부·환경부·산림청 각 담당부서에서 공동활용으로 지정된 대피시설이 소관 대피시설의 기준에 부합하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향후 변경될 수 있다.

[표 3-2-6] 공동활용 지정으로 증가한 대피시설

구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산사태 대피소	화학사고 대피장소	민방위 대피시설	계
기존용도 (A)	14,939	10,125	1,602	17,167	43,833
공동활용으로 인한 증가(B)	3,425	3,421	3,624	13	10,483
계(A+B)	18,364 (+22.9%)	13,546 (+33.8%)	5,226 (+226.2%)	17,180 (+0.1%)	54,316 (+23.9%)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대피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추가적으로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대피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이 한층 높아졌다.

제3절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1.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정비

재난경감과 시설사무관 정 순 한
재난경감과 주무관 최 희 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국토면적의 약 63%가 지형의 기복이 심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도심생활권지역의 확대에 인하여 산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행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위험 사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주택 및 도로, 공원 등과 인접한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이 증가되고 있고 붕괴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제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한정된 국토와 사업자의 개발욕구에 따른 절취사면의 대량 발생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후대책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급경사지 붕괴 예방대책을 위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제도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급경사지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6년 2월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급경사지의 지정, 급경사지의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7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7월부터 시행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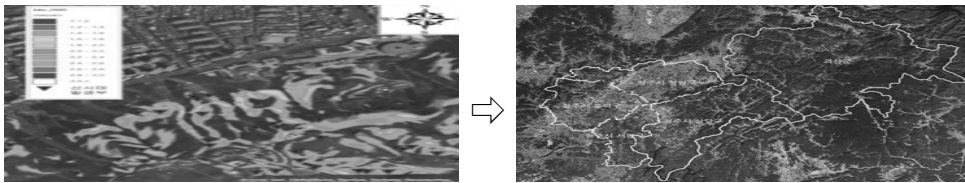
1)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으로 미등록 급경사지 발굴 및 안전관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국 급경사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0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하였고, 2021년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하여 2024년까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를 발굴·등록하였다.

2025년까지 약 4만 개소 이상의 급경사지가 신규로 등록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낙석·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3-3-1]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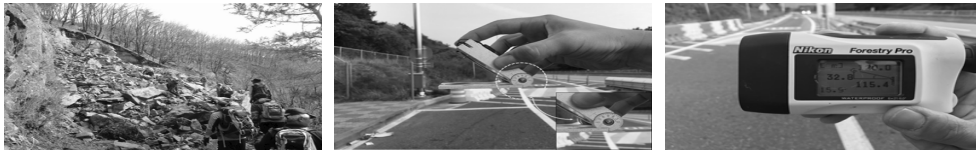
- (1단계) 대상지 선정
 -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별하기 위해 GIS 분석을 통해 위험지 추출
 - 붕괴위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별 할당



경사 및 피해 우려 분석

실태조사 대상지 추출

- (2단계)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 등급 결정
 - 전문가가 직접 급경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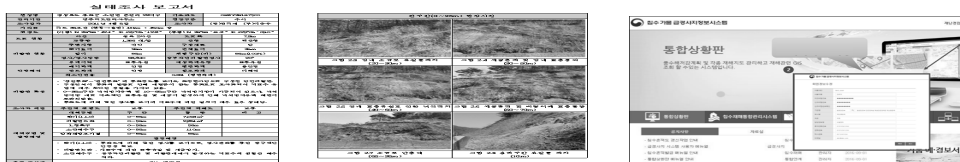


전문가 현장조사

클리노컴퍼스 측정

레이저 측정기

- (3단계) 급경사지 등록 및 DB 구축관리
 - 관리기관은 제공받은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급경사지 등록·관리



실태조사 관리카드 제공

급경사지 등록, DB 관리

[표 3-3-1] 급경사지 관리대상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목표)
급경사지	16,071	16,571	20,128	32,878	45,000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지·도로·철도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주택 등과 최단거리가 3m 이내인 경우 3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자연비탈면 또는 산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정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D·E등급(필요시 C등급)이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한 붕괴위험지역의 붕괴로 인한 재해위험요인 사전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표 3-3-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및 추진현황(최근 5년간)

(단위: 억원, 개소)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산(국비)	1,826 (913)	1,902 (951)	1,872 (936)	2,168 (1,084)	2,982 (1,491)
개소수(신규)	185 (70)	193 (98)	222 (106)	253 (93)	276 (111)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50%) 지원 가능

[그림 3-3-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효과



주택 밀집지역 급경사지



급경사지 정비로 붕괴위험 해소

3) 법·제도 정비

최근 들어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극한호우 등으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미등록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조사·계획·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 인접 급경사지에 대한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정비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법 제5조의 2	●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
법 제13조의 2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시공 기준 마련 근거 신설	개정
법 제17조	●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 표지 설치 규정	개정
시행령 제2조	● 주택 인접 인공 비탈면 높이 기준 개선(5m→3m)	개정
시행령 2조의3	●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규정	개정
시행령 제15조의 6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 내용 규정	개정
시행규칙 제2조	●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	개정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에 대한「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지침」,「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최근 이상기후로 극한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에 접한 급경사지의 경우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급경사지 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인명피해 및 붕괴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급경사지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기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관 김 용 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4년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연초 가뭄재난 주관기관인 행안부가 당해연도의 가뭄 종합대책 수립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으며, 수립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가뭄 대책의 수준과 내용이 상이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대책이 T/F 구성 현황, 인프라 정비(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상수관망 정비 등), 위기단계별 행동사항만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어 실제 가뭄발생 시 실행계획으로서의 역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추진

2024.6.28. 정부입법으로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를 명시하는「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행안위 의원실에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개정 노력을 통해 2024.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25.1.7. 공포, '25.7.8. 시행) 하였다.

[표 3-3-4] 가뭄 대비 조치 명시 및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제32조의2)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선 가뭄 대응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우리부는 매년 초 공문으로 지자체의 가뭄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대책 수립을 의무화(제32조의2) → 지역별 책임성 있는 가뭄 대비 대책 수립으로 가뭄 재난 관리의 철저 도모 * 우리부는 대책의 내용, 수립, 시행에 관한 컨설팅, 기관 간 협력을 지원

2) 지자체 가뭄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안) 마련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및 내실 있는 가뭄대비대책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가뭄 행동 매뉴얼과의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전 지자체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 여부, 물 절약 캠페인 대책 포함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5년 지자체 가뭄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그림 3-3-3]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지자체 의견수렴



[표 3-3-5] 가뭄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추진목적, 추진방법, 주요업무
- 가뭄 현황
 - 기상 현황 및 전망, 농업용수 현황, 생·공용수 현황, 가뭄 예·경보 발령 현황
- 가뭄 대응 체계
 - 가뭄 대응 T/F팀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업무, 가뭄 위기경보 단계, 위기경보 단계별 생·공용수 분야 추진 대책, 위기경보 단계별 농업용수 분야 추진 대책
- 가뭄 종합대책
 - 가뭄 대비 추진사업
- 부록
 - 수리시설 및 장비 현황, 가뭄 발생 시 홍보(캠페인) 계획, 비상연락망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1세기 전반기('21~'40년)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현재111일→미래 100일) 할 것으로 전망(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2년) 되고, 기온, 강수량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증가 전망(아태기후센터, '23.12월) 되는 상황에서 최근 22년('02~'23년) 국내 물 사용량은 증가 추세로 1인당 일 평균 물 사용량의 경우 22년간 15.1% 증가(환경부 「상수도」 통계('24년) 하는 등 가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그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5년에는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가뭄 대비 조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뭄 상황 발생 시 실행 가능한 대비 대책 수립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112·119 산불·산사태 신고정보 산림청 공유

예방안전제도와 주무관 조 용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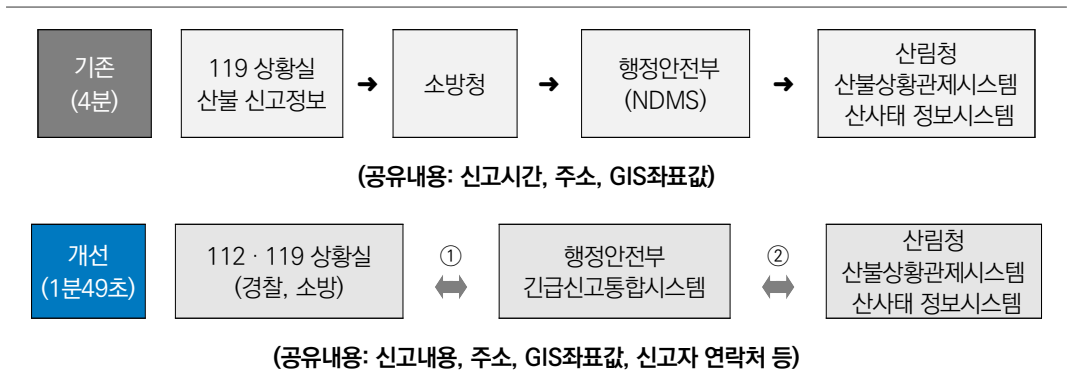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산불과 산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이다. 특히 산불은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사태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지반 약화 등으로 예고 없이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고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산불·산사태 신고 정보는 119 및 112를 통해 접수되더라도, 산림청으로의 정보 전달 체계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긴급기관과 산림청 간의 신고 내용의 직접 연계가 미비하여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산림청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고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소방·산림청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산사태 신고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3-6] 산불·산사태 긴급신고 처리 개요(기존·개선)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산불·산사태 신고 정보의 전달체계 단순화 및 시간단축

기존 NDMS(국가재난정보시스템)를 통한 신고정보 공유 처리시간은 평균 4분이 소요되었으나, 긴급신고 통합시스템과 산림청 시스템 간 직접 연계를 통해 평균 1분 49초로 단축되었다. 이는 약 2분 이상의 공유시간 단축으로 이어졌으며, 실시간 대응체계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3-3-7] 산불·산사태 긴급신고 처리 평균 소요시간

구분	산불·산사태 긴급신고 절차	평균 소요시간
기존체계	긴급신고 → 소방청·NDMS → 산림청	0:04:00
개선	긴급신고 → 산림청 연계	0:01:49

2) 신고정보 표출 항목 확대

산림청 상황판에 표시되는 산불·산사태 정보는 기존의 발생일시, 접수일시, 주소 외에도, 신고자가 남긴 신고내용이 추가로 표출되어 현장 상황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산림청 상황실은 현장 대응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자원 배분이 가능해졌다.

3) 산불 신고정보 연계

전국 17개 경찰청 및 19개 소방본부의 신고시스템에 산불·산사태 공동대응 요청 기능을 구현하였다. 산림청의 경우 상황관제시스템에 산불·산사태 공동대응 요청 수신 기능과, 요청 접수 시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기능을 도입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내 산불·산사태 공동대응 요청 흐름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 전송 여부와 시간 기록, 실패 건수 등을 자동으로 집계하도록 하였다.

4) 산사태 신고정보 연계

산사태는 산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이지만, 피해규모는 산불에 준하는 재난으로 분류된다. 산림청 내부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도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연계 추진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산림청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집중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산사태 정보도 산불과 동일하게 신고내용과 함께 실시간 공유되도록 구조를 통일하였으며, '산림청(산사태)' 선택 시 자동으로 '[산사태]' 문구가 입력되도록 UI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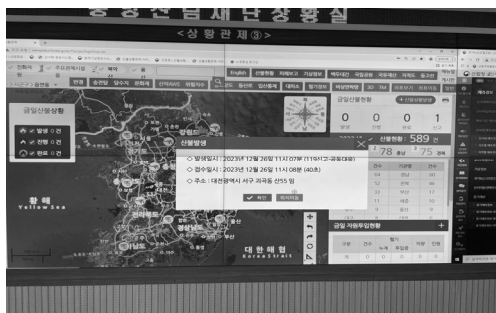
[그림 3-3-4] 산림청 상황실 운영상황 보고('24.3.18.) [그림 3-3-5] 신고정보 연계 기술검토('24.2월)



5) 주요 일정 및 성과 요약

- ① 산불 신고정보 공유 시범 서비스 운영 : '24.1.10.~1.25.
- ② 합동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홍보 : 1.30.
- ③ 산불정보 연계 정식 서비스 개시 : 2.1.
- ④ 산사태 정보 공유 기술검토 및 협의 완료 : 2~5월
- ⑤ 산사태 기능 설계 및 구현 : 2~6월
- ⑥ 산사태 기능 시험운영 : 5.1.~6.30.
- ⑦ 산사태 정보 공유 정식 서비스 개시 : 8.1.

[그림 3-3-6] 신고정보 연계 테스트('23.12월) [그림 3-3-7] 처리시간 단축 검토('24.2월)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시스템 개선은 단순히 기술적 연계에 그치지 않고, 긴급상황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소방·산림청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상황실 접수자)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어 시스템 활용률도 높아졌다.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에서는 주기적인 긴급신고 연계 훈련, 긴급신고 접수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긴급기관을 대상으로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재난안전법」제3조에 근거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으로 긴급신고 연계 확대를 추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산림청 시스템과 연계된 신고정보의 수신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접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 상황실에 직접 독려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락이나 지연 없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후 이 체계를 지자체 및 타 재난관리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4절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1. 국민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문화활동 강화

안전문화교육과 주무관 이 진 호
주무관 박 준 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사회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또한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 추구하고 정부 주도의 규제적 안전관리에 치우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일상 속에서의 안전 실천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을 위한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라는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을 조성하고자 안전체험시설 확충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종합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전체험 거점을 마련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체험관은 일상생활, 교통, 자연재해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실질적인 대응법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1단계로 2016년에 전국 단위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8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울산에 첫 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 경남 등 순으로 7개소가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지역은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11월에 경기, 전남, 경북 등 6개 지역을 선정, 2024년에 국민안전체험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별로 설계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1] 국민안전체험관 현황

구분	지역
1단계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서울 도봉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경기 오산시 • (중형) 충북 청주시, 경상남도 합천구, 제주도 제주시
2단계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경기도 의정부시·파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상주시

※ 운영 중 7개소, 건립추진 중 7개소(1단계 서울 도봉구, 2단계 6개소)

2) 세대별, 맞춤형 안전실천 캠페인 전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인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을 개최하여 분야별 안전 상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최초로 열어, 어린이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안전노래, 안전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각 대회 우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그림 3-4-1]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24.9.10.) [그림 3-4-2]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24.9.11.)



이와 함께,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MZ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10개 대학의 10개 팀이 참여한 ‘안전실천 캠퍼스’를 운영하였다. 각 팀은 전공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교내 방화문 및 비상구 확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캠퍼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전개하였다.

[그림 3-4-3] 안전실천 캠퍼스 안전교육 ('24.7.5.~9.13.)

[그림 3-4-4] 안전실천 캠퍼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24.7.5.~9.13.)



3) 민·관 협업 안전문화 활동 강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안전실천 캠페인인 ‘안전 한바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맞춰 각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는 안전 한바퀴는, 시기별 재난안전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종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안전문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등산로 주변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범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4-5] 안전 한바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24.3.) **[그림 3-4-6]** 안전 한바퀴 우천대비 점검 활동(‘24.5.)



또한, 사회공헌활동 협약기업과의 캠페인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CSR: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2년간 총 23개 기업 및 기관으로 업무협약 범위를 확대하였다. 협약 기관들은 기관별 자원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생활 속 안전수칙 전파 활동은 물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안전 골든벨 개최 등 공동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림 3-4-7]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공유(‘24.12.) **[그림 3-4-8]** 어린이 안전 일기장 제작(‘24.7.)

6 대국민과 함께 고속철도 안전문화 활동으로 「절대안전」 SR 핵심가치 실현

(주)에스알

| 우수사례 요약 |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등)를 포함하여 모든고객이 안전하게 고속열차를 탈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 및 메타버스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안전문화 트렌드 선도




| 주요 활동 |

- (주)에스알의 핵심가치인 「절대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SR 안전골든벨 등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행사 추진
- > 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사고지대 발굴 등 재해감감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 에스알 - 협력사 - 유관기관 등 합동 안전문화 활동 전개

< SR 안전골든벨 등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행사 추진 >

- 안전 상시 퀴즈를 풀고 성취 우수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행사인 안전골든벨 개최로 자연스러운 안전지식 함양에 앞장섰습니다.
- 협력사와 함께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통한 PCR 수행능력 향상, 인적요류의 운행장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철도사고 예방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철도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요청 안전골든벨 시행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철도사고 예방 경연대회

한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와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의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썼다.

[그림 3-4-9]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설명회 ('24.5.13.)



[그림 3-4-10]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설명회 ('24.5.14.)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국민안전체험관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이고 질 높은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체험관 맞춤형 체험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하며, ‘국민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안전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과 누리집 연계를 통한 예약방법 등을 소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대별 맞춤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전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안전개선과 행정사무관 송 정 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1.1명으로 OECD 국가 중 21위에 불과했다. 1995년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하였지만,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어린이 안전개선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6월 이를 보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2026년까지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세계 7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을 주요과제 중 하나로 삼아 보도,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다 2004년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2022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국비분(1,988억)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는 재정을 보전해주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서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통학로 주변 보도,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전국 308개소에 약 1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국 98개소에 85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림 3-4-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례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250명에서 2024년 1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22년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4명으로 2016년의 1.1명에 비해 약 1/3로 감소하였으며 OECD 순위도 2016년 21위에서 2022년에는 8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원이다. 어린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승강기 안전수준 강화

승강기정책과 주무관 권 순 철
주무관 신 지 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1914년 승객용 승강기 최초 설치 이후, 승강기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 필수시설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층 건물과 지하 공간이 늘어나면서 승강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승강기 보유대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 811,602대, 2023년 840,049대, 2024년 866,669대를 넘어서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2] 전국 승강기 보유량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승강기 보유대수	718,795	749,845	780,467	811,602	840,049	866,669
전년대비 증가율	5.1%	4.3%	4.1%	4.0%	3.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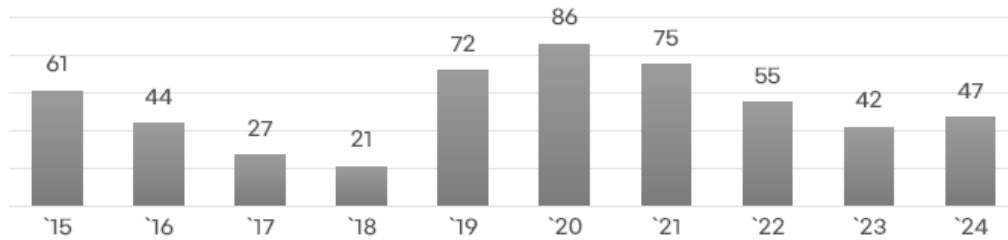
이처럼 승강기는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용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도시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3-4-3] 최근 10년간 승강기 사고 추이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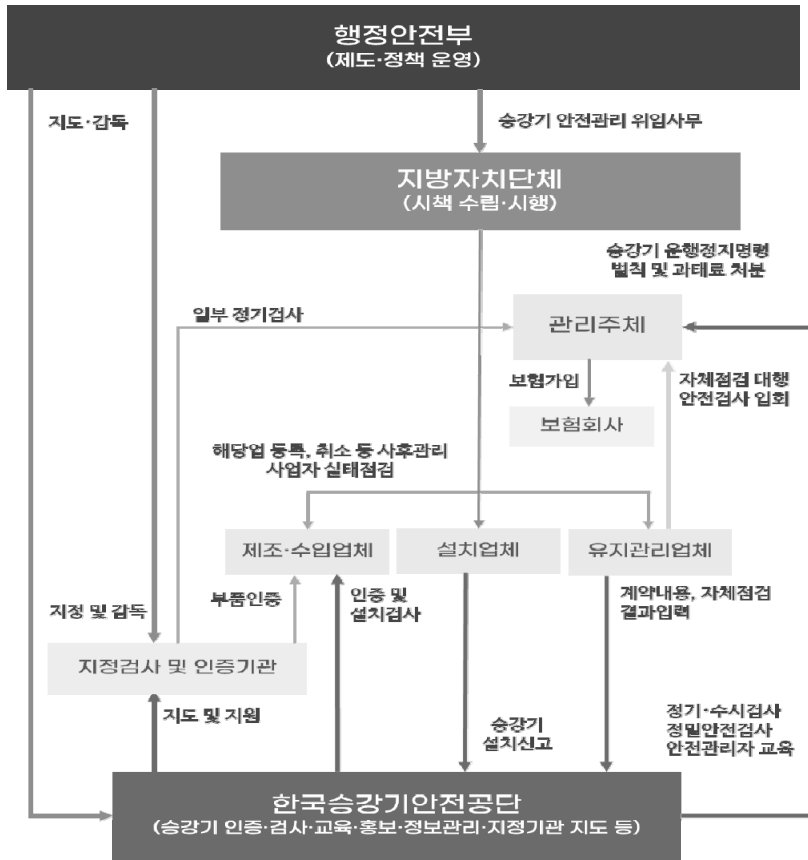
자료: 국가승강기정보센터('24)

이를 위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정비

[표 3-4-4]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도



승강기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1991.12.31. 제정)」을 개정(총 44회)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정 계획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법령과 제도의 정비 방안,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는 인증대상 축소,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인증 개선 실무 TF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TF는 총 9차례의 정기 회의를 통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대상 품목을 줄이며, 대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2)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실제 사고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군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공공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같은 안전 부품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5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사항 전파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개정하였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승강기 제조설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운행 사례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 법령 준수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승강기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는 승강기 설치 후 21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주요 8대 안전부품 의무설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미비한 곳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설날, 추석명절이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 점검에서는 특히 승강기 주요 부품 작동상태, 이용자 넘어짐 사고 가능성, 역주행 위험 등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3) 승강기 안전 홍보 및 교육

승강기 안전사고 중 많은 부분은 이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중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을 안고 탈 때 주의사항, 여유 있게 탑승하는 방법,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였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재를 제작해 보급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승강기 정책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어깨띠, 배너, 리플릿, 기념품 배부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그림 3-4-12] 승강기 안전이용 공익광고 홍보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무빙워크 안전이용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 사회에서 승강기 중요성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 제도 개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4. 안전신문고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

안전개선과 전산사무관 이 재 훈
안전개선과 전산주사보 정 상 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은 점차 예측 불가하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등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여름철 일정한 흐름을 보이던 장마 기간이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로 변하고 있고, 장기적인 폭염이나 한파 등이 잦아지고 있다. 도시 지역 강수 집중 현상으로 침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존의 통계나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극한 기상 현상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전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기본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안전사고의 발생은 우리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발생 시기와 지역에 따른 적절한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면 그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수단 중 하나가 국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발생한 재난·안전 사례, 관계기관(지자체 등) 의견,

안전신문고 신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절별 신고 유형을 선정하고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4-13] 안전신문고 계절별 집중신고제 앱 구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계절별 집중신고제 유형 선정 및 의견 수렴

계절별 집중신고제는 ①계절별 유형 선정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② 집중신고제 운영 및 홍보, ③ 결과 및 성과의 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유형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 혹은 금년의 대책 기간을 검토한다. 대책 기간은 각 부처의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시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과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절별로 발생이 높은 위험 요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고, 안전신문고에 이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해연보, 재난연감을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전 안전신고를 대상으로 신고 빈도를 판단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유형은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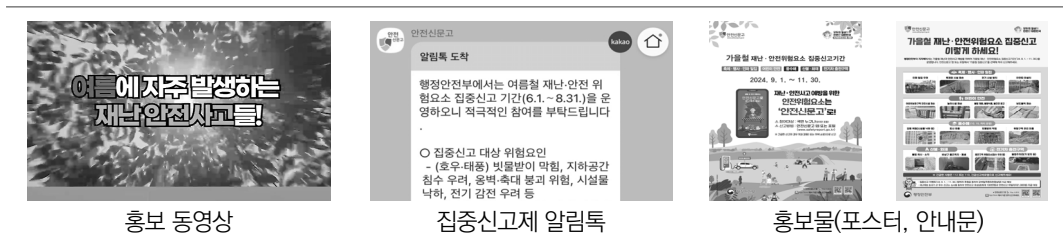
[표 3-4-5] 2024년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 기간 및 신고 분야

구분	운영 기간	주요 신고 분야
겨울철	'23.12.8.~'24.2.29.	대설, 한파, 화재, 산불
봄철	'24.3.1.~5.31.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여름철	'24.6.1.~8.31.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가을철	'24.9.1.~11.30.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 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2)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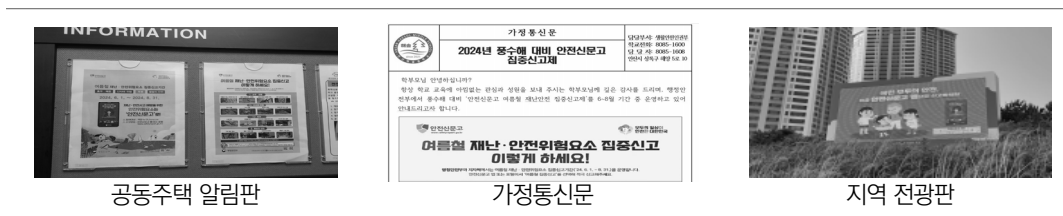
계절별 집중신고제는 특정 시기 동안 한정된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만큼 신고 활성화에 있어 시의성이 있고 반복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제 홍보를 추진하였다. 우선 계절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알림톡을 통해 안전신문고 회원 대상으로 집중신고제가 운영함을 알리고 신고 유형, 운영 기간 등을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매체의 경우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 포스터, 안내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자체로 공유하였고 지자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매체(전광판,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를 활용하여 국민이 집중신고제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특히 축제·행사가 많은 행사철에는 축제·행사장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그림 3-4-14] 계절별 집중신고제 홍보 현황(행정안전부)



지자체 외에도 관계 부처를 통한 홍보도 진행하였으며, 봄·가을철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집중신고제에 어린이 안전이 유형이 포함되어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등 어린이 관련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신고제를 홍보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인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신고제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했다. 또한, 국민 생활 공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입주인 알림판이나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 생활할 중심의 매체에 집중신고제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림 3-4-15] 계절별 집중신고제 홍보 현황(관계기관)



3) 계절별 집중신고제 결과 및 성과

계절별 집중신고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유형을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신고건수를 비교하였으며, 모든 기간에서 전년 대비 신고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안전신고 증가율 대비 집중신고의 증가율이 높아 집중신고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4년 여름철의 경우 전년 대비 안전신고는 9.1% 증가한 반면 집중신고는 19.9%가 증가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빗물받이 막힘 등 풍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안전한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집중신고의 증가는 국민의 관심도 확대를 의미하며, 이에 맞춰 처리기관은 시의적절한 처리와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집중신고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신고 접수 시 각 지자체의 담당자 혹은 상황실 등에서 신고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포함한 알림톡을 발송하여 확인이 늦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호우나 폭염 등 안전과 관련된 시기가 도래 시 수시로 분석 결과(신고건수, 처리율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고 처리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단순 신고 접수·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에 대해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다. 계절별 집중신고제 기간 중 실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 효과에 기여한 우수 신고를 심사 후 선정(계절별 10~15점)하여 20~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여름철은 행락객 방문이 잦은 지역에서 낙석 방지책이 파손된 신고가 최우수 신고로 선정되었고, 가을철은 변화가 지역에서 공사장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신고가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여 최우수 신고로 선정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계절별 집중신고제는 국민이 계절별로 발생이 높은 위험 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참여형 안전신고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신고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인식 제고와 제도 활용도가 지속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계절별로 반복되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안전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항목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로 시의성과 현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집중신고의 증가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처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담당자 혹은 상황실에 신고 접수 시 알림톡을 발송하고 수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 처리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집중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앞에서 논의한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할 예정이다.



PART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제1절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1.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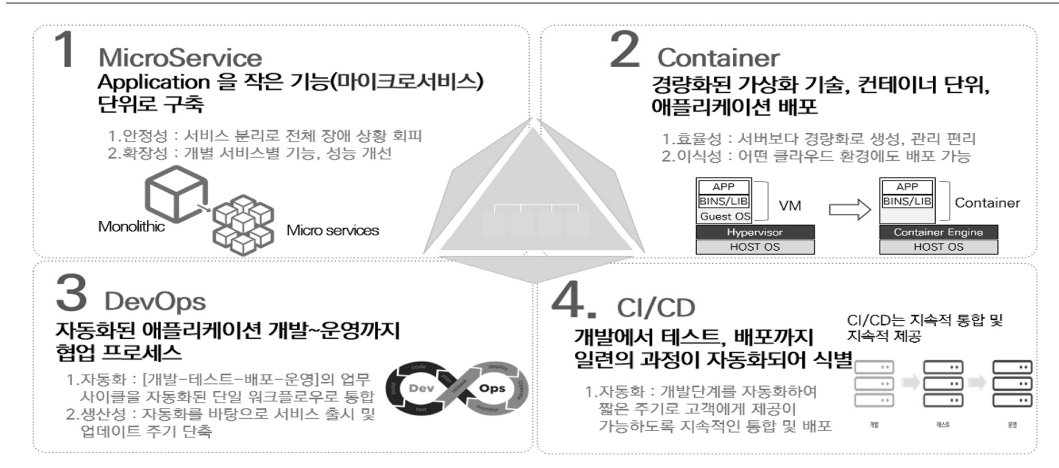
디지털기반안전과 전산사무관 박재웅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업무혁신과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보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술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안정성, 신속성, 확장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능별 분리 구현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전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및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여 빠르게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집중되더라도 자동으로 자원을 증설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4-1-1]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



2023년 1월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시스템 업무 중요도 분류에 따른 클라우드 영역별 보안 기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2024년 10월에 발표된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5~’27)’을 계기로 정부의 정보화 정책 방향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클라우드 기술 도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23.10)하여 단계적으로 범정부 기관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디지털정부 사업 혁신전략’을 수립(‘24.10)하여 기존 클라우드 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내부 업무시스템 중 업무 중요도 상등급에 해당하는 ‘온나라 지식’, ‘온나라 이음’ 시스템과 중등급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행정기관 최초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전환을 완료(‘25.3)하였다. 또한 총 89개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적합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서비스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당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등 12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였다.

[표 4-1-1] '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스템 목록

기관명	시스템명	기관명	시스템명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지도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울주군청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홈페이지	경기도소방학교	스마트교육관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경기도	공공기관 G-포털
	국토공간정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

전환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안 요구 수준이 높은 7개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내에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입주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 배치하였고,

상대적으로 보안 요구 수준이 낮은 5개 시스템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위치한 클라우드 환경에 배치하였다.


[그림 4-1-2]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검토 회의자료 및 전환사업 참여 MSP 간담회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필요성

CNAPP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플랫폼 전반에 걸쳐 가상 자산, 계정,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호

✓ 기존의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검사 같은 방법으로는 데이터상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의 새로운 보안 개념 필요.

레거시 환경 보안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보안 - CNAPP	도입 효과
- 단일 시스템 보호(물리/가상) - 방화벽, IDS, IPS, SIEM, AV, SW, FW, etc.	- 가상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 보호 -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데이터센터 - 서비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 온프레미스	- 가상 자산, 계정, 애플리케이션 등 보호 -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 환경 보호 - 방화벽이 손상된 클라우드 자산 보호 - 제3자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 오존유스 취약점 등 위험 감지 - 클라우드 사용자 이상행위 탐지
		-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 환경 보호 - 방화벽이 손상된 클라우드 자산 보호 - 제3자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 오존유스 취약점 등 위험 감지 - 클라우드 사용자 이상행위 탐지



2)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기반 조성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업무절차를 정비하였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은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에 안내하였다. 개발과 운영의 통합발주는 개발사업자가 운영까지 책임지도록 하여, 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기존에는 개발과 운영을 별도로 발주하면서 개발사업자가 안정적인 운영까지 책임지기 어렵고, 운영사업자는 개발사업자가 인수인계한 정보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초기 운영 단계에서 안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운영 통합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의 서비스·기능의 개선 및 추가가 필요할 때 즉시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년 10월경 기관에 배포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디지털정부 사업 혁신전략」은 정보화 사업 제도 개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사업 추진, 클라우드 성과관리 기준 마련 등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보화 업무

담당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24.11)하였으며,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정책 외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기반 클라우드 전환 정보 현행화, 이행점검 계획, 클라우드 이용안내서, 비용최적화 가이드라인 등 실무 지침도 함께 공유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적용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1-3] 2024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설명회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순 'Lift & Shift'* 방식 대신 응용프로그램의 구조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로 재설계하고, 자동화된 배포·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공공 정보화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축된 시스템은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속 기능개선 지원사업'과 네이티브 전환 과정의 전문기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초기 도입 검토, 예산 수립, 구축·운영 등 전 과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운영 가이드'도 배포될 예정이다.

* Lift & Shift: 기존 시스템을 응용 프로그램 구조 변경 없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으로 옮기는 클라우드 전환 방식

2.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

디지털기반안전과 전산사무관 송 영 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각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 자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는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 역량(인력, 예산 등)에 따라 점검유형, 점검항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저장공간 설정 용량 초과,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본 설정값 오류·미흡 등 사전 점검으로 조치가 가능한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보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장애와 잠재되어 있는 장애 발생 위험까지 해소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점검유형, 점검주기, 점검항목을 표준화한 예방점검체계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보시스템 표준 예방점검체계(안) 마련

우선, 공공부문 대표 데이터센터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현장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과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년 운영노하우가 반영된 실제 운영중인 예방점검체계를 기반으로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민간클라우드센터에서 운영중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요 민간 클라우드 운영 기업에 예방점검 방법, 예방점검항목 점검 유무, 예방점검 유형별 운영 유무 등 현황을 조사하였고 주요 기업과의 간담회(3월, 6월)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업체의 의견수렴(6~8월)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4-1-4]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기업 간담회(3월, 6월)



또한 표준예방점검체계(안)을 실제 적용해야 하는 행정부처와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에 의견을 조사(5월, 8월)하여 전문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비하여 단일기관의 개별 시스템 운영 역량, 다양한 환경,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점검 대상 조정, 점검항목의 최적화, 점검주기 완화, 단계적 시행 등을 반영하였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정부서비스까지 포괄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민간 선진사례 조사, 방향설정단계부터 기본(안) 마련, 구체화, 보완 등의 전 과정에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의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별점검’은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기간 또는 매년 진행된다. 사용자가 많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진단’은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예방점검기준 및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전 행정·공공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시스템 장애 최소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관련 내용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정부의 기반인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정보시스템 및 장애 등급제 전면 개편

디지털기반안전과 전산사무관 진 승 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총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의 기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에는 정보시스템 장애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시스템 등급과 관련된 규정이 빠져 있고, 장애 관리도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정한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가이드’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정보시스템 등급제가 명시되어 있긴 했으나, 이는 주로 보안 등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등급 및 장애 등급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역 디지털협력과에서 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예규)’도 있으나 지자체에 한정된 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 등급 및 장애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4년 1월 말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들이 합동 발표한「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및 장애등급 제도 신설, 1·2등급 핵심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및 장애 총괄 대응 관련 규정을 전자정부법에 명문화하는 과제도 포함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마련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및 ‘서비스 파급도’의 세 가지 측정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등급 부여 결과를 정보자원관리 시스템(IRM)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6,000대 가량의 정보시스템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IRM에 등록하여 관리 중이다.

[표 4-1-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 기본적으로 ‘업무 영향도’ 등 3개 측정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점수별 1~4등급으로 부여
 - 업무 영향도(40%) : 서비스 중단 시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제·사회 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사용자 수(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점수 차등 부여
 - 서비스 파급도(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그 외 표준배포시스템 또는 유사시스템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해당 등급으로 바로 지정

앞으로는 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 교체와 같은 예산 투자 및 관리, 장애 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시스템 등급을 기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표 4-1-4] 등급별로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

1등급	2등급	3 ~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관리 재난 위기대응 (장애등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장애 조치 및 기관 내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안전상황실에 장애 발생/완료 보고 (장애등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표준운영절차 마련 (8개 중 5개 절차 간소화 적용) ▶ AP 표준운영절차 마련 (9개 중 6개 절차 간소화 적용) ▶ 표준 예방점검 수행(점검 권고) ▶ 정보시스템(3·4등급) 및 운영시설(중·하 등급)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장애 관제, 모니터링툴 도입, 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 교체, DR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절차(HW, AP) 마련, 표준 예방점검 수행, 정보시스템(1·2등급) 및 운영시설(상 등급) 현장 조사, 장애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관리계획 수립, SLA 체결 등 		

2) 장애등급 산정기준 마련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과 별도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해 ‘장애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가 아닌 서비스가 잠시 지연되는 상황을 장애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장애가 발생한 시점과 서비스가 정상화된 완료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여 서비스 중단과 지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DDoS 공격 등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지연도 장애에 포함하는 등 장애 유형을 정의하였으며 장애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나 일부 지역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대국민 영향도가 낮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평상시보다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 보정기준도 마련하여 산정기준에 포함하였다.

[표 4-1-5]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발생시간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지역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시
서비스 중요도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 투자(모니터링 툴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및 업무 연속성 관리, 장애 상황관리 및 재난 위기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있어 정보시스템 등급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의 변화 및 법·규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등급 및 장애등급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4. 통합 거버넌스 기반 장애관리체계 구축

디지털기반안전과 과학기술서기관 이 태 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존의 장애관리체계는 각 행정기관에서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개별 기관의 역량에 따라 기관별 장애관리 체계 및 대응 복구 등의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범정부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장애발생 내용, 원인, 해결방안 등이 기관별 공유되지 않아 동일원인의 장애가 발생하여도 장애 해결을 위하여 장시간 소요되고 장애 발생 내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아 대국민이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등 기존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관리하는 장애관리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강화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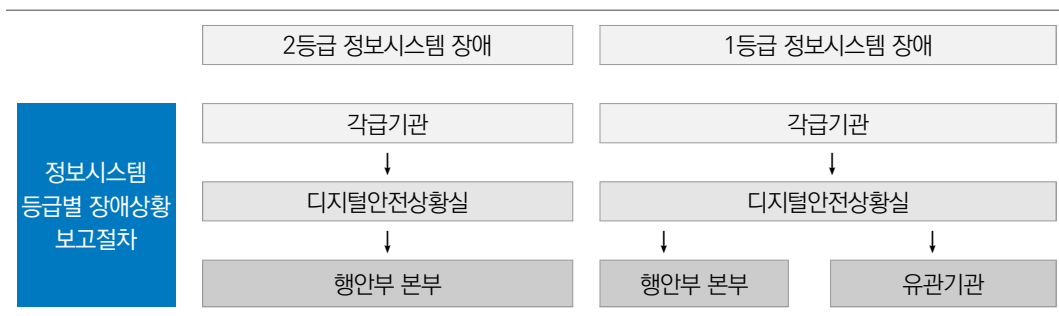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장애 발생 등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국민이 받는 영향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 서비스 중단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의 파급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별 차별화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중요한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공유, 전파하고 복구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안전상황실'과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하여 장애상황 전파, 공유, 복구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4-1-6] 디지털안전상황실 장애상황 보고 체계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국민에게 장애의 내용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가 다른 곳을 통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도 마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7)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등), 행안부·총리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할 있도록 하였다.

범정부 정보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각종 정책기준도 마련하였다.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 항목·기준을 제공하는 범정부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대응·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예방, 대응, 사후관리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표 4-1-7]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구분	절차명	내용
예방	요청관리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공식 접수·처리
	구성관리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 NW 등 구성에 대한 사항 관리
	변경관리	• 정보시스템 변경작업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제공
	이벤트관리	•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탐지·관리
	서비스수준관리	• 고객기관·사업자와 서비스 관리수준을 사전 정의·관리
대응	장애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복구를 위한 관리
	백업관리	• 정보시스템의 백업/복구를 위한 관리 방법 및 체계
사후관리	문제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의 근본원인·해결방안의 도출 및 관리

전자정부법 개정(‘25.1.7)을 통하여 범정부적 장애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4-1-8] 장애 예방·대응·복구 거버넌스

대상	역할
중앙사무관장기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통보, 장애관리계획 관리
행정안전부	각 기관의 장애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각 기관	수립지침에 따른 장애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에 관한 대한 규정도 법으로 명시하였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 건축설비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및 그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 권고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표 4-1-9] 장애 예방·대응·복구 거버넌스

대상	역할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안정성 점검 및 개선권고
각 기관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예방점검과 더불어 장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하고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장애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상황 관리체제와 장애상세 원인 규명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표 4-1-10] 장애 예방·대응·복구 거버넌스

대상	역할
중앙사무관장기관*	정보시스템 종합상황실 구축·운영, 장애 원인분석 및 개선권고
각 기관	장애발생상황 통보 및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등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다. 평가 및 발전방안

범정부적인 장애관리 거버넌스체제 마련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장애상황 통보 및 총괄 관리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부터 정보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각종 정책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장애관리체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장애관리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이 '25.1.7일 개정되고 '25.7.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의 마련 및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장애관리계획 수립, 장애사후관리체제의 정착,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고시 제정 등 아직까지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미 마련하여 추진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마련하여야 하는 정책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관련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개선되어 디지털정부의 기반인 정보시스템이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폐합

공공서비스통합과 방송통신사무관 이 우 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시도·새울 접속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 등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 장애로 확산되었다.

이에 2024년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정보시스템의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비 절감 및 시스템 관제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통폐합 기준·절차 마련

2024년 4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통폐합 제도를 마련하였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유관 정보시스템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여 정부업무평가(중앙 행정관리 역량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폐합 예외기준을 수립하여 기관에서 통폐합 예외를 요청할 경우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폐합 예외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표 4-1-11]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제도

- **(기본 원칙)** 통폐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3등급 이하 시스템은 '26년까지 통폐합 추진
- **(추진 방식)** ①1~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통폐합 또는 ②기관내 3~4등급 시스템들과 통폐합을 통해 1~2등급으로 구축 방식 중 택1
- **(예외 심의)** △기관 대표 시스템(대·내외 각 1개), △현장 설치가 불가피 경우, △슈퍼컴퓨터 등 시스템 특성상 통합이 불가한 경우 등 통폐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폐합 예외 인정

2) 정보시스템 통폐합 제도 설명회 및 교육 개최

중앙 및 지자체의 성과관리 담당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관설명회’(24.4.22.,온라인), ‘20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24.5.2.,서울, 5.3.,온라인),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설명회’(24.5.22.,온라인)를 개최하였고, 통폐합 제도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림 4-1-6] '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24.5.2., 서울)



[그림 4-1-7] '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24.5.3., 온라인)



3) 정보시스템 통폐합 제도 개선 추진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의 구축 목적, 운영 상황, 통합 난이도, 관리주체 등 시스템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통폐합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기관별 통폐합 역량, 시스템별 통합 난이도, 예산 등에 따라 2026년까지 일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6월 통폐합 기준을 개선하였다.

[표 4-1-12] 지자체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내용

- 지자체·공공기관 특성을 고려, 통폐합 기준을 4등급으로 완화
- 정보시스템별 운영 상황을 고려, 통폐합 예외 인정 범위 확대
 - ※ 전면 재개발 추진 중인 시스템, SaaS 형태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등

- (1) 기관 대표 대국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
- (2) 기관 대표 내부업무용 정보시스템
- (3)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 (4) 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 (5) 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정보시스템
- (6) 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 (7) 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 필요 정보시스템
- (8) 타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배포시스템
- (9) 전면재개발 중인 정보시스템
- (10) 서비스(SaaS) 형태 이용 정보시스템
- (11)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 (12)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 (13) 그 밖에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 지자체·공공기관별 내부 상황 등 통폐합 역량 고려, 통폐합 자율성 확대
 - ※ '26년 통폐합 완료율 우선 검토하되, 기관 내부 사정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통폐합 계획 수립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24년까지 중앙 3·4등급과 지자체·공공기관 4등급 중 1,784개가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41개가 폐기되어 442억원(추정금액)의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절감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계획의 변동, 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폐합 예산 미확보, 등급 조정, 통폐합 추진 중 이슈 발생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폐합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관의 의견청취 및 통폐합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174종의 행정정보를 기관 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3월 행복출산 윈스톱 서비스, 예방접종비·산후조리비 지원 등 102개 서비스 구비서류 감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였다.

[그림 4-2-2]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사례



먼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민원 소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감축 대상 공공서비스와 감축 방안 등을 상·하반기에 교육하고, 협력 행사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구비서류 제로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그림 4-2-3] 세종시 협력 강화



[그림 4-2-4] 구비서류 제로화 교육



또한, 각 기관에서 공동이용을 신청하거나 업무처리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서비스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를 공고문,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전산망을 통해 업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의 노력으로, 연말에는 학교 입학준비금, 교통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임대주택 청약,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포함해 총 421개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으며, '25년부터는 해당 서비스에 제출해야 했던 연간 1,000만건 이상의 구비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2-5] 구비서류를 감축한 주요사례



국민들은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기관 또한 문서 보관 및 관리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중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민원 처리 속도 모두가 개선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는 행정·공공기관 채용, 노인복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900개까지, 2026년에는 1,498개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제도 정비,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2.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주민과 주무관 김 예 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인감증명서는 1914년부터 부동산 거래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2년에 중앙·지자체 산하기관 사무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1,002건을 정비하고, 2018년에도 중앙·지자체 사무 810건을 정비하였다. 그럼에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 9월 중앙·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608건의 정비가 필요한 사무를 확인하고, 이중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사무와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후 단계적 정비를 시작했다.

우선 1단계(~'24. 6월)로 폐지의견이 컸던 관행적 요구사무 142건과 기관 자체 폐지 의견사무 765건, 2단계(~'24. 12월)로 존치의견이 많았던 관행적 요구사무 153건과 기존에 폐지한 사무와 유사한 사무 495건, 3단계(~'25. 6월)로는 1단계 폐지사무와 유사한 사무 590건을 정비 완료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었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간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온 관행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무별로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업무의 성격 및 유형을 분석하고, 기존 정비 사례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비의 추진배경과 취지를 각 기관에 설명하고 담당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독단적인 방식이 아닌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협의를 통해 소관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2024. 3월·8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효율적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법제처에 일괄 정비를 요청하여 7개 부처 16개 법령*이 2024. 7. 30. 개정됨으로써 27개 사무를 정비했다.

* 행안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소방청, 8개 시행령, 8개 시행규칙

2025. 6월 3단계 정비 완료 결과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2,153건을 정비하여 당초 목표인 2,145건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참고로 대표적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였고,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 사례 등이 있다.

[표 4-2-1] 정비유형 및 정비현황

구분	미제출로 전환 (42.6%)			타 서류로 대체 (52.7%)		기타	합계
	관행적 요구폐지	관련제도 (사무)폐지	구비서류 삭제	신분증 사본대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합계	295 (13.7%)	242 (11.2%)	381 (17.7%)	313 (14.5%)	822 (38.2%)	100 (4.7%)	2,153 (100%)
중앙	3 (4.8%)	6 (9.7%)	16 (25.8%)	10 (16.1%)	27 (43.6%)	-	62 (100%)
지자체	292 (14%)	236 (11.3%)	365 (17.5%)	303 (14.5%)	795 (38%)	100 (4.7%)	2,091 (100%)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편의성과 정부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한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재산권과 관련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무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에 향후 법원과 협의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폐지하거나 신분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신원확인 시 인감증명서 제출보다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민간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

행정정보공유과 전산사무관 박 경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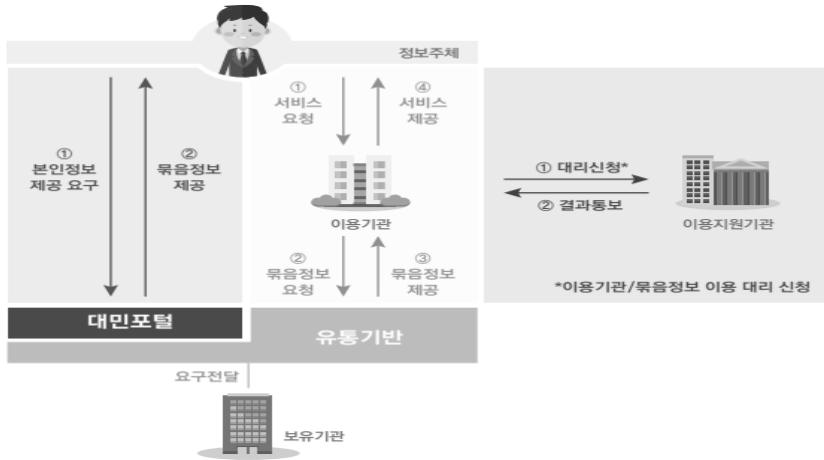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데이터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며 정보주체인 국민·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혹은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년 12월 전자정부법에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활용의 법적 근거(제43조의2)를 마련하여 정식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에 크게 일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기존 행정·공공분야 위주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통신·금융 등 민간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감축 및 권리주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4-2-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

'21년 12월 근거법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의 시행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다.

'24년 12월 기준 제공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맞춤형 서비스는 '23년 105종에서 '24.12월 139종으로 확대 제공 중에 있고, 국민 요구에 따라 본인 행정정보 6.8억 건, 활용 서비스 약 3.9억 건 이상을 제공하는 등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현재도 활용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각종 민간분야(금융 등)의 비중이 크다.

2) 통신·보험·증권 등 국민 생활 밀접형 민간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계한 통신 분야 서비스('24.2.)를 개시하였다. 통신요금 가족결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명의변경 및 군 요금제 가입을 위한 군복무 정보 확인 시 일반 국민들이 관련 구비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가족 관계 확인('24.10.)으로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국민 수요가 많은 보험·증권 분야에도 서비스를 확대하였는데, 자동차 사고 접수·보상청구 및 증권계좌 거래한도 해제 신청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고,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별도 제출 없이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공공 및 금융·통신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제출서류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민간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제출서류를 데이터로 직접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내부업무 효율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림 4-2-7] 민간 서비스 확대 관련 보도자료(통신,보험,증권)

**현대전화 가족결합 확인,
종이서류 없이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24.2.)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민등록표 내지 않아도 보험 처리**
(경향신문, '24.9.)

**증권업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
(각 언론사, '24.11.)

3)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설명회 및 대국민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통신 등 민간 분야로의 제공 확대와 관련 35개 언론사를 통해 대국민 언론 홍보('24.2.)를 실시하였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관련 안건 심의 및 민간분야 활용 서비스 승인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통신·보험·증권 등 민간분야 서비스 이용 승인과 더불어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2024 정부박람회에서 서비스 체험, 홍보 영상 상영 및 국민참여 이벤트(커피차) 운영 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홍보하였고, 방문자들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개 자료(리플렛)도 배포하였다.

[그림 4-2-8] '24 정부박람회 구비서류 제로화 부스-공공 마이데이터 운영



[그림 4-2-9] '24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커피차 이벤트('24.11. 13. ~ 15.)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분야는 공공, 금융, 통신뿐만 아니라 교통·무역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공공 마이데이터의 권리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민간 분야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지속 정립을 통하여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모두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공공서비스통합과 주무관 백진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디지털정부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 제고, 서비스 편의성 증대, 정보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의 구축 및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 및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국민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번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서비스마다 이질적인 사용자 화면과 중복된 인증 과정 등으로 인한 불편이 존재하여 2017년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 포털 및 그외 정부 서비스 등을 정부24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은 개선은 되었지만, 정부24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같이 기관 홈페이지를 ‘바로가기’ 등으로 단순 연계만 하는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각 기관의 정보 서비스가 별도의 인증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 인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화면 구성과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기 어려운 사용자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24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와 서비스 확장으로 시스템 중량화와 운영환경 비확장성 등도 하나의 개선사항이다.

이에 범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 포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기본계획 수립

통합창구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 ISP(정보 전략 기획) 사업('23)에서 도출한 핵심과제(▲정부 서비스의 통합 이용 환경 제공 ▲사용자 중심의 통합창구 구현 ▲유연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구축)를 반영한 3개년('24~'26)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2-2]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주요내용

- **(범정부 서비스 통합)** 이용빈도가 높은 기관의 주요서비스를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개별 제공 중인 서비스를 추가인증 없이 연계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친화적 UI/UX 설계, 모바일 앱 사용성 개선, 정보 취약계층 편의 향상 등
- **(통합 기반 구축)** 민간협력형 클라우드 이용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설계 및 구축, 통합창구 공통기능 개발 및 이용 확대 등

[표 4-2-3] 연도별 대상부처 및 서비스 연계 계획

구분	'24년	'25년	'26년
직접서비스형	40종	40종 이상	40종 이상
상호연계형	400종	400종	500종
대상기관	5개 기관 ※ 국세청,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대법원	8개 기관 ※ 국토부, 관세청, 금융위, 식약처 등	30여개 기관 ※ 그 외 중앙행정기관

2) 1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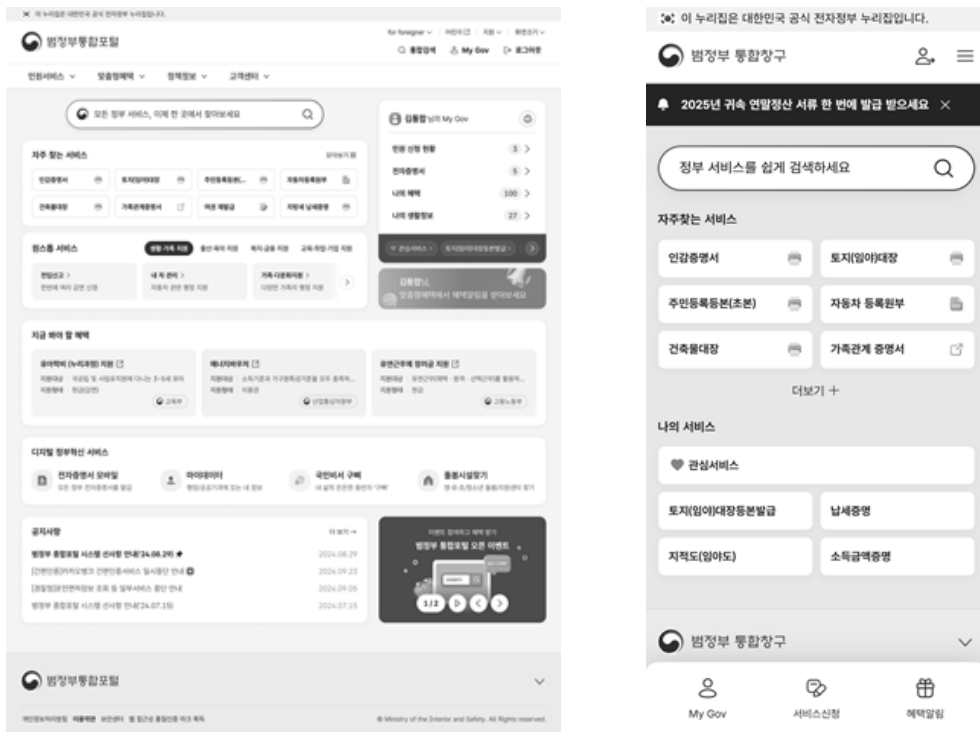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1차년도 구축을 2024년 8월에 착수하여 2025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1차년도 구축사업에서는 5개(국세청·고용부·복지부·교육부·대법원) 기관의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합격자 발표조회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40여 종을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기관에서 개별 제공 중인 40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인증 없이 한 번의 인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24 사용자의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UI/UX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에서 생체인증 간소화 및 발급 서류의 PDF 다운로드 기능 등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개선하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4-2-10]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사용자 화면(예시)



PC

모바일

3) 2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사업 기반 마련

통합창구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추진 예정인 2차년도 통합창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차년도 구축사업 연계 대상기관 8곳(행안부·농림부·국토부·경찰청·관세청·식약처·금융위·권익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창구 사업의 취지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4-2-11] 2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연계 대상부처 설명회('24. 3월)



또한 2차년도 연계 부처를 대상으로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서비스 및 각 기관에서 개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사전조사('24.8.1.~'24.8.31.)를 진행했으며, 부처별로 연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림 4-2-12] 2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관계 부처 회의('24. 9월)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행정안전부는 '1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사업'을 2025년 1분기까지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통합창구 서비스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연계를 행안부·국토부 등 8개 부처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등 통합창구의 기능을 개선하는 '2차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사업'을 2025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창구 구축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 접목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통합창구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는 국민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5. 정부 통합인증(Any-ID) 구축

디지털보안정책과 주무관 양 재 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추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 왔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원 인증 편의성 제고는 미국, 영국 등 디지털 선진국에서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며, 우리 정부 또한 민간 인증서 및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의 법적·기술적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민간 인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에도 익숙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에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²⁾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였고 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를 대상으로 2020년 간편인증을 시범적용하였다. 간편인증은 2024년 기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 있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21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2년) 구축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신원 증명수단 확대를 통하여 국민 편의 향상 및 기업측면에서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로그인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통합·제공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한 번의 로그인, 정부 통합인증(Any-ID) 구축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발생하던 인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통합인증(Any-ID) 구축사업’(2023~2024년)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포함한 여러 공공 웹사이트 간의 사용자 인증 체계를 통합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표준화된 화면(UI/UX)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서비스에서 체감하는 인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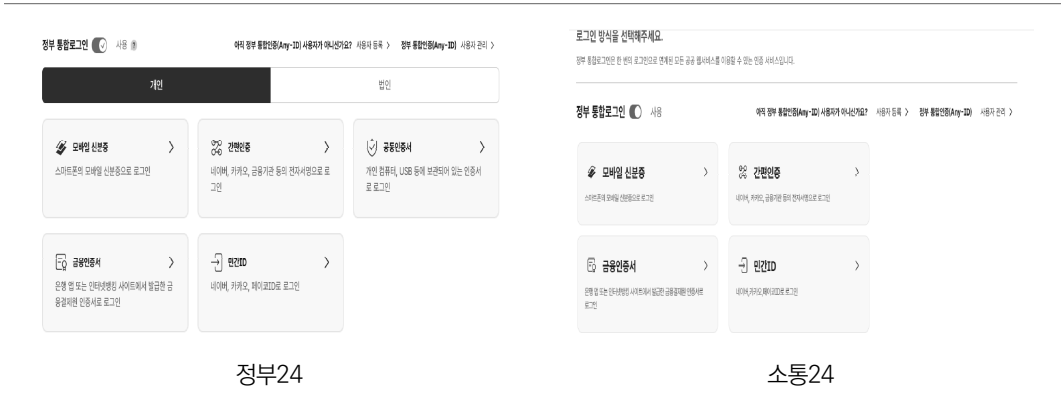
[그림 4-2-13]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정부 통합인증(Any-ID)



종전에는 공공서비스 이용 시, 웹사이트 간 이동할 때마다 매번 재인증을 요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각기 다른 인증 수단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도 컸다.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인증 화면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합 제공하며, 사용자 중심의 인증환경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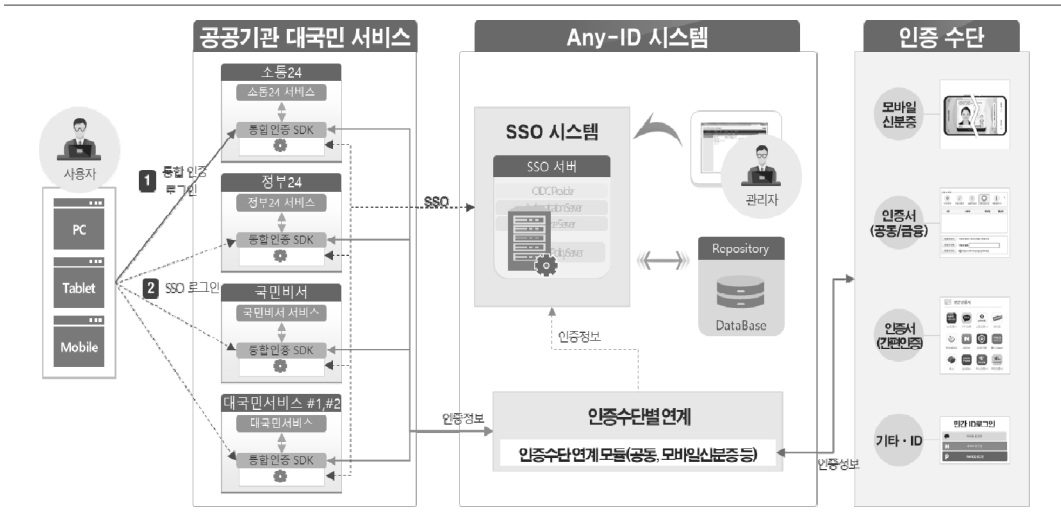
이를 통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네이버 등 민간 ID)을 선택하여 공공 웹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 입장에서라도 개별 인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2-14] 정부 통합인증(Any-ID)의 UI/UX



또한, 수많은 공공 웹-앱이 각기 다른 인증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이 여러 개의 인증 수단을 관리해야 했던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싱글사인온(SSO)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인증에 연계된 서비스 간에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정 시간(2024년 기준 30분) 동안 추가 인증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4-2-15]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싱글사인온(SSO) 개념



2) 정부 통합인증 연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통합인증 서비스의 효과적인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범·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기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4년 5월 21일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기존 수단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및 그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의 활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기술적 측면에서도 연계 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통합인증 개발지원센터’를 열고, 연계 신청부터 개발·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증 연계에 필요한 연계가이드, 통합인증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합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4-2-16] 정부 통합인증(Any-ID)의 UI/UX



정부 통합인증 개발지원센터

연계가이드 및 통합인증 SDK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는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대국민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목표로 「법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반이 되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인증으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2024년,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및 간편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약 50여 개 이상의 주요 공공서비스에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통합적인 인증 환경 제공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의 효과 및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선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모바일 신분증 확대

디지털보안정책과 주무관 김 형 범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진 반면에 기존 신분증은 실물 카드 형태로 별도 휴대하여야만 하고, 온라인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휴대폰 본인확인과 같은 별도의 신원인증 방식들을 사용해야 하는 등 국민 생활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소지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변조 및 도용 위험, 온라인 이용이 제약되는 현행 실물 신분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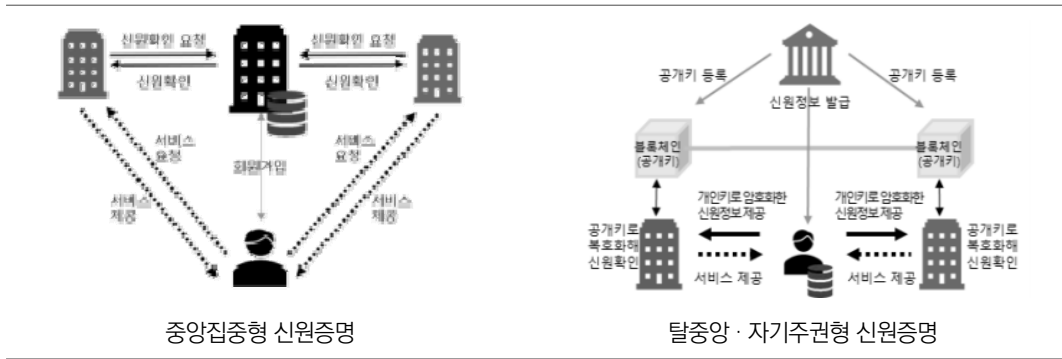
1) 중앙집중형에서 자기주권형 신원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휴대성과 편리성이 확대되는 신분증의 모바일·디지털화는 신원정보에 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정보를 본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원천 제거하였다.

또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체계(DID, Decentralized

Identifier Document)를 적용하여 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되 정부기관이 직접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공신력을 부여하였다.

[그림 4-2-17]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



2)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확대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2021년 1월부터 48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무원(기간제 공무원 포함)까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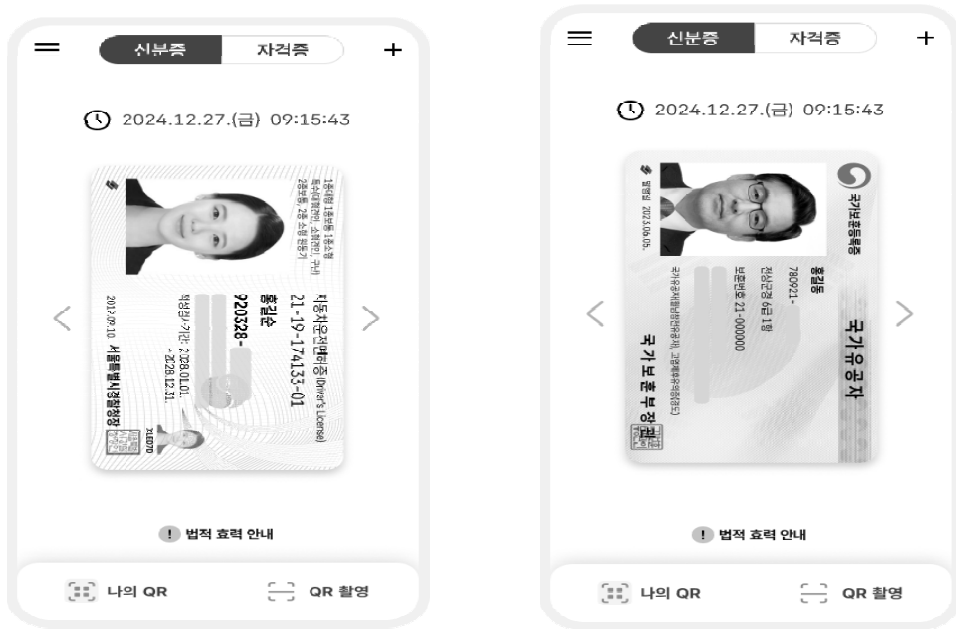
이를 통해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은 물론, 업무용 노트북 및 업무포털, 공직자 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증되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이슈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블록체인의 분산 신원증명구조 채택은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우 적합한 방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발급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하였다. 2022년 1월에는 2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을, 7월부터는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식 발급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유공자증 15종(독립·국가유공자증, 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 대상자증 등)을 IC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이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8월부터 정식 발급을 하고 있다.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그림 4-2-18]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재외동포청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도 2024년 7월부터 발급하였다. 그동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을 이용해 해외 휴대전화번호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 ‘아포스티유’ 등의 누리집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며, 향후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기존 신분증과 달리,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2025년 3월부터 전면 발급을 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온라인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4-2-19]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사용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4년 3월부터 민간 앱(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삼성월렛(국내 가입자 수 1,700만명)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삼성 월렛 앱을 통하여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보관되어,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6월에는 네이버, 카카오·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개방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25년 중 서비스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였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향후 다양한 디지털정부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을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트카 업체,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어 현대의 편리성을 넘어 비대면 산업·경제 전반에 폭넓고 혁신적인 편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발급에 이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까지 발급을 추진하고, 네이버, 카카오·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민간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서 민간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도록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7.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공공서비스혁신과 사무관 정 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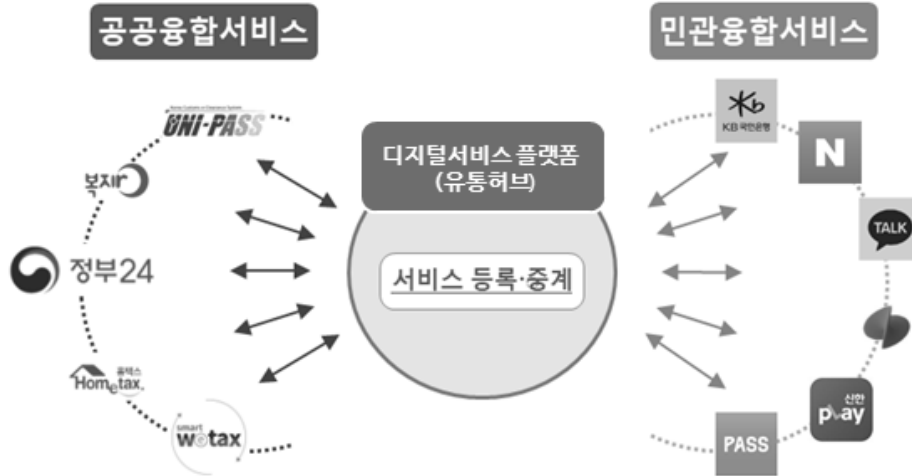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서비스와 민간의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경우 각각 따로따로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정보 및 접종일정을 확인 후, 예방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민간 지도앱에서 찾고, 예방접종 예약을 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로 정부에서만 제공되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하였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란, 전자적 대민서비스, 즉 디지털서비스를 공공의 앱·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2-20]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요도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이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로 서비스가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API의 등록·신청·이용을 중계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사무, 수혜적 서비스, 기타 공공서비스 중 이용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 이용빈도,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16종 개방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는 선도 서비스 8종을 개방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 개방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하였다. 여권 재발급, 예방접종 조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등 개방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16종을 선정하고,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 개방 완료하였다.

[표 4-2-4] 서비스 개통 현황(2024년)

연번	서비스 명	소관 기관
1	여권 재발급 서비스	외교부
2	예방접종 내역 조회	질병관리청
3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한국도로공사
4	119신고	소방청
5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병무청
6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병무청
7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한국장학재단
8	전기충전소 불편신고	한국환경공단
9	벌점감경교육 조회·예약	한국도로교통공단
10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공정거래위원회
11	분실물 찾기/신고	경찰청
12	숲e랑 예약	산림청
13	국립생태원 예약	국립생태원
14	책임서비스 이용증	국립중앙도서관
15	혜택알리미	행정안전부
16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행정안전부

2) 민간의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민간에서는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결합서비스도 창출하고 있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어 민간 지도앱과 전기차 불편 신고 공공서비스를 결합하여 지도앱에서 충전소 검색 및 고장 신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지갑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 결합하여 민간 자체 사진 사전검증 서비스 적용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모빌리티 앱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를 결합하여 종이고지서 대신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으로 푸시 알림을 받고, 예약 및 결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한 벌점 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 시험접수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방 확대하여 모빌리티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4-2-21] 서비스별 민간앱 이용화면



3) 개방 정책 다변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실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 및 민간기업은 신청을 탄력적·융통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간의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등 개방정책 다변화를 위해 개방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24-55호)

** 조항 신설: 디지털서비스 수시개방, 수요기관 수시신청, 행정기관 간 서비스 개방 제도(G2G)

이를 통해 개방 완료된 서비스 중 소관기관 협의를 통해 인천공항 지도서비스, 국립생태원 예약 등 수시개방 대상 9종을 선정하였고 민간은 수시개방 제도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既개방 서비스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권 재발급,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예비군동원훈련 조회 등 공공서비스 11종에 대한 민간앱 개통식(24.6.17.)을 개최하였고,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디지털서비스 개방 부스를 운영(24.11.13.~15.)하기도 했다.

[그림 4-2-22] 민간앱 개통식 / 박람회 개방 리플릿 배포



디지털서비스 민간앱 개통식



박람회 개방 리플릿 배포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24.9.30.~11.7.)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중요성과 이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홍보영상이 접수되었고,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와 청중평가단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행사에 활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4-2-23]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 추진하여 민관협업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75.7점으로 나타났으며,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의 만족도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별점감경 교육 예약,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서비스가 87.5점으로 높게 나왔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접근성”보다 “편의성”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예매·예약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이용 혜택 제공”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그 외에는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 확대 요구와 박람회 등 국민 참여형 행사 개최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홍보 강화 요구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총 88종의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목표를 두고, 국민 이용빈도가 높고 개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민간은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률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디지털지갑 서비스 구현

공공서비스통합과 주무관 황 종 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커머스,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는 개인의 관심사, 위치, 이용 이력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기관별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한적인 맞춤형 기능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국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고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필요한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흩어져 있는 공공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 디지털지갑'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디지털지갑은 행정정보와 공공서비스 이용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신원, 자격, 증명서 등 주요 개인형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4-2-24]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 개요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는 2023년 BPR/ISP 사업을 통해 예산, 인프라, 연계 콘텐츠 등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단계에 걸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에는 1차 구축사업으로, ▲ 디지털지갑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어서 ▲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공공마이데이터 등 행정안전부의 대표 개인형 콘텐츠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플랫폼 기반의 API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 공공 앱을 통해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UI/UX 구성과 서비스 메뉴 체계도 함께 마련되었다. 아울러, ▲ 2026년까지 연계할 수 있는 30여 개 이상의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선 연계 대상을 확정함으로써, 중장기 콘텐츠 확장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2차 구축사업으로 ▲ 정부24+ 앱에 정부 디지털지갑 탑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상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동시에 ▲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한 인프라 확장도 함께 ▲ 추가 콘텐츠 발굴도 병행하고 있으며, ▲ 12월 말 정식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대국민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정부 박람회 참여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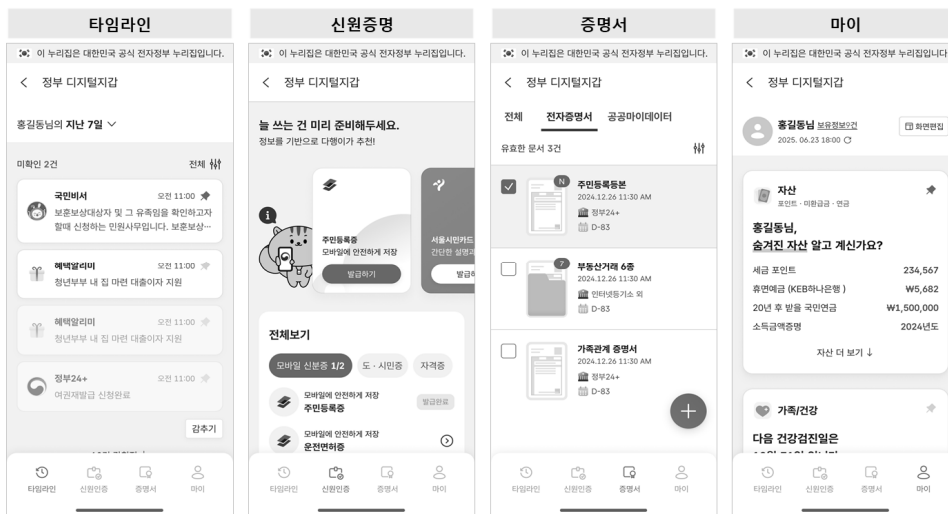
[표 4-2-5] 정부 디지털지갑 연도별 구현계획

구분		'24년(1차)	'25년(2차)	'26년(3차)
콘텐츠	제공 분야	알림(2), 발급(2) 분야 4개 (※ 민간개방 우선추진)	신원·자격(12), 정보조회(3) 분야 15개	신원·자격(4), 공공 예약(8), 정보조회(9) 분야 등 30개 및 추가발굴
	주요 콘텐츠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전자증명서 등	모바일신분증, 시·도민증, 자격증, (정부24)MyGov 등	관광증, 국립수목원·휴양림 예약, 책이음서비스 등
민간 개방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등 6개 민간사 개방 추진	우리은행, 삼성카드 등 4개 민간사 연계 예정	수요조사 예정(개방플랫폼)
공공 앱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앱 구현	콘텐츠 확대 및 운영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 디지털지갑은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통합하고, 민간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2-25] 공공 앱 서비스 화면(예시)



향후에는 단순 조회·저장 기능을 넘어, AI 기반의 서비스 자동 추천, 생애주기 맞춤형 알림, 간편 신청 연계 등 능동적이고 지능화된 서비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및 신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 나갈 것이다.

9.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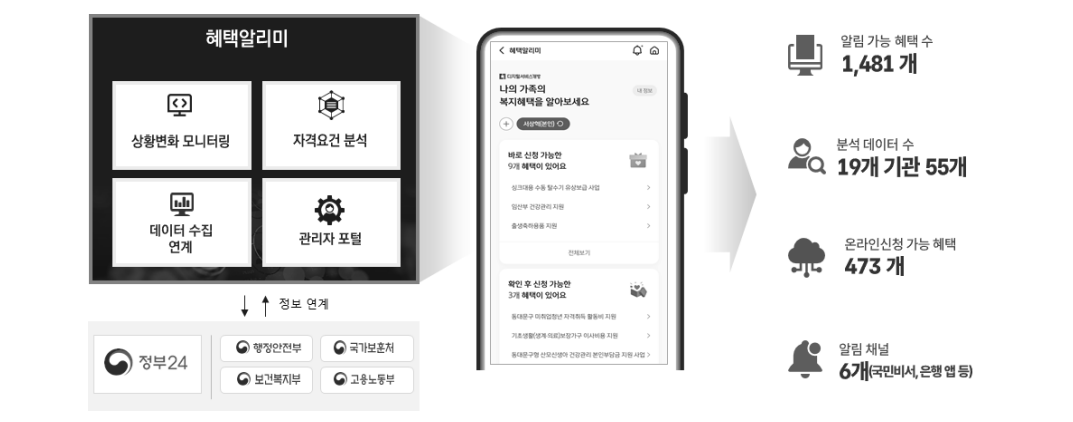
공공서비스통합과 전산사무관 국 정 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가 이를 몰라 신청 못하거나,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등 기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한, 국민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신청 자격요건과 내용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개인 상황변화를 정부가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4-2-26] 혜택알리미 서비스 현황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혜택알리미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출산·실업 등 개인 상황 변화가 감지되면 관련 공공서비스를 분석한 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혜택알리미가 이를 자동 감지하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혜택알리미는 복지부·고용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한 번에 안내하며, 최초 가입 후, 추가 접속하지 않아도 개인 상황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계속 안내한다는 점에서 타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앱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비서를 비롯해 신한·기업·하나·우리은행·웰로 앱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

[표 4-2-6] 공공서비스 알림체계 혁신 성과

기존 방식	혜택알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혜택 정보를 검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하지 않아도 알아서 혜택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가 복지혜택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혜택알리미가 직접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자동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포털에서만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민간 앱에서 모두 가입·이용 가능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총 175,408명의 국민에게 898,599건의 공공서비스를 맞춤 안내하였으며, 청년·임산부·구직자 등 정부 지원 필요 계층에게 활용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4-2-7] 혜택알리미 맞춤 안내 상위 10위

공공서비스명	안내 수	공공서비스명	안내 수
1. 국민내일배움카드	144,603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833
2.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46,653	7. 청년도약계좌	26,335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43,425	8. 청년내일채움공제	21,423
4.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6,116	9. 육아휴직급여	17,408
5. 스타트업 A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30,279	10. 국민취업지원제도	14,575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앞으로 혜택알리미에 AI를 적용하여 더 정확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 안내 추천 알고리즘 생성, ▲공공서비스 요약, ▲대상자 매칭, ▲맞춤 안내 큐레이션 등에 AI 모델을 접목하여 수혜 가능한 국민을 더욱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보수 비용과 업무 처리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주민과 지방행정사무관 최 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110년이 넘도록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방문 발급은 특히 업무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대기 시간과 교통비 같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디지털 행정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과제로 선정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는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사무는 민원인이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온라인 발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위확인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3. 12. 15.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24. 4. 30.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령안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2024. 9. 30.부터 정부24에서 시범 운영(한 달간)에 돌입했고, 11.1.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공동·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결합한 복합 인증 체계를 적용해 대리·사칭 발급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신청부터 발급, PDF 형태의 전자문서 생성 및 실시간 진위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발급 완료 시에는 국민비서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발급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16자리 문서 확인번호와 3단계 바코드를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보안성도 강화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국민과 관계기관들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각종 포스터, 리플릿, 옥외 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림 4-2-27]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홍보



2024. 11. 1.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이후 12. 31.까지 412,208통(전체 발급 통수의 1.4%)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다가, 2025. 6월 말 현재 온라인 발급 통수는 774,169통으로 전체 발급 통수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8] 2022~2025. 6.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연도	발급 통수 (통)			비고 (온라인 발급률)
	계	창구 발급	온라인 발급	
2025. 6.	15,036,470	14,262,301	774,169	5.1%
2024	29,845,452	29,433,244	412,208	1.4%
2023	29,835,740	29,835,740	-	
2022	30,749,261	30,749,261	-	

정부는 온라인 발급 비율 목표를 전체의 17%(약 5백만 통)까지로 잡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사람이 서류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24. 9. 30.)되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현재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보안성 강화와 기관 간 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로 법원, 등기소 및 금융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민원인들이 법원 및 금융 업무 이용 시에도 인감증명서 발급·제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1.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정원 운영

조직기획과 행정사무관 우 승 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협업별도정원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기존 별도정원제도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본부가 아닌 별도의 임시조직 신설을 통해 국가적 사업이나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 왔다. 이에 반해 협업별도정원제도는 각 부처 본부조직에서 수행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면 협업팀 구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24년 1월 국무총리 보고를 통해 협업별도정원 운영 규모를 승인받았고 「협업별도정원 세부운영지침」 및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등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추진해 왔다.

협업별도정원제도는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처와 인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분야 등에 필요한 과제 19개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 61명을 보강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소통·협력 강화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지원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해외우수인재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 「부처 위험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산사태 대응 범부처 사면정보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부처 간 기능 구분으로 인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과제를 발굴해 협업별도정원을 보강하였고 그 결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 특히 <산사태 대응 범부처 사면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은 청단위(산림청)가 주도하여 국토·농식·행안부와 협업한 사례로 <청>과 <부>단위 구분없이 <과제> 중심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성과를 얻었다.

2) 부처 간 <원팀>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생현안 해결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 「농어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형 외국인력 지원 협력」, 「구비서류 제로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조기에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과제 추진이 가능하였다.

[표 4-3-1] 국민안전·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19제 협업과제에 협업별도정원 보강

협업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대응	기재부	고용부·교육부
농어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형 외국인력 지원 협력	법무부	농식품부·해수부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	교육부	행안부·문체부·여가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국토부·환경부·과기정통부
구비서류 제로화	행안부	국세청·교육부·복지부·국토부
양자기술의 국방확산을 위한 협력 증진	과기정통부	방사청
혁신·신개발 의료기기의 특허, 허가, 연계, 신속 제품화 지원	식약처	특허청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위	고용부·행안부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금융위	행안부·농식품부
실(實)데이터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행안부	개보위·경찰청·소방청
산사태 대응 범부처 사면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산림청	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지원체계 구축	행안부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신속한 금융사기 피해 환급 및 예방체계 구축	경찰청	금융위·과기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외교부	기재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한반도 해양질서 협업체계 구축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외우수인재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	중기부	법무부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산업부	관세청
부처 위험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관세청	산업부·환경부·식약처
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	복지부	교육부·고용부

[표 4-3-2] 협업별도정원 세부 운영지침

- **(제도 개요)** 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원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처 간 협업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긴급한 협업직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 간 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지원하는 제도
- **(운영 원칙)**
 - (규모) 총 100명 규모, 4·5급 이하,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 파견
 - (운영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 **(운영절차)**
 - (각 부처) 협업직무 발굴 및 협업별도정원 요구
 -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협업직무를 발굴하고 협업 주관부처에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협업별도정원으로 요구
 - (행정안전부) 협업직무 지정 및 인력지원
 - 부처에서 제출한 협업직무 및 인력을 검토하여 협업별도정원으로 신속 보강
 - (인사혁신처)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
 - 행정안전부 별도정원 인정 통보 후 주관부처는 인사혁신처에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공문 발송 →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 승인

[그림 4-3-1] 협업별도정원 카드뉴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과제해결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원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협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별도정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산사태 대응 범부처 정보활용체계 구축 등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했으며,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제해결형 조직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도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

2. AI 자동회의록 도입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주무관 이 초 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확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행정기관의 회의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간 약 10만 건의 영상회의가 진행되며, 오프라인 회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크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참석자는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회의록 작성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수기나 단순 필기 방식으로 작성된 회의록은 내용의 정확성과 접근성 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구축

AI 자동회의록은 회의 녹화 영상이나 녹음 파일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회의 내용을 시간순·참석자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1시간 분량의 회의도 약 5분만에 회의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의 핵심은 회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Speech-to-Text) 기술과 각 화자의 음성을 식별하는 화자 분리 기능에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유형의 회의 자료를 활용해 민간 솔루션의 성능을 검증했다. 검증은 음성 인식 정확도, 화자 분리, 처리 속도, 시스템 안정성 등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회의 음성파일로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증 결과, 최고의 성능을 보인 솔루션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솔루션에 텍스트 분석 기능과 한글 보고서 형식 제공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텍스트 분석 기능은 핵심 키워드 추출, 주요 의사결정 요약, 감성분석 등을 통해 회의록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림 4-3-2]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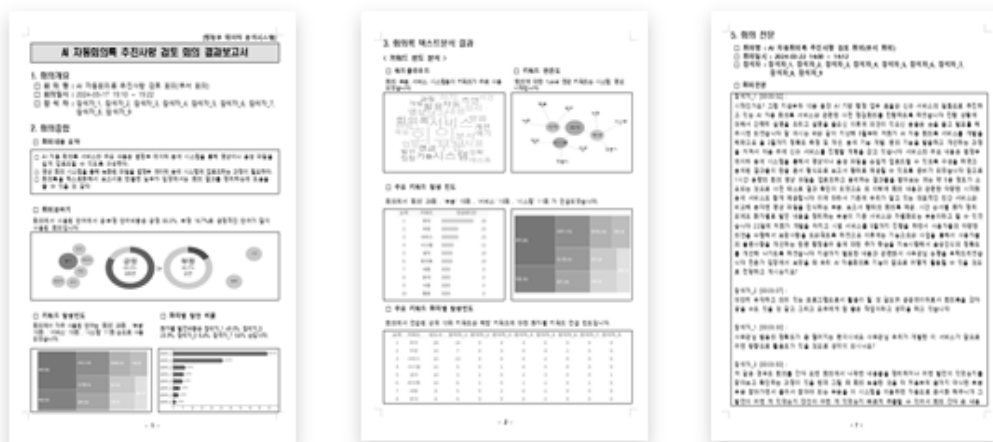


회의 종합의견

텍스트 분석

감성분석

[그림 4-3-3] AI 자동회의록 한글보고서 제공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2)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활성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직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2일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를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했다. 이 시스템은 행정망과 인터넷망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지원 플랫폼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AI 자동회의록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기능, 기대 효과를 널리 알리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시스템 내 홍보 배너를 통해 서비스 특징과 활용법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리고, 실습교육과 유튜브 강의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림 4-3-4]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개시 홍보

아시아투데이

행안부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시범운영

10월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

1시간 분량 회의도 인공지능(AI)이 5분 만에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서비스가 일선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회의는 연간 약 10만건으로, 일일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AI 자동회의록 작성 서비스는 회의 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한 뒤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한다.

1시간 분량의 회의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데까지 약 5분이 걸린다.

AI 기반 문서 인식 서비스도 도입된다. AI 답러닝 기반의 광학문자인식(OCR)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배너 게시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2024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AI-데이터특별관 부스를 통해 서비스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3일간 약 1,500명의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같은 활동은 정부와 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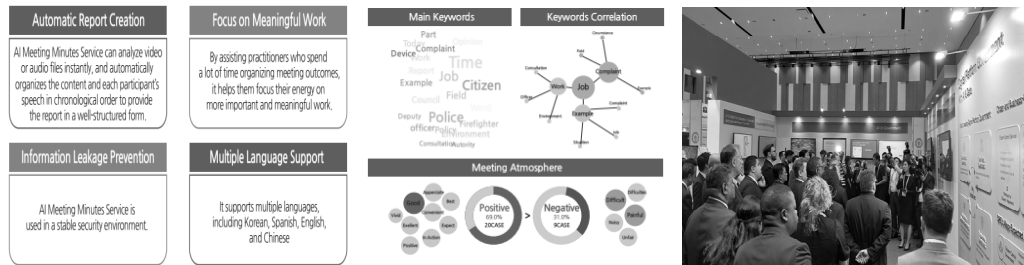
[그림 4-3-5] 2024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AI·데이터특별관 부스 운영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UN공공행정포럼을 통해 해외에도 홍보되었다. UN공공행정포럼(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 UNPSF)은 유엔 공무원 및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 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그리고 공공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국제 포럼이다.

2024년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UN공공행정포럼에서는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했다. 영문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VIP와 주요 기관 관계자에게 정부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렸다.

[그림 4-3-6] UN 공공행정포럼 부스 운영



다. 평가 및 발전방안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출시 100일 만에 3,800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보안 환경과 쉬운 사용법도 서비스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심사·심판 업무나 회의가 잦은 기관에서 서비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음성 인식 정확도는 파일 음질에 따라 97~99% 수준이며, 공공행정 특성을 반영해 행정 용어 중심의 음성 학습을 지속함으로써 인식률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반복 업무의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여 실무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데이터 패키지·통합 제공

공공데이터관리과 전산사무관 임 용 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자체 등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형태로 기관 자체 개방포털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이다. 공공데이터 패키지·통합 제공 사업(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통합데이터를 연계하여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23년에 시범 개방한 3개 자치단체(서울·대전·세종) 공유자전거 데이터 외 추가 참여 자치단체 발굴 및 협의('24.3.5.~3.12.) 하였고, 자치단체 수요조사(2.27.~3.8.) 및 자체 회의 등을 통해 2024년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후보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네이버 지도(4.24.), 카카오모빌리티(5.2.), T맵모빌리티(5.9.), 민관 자문회의(5.16.) 등을 통해 민간과의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유 및 통합 개방을 위한 데이터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17개 시도협의체를 통해 개방 후보과제에 대한 설명, 자치단체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및 전체 자치단체 참여도 조사(5.30.~6.10.)를 실시하였다.

[그림 4-3-7] 민·관 자문회의('24.5.16.)



[그림 4-3-8] 17개 시·도 협의회('24.5.23.)



아울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7.3.)하였고, 자치단체 참여도, 전문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 과제를 확정(7.4.)하였다.

2024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으로 ▲전국 공유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공유자전거의 실시간 정보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개, 기초 7개)로 확대하여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였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였다.

*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개, 기초 25개)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하였다.

4)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광역 1개, 기초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통합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방 중인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하여 일관된 형태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통합데이터를 오픈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 운영으로,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고도화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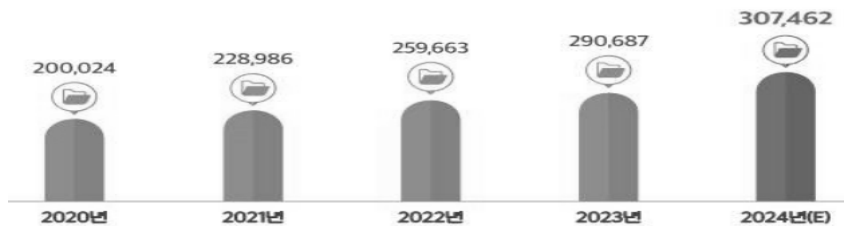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주무관 정 선 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0조 7,46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5.8% 확대되는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11.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데이터 활용이 커지면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림 4-3-9]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20 ~ '24)

(단위 : 억 원)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2013년 서비스 오픈 이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생성·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정부 데이터 제공 시스템으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 왔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97,826건에 달하며, 이를 활용한 웹·앱 서비스는 3,11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4-3-10]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부동산 플랫폼 '직방'

- 국토부 부동산 기초자료, 실거래가 정보 활용
- 유니콘기업 (1조 가치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중고차 거래 'SK엔카'

- 국토부 자동차 종합정보 활용
- 자동차 중고거래 관련 주요 이력 정보 제공



병원 예약 '굿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보험데이터 활용
-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 실시

날씨정보 '케이웨더'

- 기상청 중기예보, 기상특보 정보 활용

Encar



IV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히 최근에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러한 기술 흐름에 발맞춰 공공데이터포털도 AI를 도입하여 데이터 검색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 대국민 개방 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 간 데이터 연계 또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예산 68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2차 사업(예산 51억원)을 거쳐 2026년 6월 고도화된 포털 서비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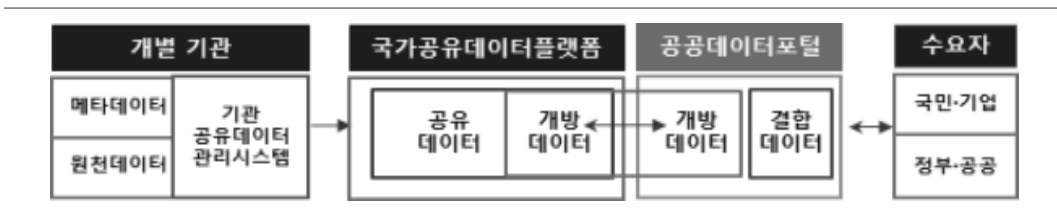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체계 일원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관리·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허브를 활용하여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 간 연계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연계 체계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중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을 거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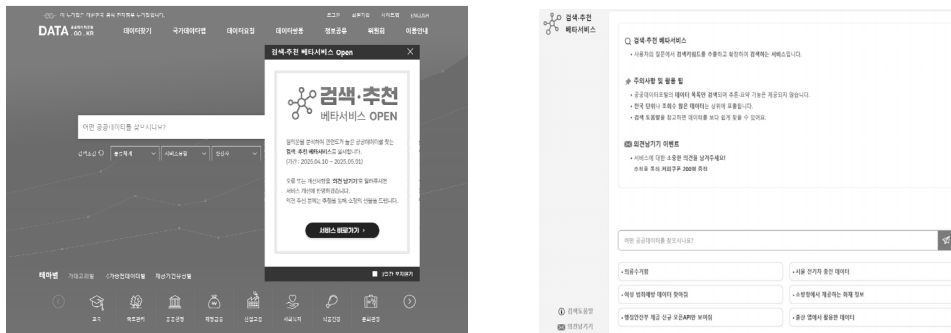
[그림 4-3-11]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연계 체계



2) 공공데이터포털 검색·추천 개선을 위한 베타서비스 추진

공공데이터포털의 개체 간 정보(제공기관, 활용사례, 데이터 간 연관도 등)를 활용하여 데이터 검색·추천 기능 개선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추천 베타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사용자의 활용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4-3-12] 검색·추천 베타서비스



베타서비스의 사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검색·추천 서비스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1차 사업에서 구축한 검색·추천서비스 베타서비스에 대형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과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벡터 DB를 추가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데이터 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LLM은 포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활용될 것이며, 자연어 형태의 질문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사용자 수준에 맞는 자연어 기반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 의미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고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목록명, 설명정보 등 메타정보를 벡터 DB로 구축하고 RAG 기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GPU 등 관련 인프라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된 AI 기반 서비스와 인프라는 데이터 검색·추천 외에도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입력 시 메타정보 증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데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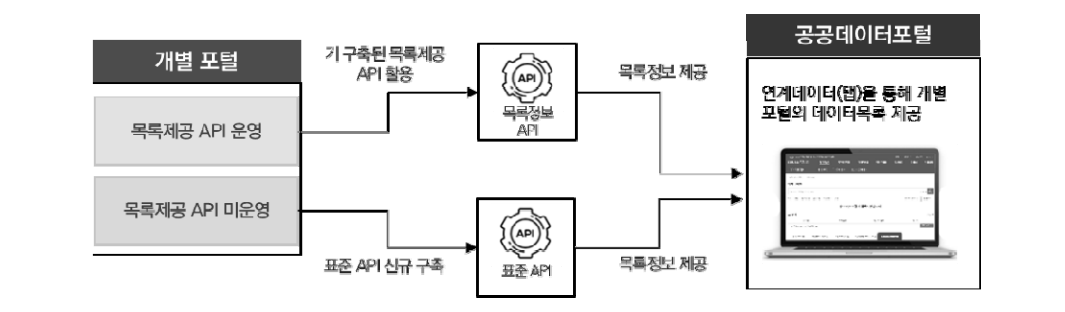
3) 개별 데이터포털 연계

공공데이터포털 외에, 각 기관에서는 별도로 기관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포털(이하 '개별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개별 포털은 총 125개로, 개별 포털에서 별도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에 따라 최상위 플랫폼인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동일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이 중 18개 포털만이 API를 통해 자동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개별 포털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수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계·제공 데이터의 누락 및 실시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5개 개별 포털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을 API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동 연계되도록 표준API를 제작하였다. 고도화 2차 사업에서는 각 기관에 표준API를 배포하여 개별 포털과 데이터 목록을 연계할 계획이다.

[그림 4-3-13] 개별 포털 연계 구성방안



4) 노후 인프라 재정비

공공데이터포털은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도화 사업에서는 포털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동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능형 클라우드 S존으로 서비스 및 데이터 이관도 병행 추진하여 자원사용량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개방을 위해 기관 간 공유체제와 대국민 개방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데이터 개방과 공유 업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고도화 2차 사업에서는 플랫폼 간의 연계 최적화,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개방·공유 일원화 체계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선 역시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이다. 자연어 기반 질의해석, 의미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검색 기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데이터 활용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차 사업에서는 검색·추천 뿐 아니라, 포털 서비스 요소마다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능형 클라우드로 전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서비스 안정성과 장애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동화된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보다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4

행정안전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